

제7차(200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남재량·성재민·이상호  
최효미·신선옥·석상훈

# 목 차

요 약 .....	i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의 개요 .....	13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	13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	17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17
2. 설문내용 .....	20
제3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	25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 .....	25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	30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33
1. 응답 가구의 특성 .....	33
2. 조사성공 가구원의 특성 .....	38
제5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42
1. 이사 가구의 특성 .....	42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	48
3. 비성공가구의 특성 .....	45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	47
제6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	48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	49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	50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	51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	53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	53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	58
1. 가구주의 특성 .....	58
2. 가구원의 특성 .....	60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	62
제4절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	65
제4장 가계 경제 .....	69
제1절 가계소득 .....	69
1. 가구의 총소득 .....	70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75
제2절 가계소비 .....	77
1. 생활비 .....	78
2. 저축 .....	83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	87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	87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	90
제4절 자산 및 부채 .....	94
1. 부동산자산 .....	94
2. 금융자산 .....	97
3. 가구의 부채 .....	100
제5장 자녀 교육 .....	104
제1절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	106
제2절 자녀교육에 따른 지출비용 .....	114
1. 가구의 총 지출비용 .....	114
2.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	119

제6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	123
제1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124
1. 경제활동상태 .....	124
제2절 취업자의 특성 .....	131
1. 산업별·직업별·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	131
제3절 미취업자 .....	137
1. 구직활동 .....	137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	140
제7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	145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	146
제2절 근로시간 .....	149
1. 평균근로시간 .....	150
2. 초과근로시간 .....	153
제3절 임금 .....	154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	154
2. 월평균 임금 .....	157
제4절 노동조합 .....	163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 .....	164
1. 비정규직의 규모 .....	165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167
제8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168
제1절 종사상 지위 .....	169
제2절 근로시간 .....	171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	171
2. 주당근로시간 .....	173
제3절 근로소득 .....	176

제4절 사업체의 창업 .....	179
제9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조직 몰입, 건강과 생활 .....	181
제1절 생활 만족도 .....	182
제2절 직무 만족도 및 불일치도, 조직몰입 .....	187
1. 직무 만족도 .....	187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	192
3.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	195
제3절 생활과 건강 .....	198
제10장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	203
제1절 근로시간 .....	204
1. 근무시간의 결정 .....	204
2. 근로의 준비, 대기, 휴식시간 .....	208
3. 휴무와 휴가 .....	209
4. 일상에서의 시간 배분 .....	212
5. 법정근로시간 단축 .....	218

## 표 목 차

<표 2-1> 1~7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5
<표 2-2> 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8
<표 2-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7차년도 응답 결과 .....	9
<표 2-4> 7차년도(2004년) 설문 내용 .....	2
<표 2-5> 7차년도(2004년) 설문 내용(계속) .....	3
<표 2-6>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7
<표 2-7>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7
<표 2-8>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	31
<표 2-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	32
<표 2-10> 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	3
<표 2-11> 소득분위별 1~7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원가구 대비) .....	3
<표 2-12> 1~7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	3
<표 2-13> 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	8
<표 2-14> 1~7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	4
<표 2-15> 7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	5
<표 2-16> 7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	6
<표 2-17>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사례 수 .....	5
<표 2-18> KLIPS의 가중치 변수명 .....	52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	54
<표 3-2> 연도별 세대구성 변화 추이 .....	55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	57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60
<표 3-5> 1~7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61
<표 3-6> 2~7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	63
<표 3-7> 2~7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	64
<표 3-8>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	66

<표 3-9> 따로 사는 부모님의 생존 여부 .....	66
<표 3-10>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	67
<표 3-11>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	68
<표 3-12> 따로 사는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혹은 받는 금액 .....	68
<표 4-1>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 .....	71
<표 4-2>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	73
<표 4-3> 7차년도 가구유형별 빈곤율 .....	74
<표 4-4>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	76
<표 4-5> 1~7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	79
<표 4-6>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	79
<표 4-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	82
<표 4-8> 1~7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	83
<표 4-9>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	85
<표 4-10> 1~7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	88
<표 4-11> 1~7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	91
<표 4-12>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95
<표 4-13>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	96
<표 4-14>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97
<표 4-15>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	99
<표 4-16> 부채잔액 분포 .....	100
<표 4-17>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잔액 분포 .....	101
<표 5-1> KLIPS 7차년도 채수생 이하 자녀의 교육관련 측정항목 .....	105
<표 5-2> KLIPS 7차년도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관련 측정항목 .....	105
<표 5-3> 가구 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 .....	107
<표 5-4>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 .....	108
<표 5-5>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가구 특성 비교 .....	110
<표 5-6>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어머니 특성 비교 .....	111
<표 5-7> 연령별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여부 .....	112
<표 5-8>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종류 .....	113
<표 5-9> 가구 특성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	115
<표 5-10>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비용 .....	115
<표 5-11> 재수생 이하 자녀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118
<표 5-12> 대학(원)생 자녀의 1인당 월평균 교육비 .....	119
<표 5-13> 재수생 이하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	120
<표 5-14>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	120
<표 5-15> 재수생 이하 자녀 가구의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경제적 부담정도 .....	121
<표 5-16> 대학(원)생 자녀 가구의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경제적 부담정도 .....	122
<표 6-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 1998~2004년 .....	3
<표 6-2> 경제활동상태비교 : 1998~2004년 .....	3
<표 6-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998~2004년 .....	7
<표 6-4> 연령별 실업률 : 1998~2004년 .....	8
<표 6-5> 경제활동상태의 이동 .....	129
<표 6-6> 6차년도 → 7차년도 성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	130
<표 6-7> 노동패널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4년 .....	3
<표 6-8>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4년 .....	3
<표 6-9>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4년 .....	3
<표 6-10>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4년 .....	3
<표 6-11>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 2004년 .....	5
<표 6-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2004년 .....	6
<표 6-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 2004년 .....	7
<표 6-14> 연령별 구직방법 : 2004년 .....	10



<표 6-15> 교육수준별 구직방법 : 2004년 .....	10
<표 6-16>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	
1998 ~ 2004년 .....	1
<표 6-17>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	
1998 ~ 2004년 .....	1
<표 6-18>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 : 2004년 ..	12
<표 6-19>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	142
<표 6-2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	144
<표 7-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년 ~ 2004년 .....	4
<표 7-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	148
<표 7-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1998년 ~ 2004년 ..	6
<표 7-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2004년 .....	11
<표 7-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152
<표 7-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2004년 ..	12
<표 7-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	154
<표 7-8>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지급방법 : 2004년 .....	15
<표 7-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여부 : 2004년 .....	16
<표 7-10>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	158
<표 7-11> 임금소득분배 추이 .....	159
<표 7-1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임금 : 2004년 .....	160
<표 7-1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	161
<표 7-14>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	162
<표 7-15>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비노조 가입자의 노조 비가입 이유 :	
2004년 .....	14
<표 7-1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	165
<표 8-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년 ~ 2004년 .....	8
<표 8-2> 1~7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	19

<표 8-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	170
<표 8-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근로일수 .....	172
<표 8-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근로시간 .....	174
<표 8-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	174
<표 8-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	175
<표 8-8> 연도별 월평균소득 비교 .....	177
<표 8-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명목소득 : 2004년 .....	178
<표 8-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소득 : 2004년 .....	179
<표 8-11>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	180
<표 8-12>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	180
<표 9-1> 항목별 생활 만족도 분포 : 2004년 .....	186
<표 9-2> 항목별 직무 만족도 분포 : 2004년 .....	189
<표 9-3>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 : 2004년 .....	193
<표 9-4>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불일치 결과 : 2004년 .....	193
<표 9-5>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 : 2004년 .....	194
<표 9-6>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점수 결과 : 2004년 .....	197
<표 9-7> 인구학적 특성별 전반적 건강상태 : 2004년 .....	199
<표 9-8> 건강상태별 진단경험 및 장애/육체적 제약 여부 : 2004년 .....	200
<표 9-9> 가구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 : 2004년 .....	200
<표 10-1>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	204
<표 10-2> 특성별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	205
<표 10-3>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규칙성 여부 .....	206
<표 10-4> 업종별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규칙성 .....	207
<표 10-5>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이유 .....	207

<표 10-6>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이유 .....	207
<표 10-7>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쉬는 임금근로자의 정기 휴무일 전날 근무형태 .....	210
<표 10-8> 법정 공휴일 중 임금근로자 실제 쉰 날 .....	211
<표 10-9> 법정 공휴일 중 비임금근로자 실제 쉰 날 .....	211
<표 10-10> 누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했는지 .....	27
<표 10-11>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	29
<표 10-12>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	20
<표 10-13>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고 본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들의 비중 .....	224
<표 10-14> 토요일근무 변화여부별 2003~2004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 .....	225
<표 10-15> 토요일근무 변화여부별, 사업장 규모별 2003~2004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 .....	226
<표 10-16> 분위수별 주당근무시간 변화 .....	27
<표 10-17> 근로시간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화 .....	28
<표 10-18> 늘어난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와 보내고 싶은지 .....	229

## 그림목차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의 평균방문횟수 .....	2
[그림 2-2] 시기별 조사진행 정도 .....	2
[그림 2-3]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	3
[그림 2-4]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	3
[그림 2-5]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추이 .....	4
[그림 2-6] 7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	3
[그림 2-7] 7차년도 비원표본가구수 .....	4
[그림 2-8]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	4
[그림 2-9] 비성공 사유 .....	4
[그림 2-10]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2~7차년도) .....	4
[그림 3-1] 7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수 .....	5
[그림 3-2] 7차년도 3세대가구의 지역별 비중 .....	7
[그림 3-3] 7차년도 성·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	5
[그림 3-4] 사망자의 사망원인 .....	4
[그림 4-1] 7차년도 성별·경제활동상태별 가구 총소득 .....	7
[그림 4-2] 7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	7
[그림 4-3] 7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	7
[그림 4-4] 7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생활비 .....	8
[그림 4-5]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요 생활비 .....	8
[그림 4-6] 1~7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	4
[그림 4-7] 7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	6
[그림 4-8] 7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저축액 .....	6

[그림 4-9] 7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	8
[그림 4-10] 7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	89
[그림 4-11] 7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	99
[그림 4-12] 7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	29
[그림 4-13] 7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	98
[그림 4-14] 7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	39
[그림 4-15] 7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	59
[그림 4-16] 2~7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	89
[그림 4-17] 7차년도 가구의 거주지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	9
[그림 4-18] 7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	9
[그림 5-1] 학력별 사교육 이용종류 .....	18
[그림 6-1] 최근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 2000~2004년 .....	18
[그림 6-2] 최근 5년간 실업률 비교 : 2000~2004년 .....	21
[그림 6-3]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7차년도 .....	131
[그림 6-4]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 2004년 .....	3
[그림 6-5]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2003년 .....	9
[그림 6-6] 성별·근로시간형태별 평균희망임금 .....	143
[그림 7-1] 임금근로자의 학력분포 .....	17
[그림 7-2]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 .....	17
[그림 7-3]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을 받는 사람의 비중 추이 : 2004년 .....	6
[그림 7-4] 임금근로자의 유노조비율 및 노조조직률 : 1998~2004년 .....	31
[그림 7-5]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	16
[그림 7-6]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	17
[그림 8-1] 1~6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18

[그림 8-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 차액 비교 ..... 17

[그림 9-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1998~2004년 ..... 21

[그림 9-2]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 23

[그림 9-3]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 24

[그림 9-4]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4년 ..... 28

[그림 9-5] 경제활동상태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4년 ..... 28

[그림 9-6] 항목별 생활 만족도 점수 비교 : 2004년 ..... 28

[그림 9-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1998~2004년 ..... 28

[그림 9-8]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1998/2004년 ..... 28

[그림 9-9] 성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4년 ..... 29

[그림 9-10] 고용형태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4년 ..... 29

[그림 9-11] 산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4년 ..... 29

[그림 9-12] 직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4년 ..... 29

[그림 9-13]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4년 ..... 29

[그림 9-14] 직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4년 ..... 29

[그림 9-15] 직업별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점수 비교 : 2004년 ..... 29

[그림 9-16]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 : 2004년 ..... 29

[그림 9-17]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 : 2004년 ..... 29

[그림 10-1] 임금근로자의 근로준비, 대기 및 휴식시간 ..... 28

[그림 10-2]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준비, 대기 및 휴식시간 ..... 29

[그림 10-3] 임금근로자의 정기적으로 쉬는 요일 ..... 29

[그림 10-4] 15세 이상 개인의 항목별 시간배분 : 평일 ..... 29

[그림 10-5] 취업자의 성별 평일 항목별 시간배분 ..... 29

[그림 10-6] 실업자의 성별 평일 항목별 시간배분 ..... 29

[그림 10-7] 50세 이상 고령자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일 항목별  
시간배분 ..... 215

[그림 10-8] 토요일 항목별 시간배분 ..... 29

[그림 10-9] 일요일 항목별 시간배분 ..... 29

[그림 10-10] 조사일 직전 주의 여가활동 .....	1
[그림 10-11]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	2
[그림 10-12] 업종별 정규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	2
[그림 10-13]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	2

##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 7차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기존의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노동시장의 정태적인 측면뿐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사는 1998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4년의 제7차 및 2005년의 제8차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고 2006년 현재 제9차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7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1~6차 조사 결과와도 비교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 표본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지난 제6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의 77.2%를 조사하는 데에 성공하여 패널조사로서 생명력을 잘 유지해왔다. 이번 제7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로서 지난 조사에 이어 표본유지율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성과는 미국의 PSID나 영국의 BHPS 등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보다 더 우수한 성과로 KLIPS의 장기 전망을 밝게 한다.

KLIPS는 이러한 양적인 성과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상의 어려움을 직접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가 하면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철저



히 하고, 학술대회를 통한 추가적인 자료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단계에 걸친 강화된 검증 과정을 통해 KLIPS의 품질이 더욱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자료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제6회 학술대회에서는 특별분과(special session)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는 패널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를 보다 풍부하고 엄밀하게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KLIPS의 활용을 제고함과 함께 KLIPS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여 KLIPS 사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FAQ는 노동패널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패널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질문들을 29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여 책자를 발간하였고,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FAQ에는 답변 내용을 SAS와 SPSS로 작성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FAQ의 문항을 더욱 늘려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KLIPS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KLIPS는 개방성(openness)을 지향하고 있다. 노동패널 자료 사용자들의 망설임 없는 문제제기가 KLIPS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료 사용자 여러분의 질책과 함께 성원을 기대한다.

## 제 1 장

## 머리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7차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기존의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 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4년에 제7차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sup>1)</sup> 이 보고서는 일곱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7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1~6차 조사 결과와도 비교하고 있다.<sup>2)</sup>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지난 제6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의 77.2%를 조사하는 데에 성공하여 패널조사로서 생명력을 잘 유지해 왔다.

이번 제7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이다. 이는 지난 제6차 조사에 이어 매우 성공적인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

1) 2005년 10월 현재 제8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 조사 역시 매우 성공적이다.

2) 각 연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해당 연도의 기초분석보고서를 찾아보면 된다.

## 2 제7차(200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에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가 거듭됨에 따른 패널의 피로증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이며, 미국의 PSID나 영국의 BHPS를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에 필적할 수 있는 장기 패널조사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0년이나 20년 혹은 그 이상 패널조사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패널팀원들이 실제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입력단계를 마친 자료상의 오류들을 다시 걸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학술대회용으로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사용한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문제제기와 조언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또 한번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5년 2월 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총 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3편의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제6회 학술대회는 많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어 노동패널자료의 질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명실 공히 양과 질 모두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패널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석 기법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제6회 학술대회는 특별 분과(special session)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패널분석 방법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강연은 많

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노동패널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동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들이 다시 노동패널조사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노동패널조사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노동패널조사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사 자료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FAQ는 노동패널 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패널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29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두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더구나 FAQ는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SAS와 SPSS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자료 사용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FAQ의 문항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자료 사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동패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 조사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된다.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시장 이동 등 다양하다.

부가조사는 3차년도(2000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 30세 미

#### 4 제7차(200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다. 4차년도(2001년)에는 ‘건강과 은퇴’를 주제로 만 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들이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만 45세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개인과 은퇴하지 않은 개인으로 나누어 은퇴생활 및 은퇴계획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7차년도(2004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일자리에서의 시간배분과 결정과정, 휴가, 일상에서의 시간배분과 여가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sup>3)</sup>

본 보고서의 구성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7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 및 제5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 가계 경제 및 자녀의 사교육과 보육에 대해 다룬다. 제6장부터 제9장까지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6장은 개별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7장과 제8장은 각각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제9장은 생활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10장은 부가조사 결과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7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응답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분가가구와 신규조사자의 특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개요를 다루고 있다. 7차년도 조사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863가구 및 분가한 899가구를 합하여 총 4,76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3%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개인응답자는 전체 11,661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217명,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이 444명이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표본유지율과 더불어, 조사상의 질적 측면도 한층 더 향상되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역간 조사성공률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응답자 본인에 대한 면접이 아닌 대리응답이나 전화·유치조사 등의 비율도 10%

3) 8차조사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을 다루며, 제4절에서는 비동거부모와의 교류와 관련된 특성을 알아본다.

우선 가족구성을 보면 7차년도에 조사된 평균 가구원수는 3.2인이며, 4인 가족(3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로는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7.7%로 2/3 가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며, 핵가족화의 진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구성은 40~70대 초반 남성의 90% 이상이 가구주라고 응답하여 여전히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남성중심의 가계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15세 이상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41.1세로 1차년도(39.2세)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동거 부모와의 왕래 및 경제적 교류 측면에서는 주로 가구주(남자쪽) 부모와의 교류빈도가 배우자(여자쪽) 부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7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1절은 가계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의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7차년도 연간총소득은 2,907만원(월평균 24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만원 늘어났으며,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6차년도에 비해 72만원 증가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달하는 절대빈곤의 비중은 2차년도 조사(1998년)에서 25.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1년에는 17.3%까지 하락하였으나, 2002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2년 17.6%, 2003년 18.3%를 나타냈다.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도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 당시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율보다 7.5%포인트 낮은 18.4%이지만 1999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3년에는 22.5%에 이르고 있어, 소득분배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12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목별로는 2~6차년도 기간 동안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7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4.9%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2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가구의 경우 1차년도 당시 저축을 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 그치고 있으나,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3차년도에도 1차년도보다 3.4%포인트 증가한 18.9%로 나타나고 있으며, 7차년도에는 이들의 비중이 37.5%까지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저축률의 회복이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6.8%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0.6%) 당시보다 약 6.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잔액도 1차년도 773만원에서 7차년도 1,227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실태와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절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구 및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가구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시설 이용률을 살펴보고,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다. 또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와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특성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2절은 자녀 교육에 따른 가계의 총 지출비용을 가구 및 어머니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녀의 학력별 1인당 지출금액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분석한다.

7차년도 조사 가구 중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상 가구의 71.3%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는 가구의

특성 및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수가 2명인 가구와 가구원이 4명인 가구, 핵가족 가구,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고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을 할수록 이용률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생 이하 자녀 1인당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월평균 지출비용은 16만4천원이며, 자녀의 학력별로는 미취학아동 11만7천원, 초등학생은 16만9천원, 중학생 19만1천원, 그리고 고등학생 2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학(원)생 1인에 대해 월평균 등록금 33만7천원과 그 외 지출비용으로 29만원을 지출하였다.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유형으로는 미취학아동은 탁아서비스, 학원, 학습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은 학원·학습지·과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가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해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66.2%가, 그리고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58.9%가 자녀 교육에 따른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부담의 정도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제6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 기간<sup>4)</sup>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노동패널조사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는

4) 조사일 바로 전 일주일의 조사대상 기간이다.



나와 없느냐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04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패널에서 56.6%로서 통계청 61.0%보다 낮게 나타난다. 다만 두 조사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 추세는 매우 유사하다. 두 자료는 가구 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 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를 상회하는 원표본가구 이탈률에도 불구하고 노동패널조사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대표성 있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개인 표본수를 비교할 때 경활조사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자 수와 같이 표본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 지표들은 해석상의 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제7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7차년도에는 전체 4,257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68.2%에 이른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졸자로 34.4%를 차지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0대가 26.6%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23.6%)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가사서비스업은 1.5%로 매우 낮았다. 여성의 경우에도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37.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2%)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생산직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28.2%)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분포에 비해 사무직(21.6%), 서비스직(23.7%)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4.9%)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8.2%)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자. 1998년 임금근

로자들은 52.3시간을 근무하였으나, 7차년도인 2004년에는 50.0시간만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 통계조사」 결과에 비해 약 5시간 가량 길지만,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하다. 한편, 임금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7차년도에 25.1%로 나타나, 6차에 이어 7차에도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은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성과급제의 적용 비중이 1998년(17.4%)부터 2000년(11.6%)까지는 감소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는(17.1%) 이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실질 임금은 1차년도 조사(114만5천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05만6천원)에서 9만원 가량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에 109만6천원, 4차년도에 116만2천원, 5차년도에 123만1천원, 6차년도에 130만8천원, 그리고 7차년도에 13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임금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결과, 3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지니계수가 꾸준히 상승해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절은 유노조비율과 노조조직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하 ‘유노조비율’) 및 본인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하 ‘노조조직률’)은 2004년 들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유노조비율은 23.4%였으나, 7차년도에는 19.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노조조직률의 경우에도 1차년도 14.9%에 이르고 있으나, 7차년도에는 10.5%로 하락하였다.

마지막 제5절은 비정규직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KLIPS에서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독립도급근로(34.0%)이며, 시간제근로(29.1%)와 일용대기근로(14.4%)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3.1%와 8.8%로 나타났다. 또 KLIPS의 비정규직 규모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2.3%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8.8%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조작적 정의를 이용할 때(기준 2)에는 25.3%로 경찰조사와의 격차가 감소하며, 종사상지위상으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 1 혹은 기준 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34.7%까지 증가한다. 여기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50.9%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거의 같은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간 조사방법상의 차이점<sup>5)</sup>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4천원으로, 정규직(172만1천원) 근로자의 약 68.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8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7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2,027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1.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7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6.5%, 자영업자 50.8%, 그리고 가족종사자는 22.7%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7차년도에는 56.9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한 것이다.

제3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명목소득(이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실질소득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6년간 월평균명목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2천원에서 2차년도에 127만8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5)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38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실질소득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2차년도뿐 아니라 6차년도에도 부(-)의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에서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1만8천원에서 5차년도 73만2천원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62만7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7차년도에 들어서며 격차가 다소 증가(70만3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창업과정에 대한 분석이 제4절에 제시되어 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38명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5.5%)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한 경우(87.5%)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가 고용주보다 창업 비율이 다소간 더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대상자의 73.8%가 본인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전체 사업비 구성에서 0.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9장은 15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한 생활 만족도, 직무 만족도, 개인의 건강과 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제2~8장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루었다면 이 장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절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1998년 2.89, 2004년 3.19), 성별로는 만족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2절은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로 직무 만족도, 직무 불일치도를 비롯하여 조직 몰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1998년에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불만족이라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1999년부터 최근까지는 만족이라는 응답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04년을 대상으로 항목별 직무만족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일의 내용(35.7%)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임금/보수(46.4%)에 대해서는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2004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기능)수준의 불일치를 살펴보면,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19.9%)가 하향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의 하향취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술(기능)불일치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 19.2%가 직무에 비해 기술(기능)수준이 과잉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응답유형 역시 교육 불일치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조직 몰입도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3절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항들은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장애 여부, 질병에 대한 진단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52.5%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운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8.7%로, 여성의 응답 비중 46.7%보다 1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0장은 근로시간과 여가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 설문에서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출퇴근 및 작업준비 등 근로 준비시간에는 항목별로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휴가와 휴일의 구성, 토요일근무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일상에서의 시간배분과 여가생활 관련 설문에서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하루 24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여가에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도 질문하였다. 독서, 신문, TV 시청 등으로 보내는 시간과 읽는 양도 조사하였다. 10장은 5개의 절로 나누어 1절은 근무시간 결정, 2절은 근로준비시간, 3절은 휴가 및 휴일, 4절은 일상에서의 시간배분과 여가, 5절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 10월에 8차년도 실사까지 완료되었다.<sup>6)</sup>

패널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패널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부터 패널조사를 시행한 미국은 현재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부터 시작된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1979년부터 시작된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968년에 시작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의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층

6)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패널조사로는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Center)에서 주관하여 1988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종단연구조사인 NELS(National Education Logitudinal Study)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PS(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 Longitudinal Study),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B(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991년에 시작된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984년에 시작된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sup>7)</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3년 ‘대우패널’이 시작된 이래 최근에는 여러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선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 Korea Household Panel Study)는 앞서 언급한 대로 최초의 본격적인 패널조사이지만, 1998년 7차조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대우패널의 경험은 서베이 조사체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국의 상황에서 커다란 도전이었다. 이러한 대우패널의 성과와 한계는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로 이어졌으며, 각 정책과 학문분야에서 보다 새로운 자료를 갈망하던 욕구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패널조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개인표본이나 특정집단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패널조사들이 시도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의 고용, 교육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 2001년부터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가 있다. 2002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패널’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한국

7) 아시아 지역의 패널조사로는 199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IFLS(Indonesia Family Life Survey)를 비롯하여 일본의 JPSC(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 대만의 PSFD(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2001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된 호주의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등이 있다. 한편 전 세계의 패널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PSID 홈페이지 중 세계 각국의 패널조사를 소개한 페이지(<http://www.isr.umich.edu/src/psid/panelstudies.html>)를 참고.

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층 교육고용 패널(KEEP :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과 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 패널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2005년에 시작된 조사로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패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예비조사 단계에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자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빈곤패널’ 등이 있다. 한편, 개인이나 가구단위의 조사가 아닌 사업체나 기업체 단위의 패널구축도 향후 본체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4차조사가 시작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을 비롯하여, 현재 1차조사가 진행중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조사’ 등이 그 선두에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약 17개 정도의 패널조사들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다.

지금부터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진행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을 통해서 조사년도별 경과를 살펴보면,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여 원표본 성공률은 75.3%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7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 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었다.

<표 2-1> 1~7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성공 가구수 <sup>1)</sup>	원표본 가구수 <sup>2)</sup>	표본 유지율 <sup>3)</sup>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 <sup>4)</sup>	실사 기간
1차조사('98)	5,000	5,000	100.0	-	13,321	6~10월
2차조사('99)	4,509	4,379	87.6	130	12,042	7~12월
3차조사('00)	4,267	4,045	80.9	222	11,206	5~10월
4차조사('01)	4,248	3,865	77.3	383	11,051	5~10월
5차조사('02)	4,298	3,798	76.0	500	10,966	4~9월
6차조사('03)	4,592	3,862	77.2	730	11,543	4~9월
7차조사('04)	4,762	3,863	77.3	899	11,661	4~9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년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년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sup>8)</sup>에 대하여 제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sup>9)</sup>는 4,379가구로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분가가구<sup>10)</sup>를 포함하여 제2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조사는 1차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하여 84.4%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제3차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이어서 제3차 조사의 총 응답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하여 79.1%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조사에는 총 4,24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가한 가구는 383가구이며 총 응답가구원은 11,051명이었다.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은 11,051명이었으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

8) '원표본가구'는 제 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9)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지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 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0) "분가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었다. 4차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 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었다.

2002년에 실시된 제5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원표본 3,798가구 및 분가한 500가구를 합하여 총 4,298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해 1.3%p가 감소하였다. 표본유지율을 개인단위로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개인 10,966명 중에서 기존 조사자는 10,557명이며,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도 409명에 이른다.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원표본 3,862가구 및 분가한 730가구를 합하여 총 4,59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2%로 전년도에 비해 1.2%p가 증가하였다. 한편, 개인응답자는 전체 11,543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0,985명,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이 558명이었다.

2004년에 실시된 제7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원표본 3,863가구 및 분가한 899가구를 합하여 총 4,76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3%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개인응답자는 전체 11,661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217명,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이 444명이었다.

전반적인 실사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노동패널은 이제 종단면 조사로서 확고한 안정성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조사가 수행될 경우 각종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초자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며, 개인용은 취

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뉘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서 연도별로 노동패널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로 나뉘고, 개인용 자료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자료는 개인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구용, 개인 공통, 그리고 연령이 15세가 되거나 혼인 등으로 조사가구에 편입되어 조사에 새로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응답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나뉜 개인용 자료, 신규, 그리고 부가조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3차년도부터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년도에는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이동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4차년도 조사자료는 3차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개인용 자료의 경우 임금·비임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취업자 공통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표 2-2> 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차년도 (1998)	2차년도 (1999)	3차년도 (2000)	4차(2001)년도 이후 ~ 7차(2004)년도까지
가구용 자료				○	○	○	○
유형 ①~⑧				×	○	○	○
개인용 자료	개인 공통	취업자	임금 근로	○	○	○	○
			비임금 근로	○		○	
		미취업자	○	○		○	
신규용 자료				×	○	○	○
부가조사 자료				×	×	○	4, 6, 7차년도(5차 제외)

주: 3차년도는 청년층,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6차년도에는 중고령자, 7차년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에 대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음.

있으며, 부가조사의 경우 청년층 조사에 이어서 “건강과 은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 5차년도 조사에서는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조사자료 형태는 기존자료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6차년도에는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건강과 은퇴”라는 주제에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 및 은퇴과정에 집중하여 만 50세(1953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개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7차년도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이로 인한 생활시간 사용의 변화와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모든 개인응답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유형설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응답사항을 살펴본다. 2차년도 조사부터 등장한 유형설문은 지난 조사의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과 현재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을 토대로 모두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 유형설문의 응답 대상은 지난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이후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개인이며, 유형설문지에는 일자리의 업종, 직종, 근로형태와 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형 ①~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응답자로 유형 ①과 유형 ③은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와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하던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별 정의를 살펴보면, 유형 ①은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는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 ③은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표 2-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7차년도 응답 결과

		지난 조사 당시부터 계속된 일자리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일자리 지속 여부	지속	유형 ① (3,027명)	유형 ③ (1,792명)	유형 ⑤ (1,167명)	유형 ⑦ ( 301명)
	중단	유형 ② (1,042명)	유형 ④ ( 330명)	유형 ⑥ ( 207명)	유형 ⑧ ( 16명)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 ⑤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롭게 취업한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⑥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유형 ⑦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⑧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7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 신규진입자를 제외한 기존응답자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2-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1개 이상의 유형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전체 개인조사 응답자의 62.1%인 6,962명이며, 이 중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졌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4.0%인 6,06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7차년도에 조사된 총일자리 수는 7,998개이며, 이 중 유형 ①이 37.9%(3,027개), 유형 ②가 13.0%(1,042개), 유형 ③이 22.4%(1,792개), 유형 ④가 4.1%(330개), 유형 ⑤가 14.6%(1,167개), 유형 ⑥이 2.6%(207개), 유형 ⑦이 3.8%(301개), 유형 ⑧이 0.2%(16개), 그리고 신규 조사자의 일자리가 1.5%(116개)이다.

## 2. 설문내용

한국노동패널조사의 7차년도 설문지는 본 설문 부분으로 가구용 설문, 예비조사설문, 유형설문, 취업 및 미취업자용 설문, 신규 조사자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한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별로 설문내용<sup>11)</sup>을 조사 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4, 2-5 참조).

우선 가구용 설문은 크게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전체 가구 관련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6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설문 내용상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가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가구원의 성별·연령·학력·가구주와의 관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

11) 1~7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내용은 ‘각 연도별 설문지 및 KLIPS 1~6차 User's Guide’를 참조.

항 이외에 가구원의 추가분가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단위로 조사된 내용 역시 지난 조사와 같이 주거(변동)상황,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관계, 가구의 소득소비·자산·부채 등이 조사되었다. 다만 분가이유에 ‘유학’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생활비에서 기존에 ‘기타’로 처리되었던 항목 중 ‘헌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대중교통비’ 등이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문항에서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의 보기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19개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최근 급증하는 사교육의 실태 파악 및 유치원 시간제 구분을 통해 보다 정확한 보육현황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서비스 종류와 한 자녀에게 드는 교육 및 보육비도 5차년도 설문형태를 복원하였다. 사교육 부문에서 가장 큰 항목변동은 대학원 자녀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종류 및 교육비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대학생 자녀의 교육실태와 교육비의 가계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된 문항들이다.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에게 어떠한 유형설문을 조사할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예비설문, 기존의 응답자에 대해 일자리 단위별로 조사하는 유형설문, 유형설문에서 조사되는 내용 이외에 개인단위의 질문으로 구성된 취업자 및 미취업자용 설문, 새로 조사에 진입한 응답자에 대해 조사하는 신규조사자용 설문, 마지막으로 전체 개인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근로시간과 여가’ 설문으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되는 내용(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으로는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기업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상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단위로 가입되는 사회보험 관련 내용, 노동조합, 구직활동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기업형태에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추가하고, 교대제형태에 ‘4조2교대’를 추가하는 등의 조정이 있었다.

<표 2-4> 7차년도(2004년) 설문 내용

<p>가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의 인적사항</li> <li>▪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li> <li>▪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li> <li>▪ 주거 관련 문항</li> <li>▪ 자녀교육 및 자녀보육 관련 문항</li> <li>▪ 가구의 소득</li> <li>▪ 가구의 소비</li> <li>▪ 가구의 자산과 부채</li> <li>▪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li> </ul>
<p>예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li> <li>▪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li> </ul>
<p>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 (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li> <li>▪ 일자리 형태 및 규모</li> <li>▪ 근로계약 관련 문항</li> <li>▪ 근로시간 관련 문항</li> <li>▪ 임금 관련 문항</li> <li>▪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일자리의 노동조합</li> <li>▪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li> <li>▪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li> <li>▪ 구직활동 관련 문항</li> </ul>
<p>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 (비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li> <li>▪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li> <li>▪ 일자리의 근로시간</li> <li>▪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li> <li>▪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li> <li>▪ 구직활동 관련 문항</li> <li>▪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li> <li>▪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li> <li>▪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li> <li>▪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li> <li>▪ 사업체 시작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li> <li>▪ 사업비용 조달방법</li> <li>▪ 창업과정의 어려움</li> </ul>

&lt;표 2-5&gt; 7차년도(2004년) 설문 내용(계속)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상태(취업)</li> <li>▪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li> <li>▪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li> <li>▪ 근로시간 관련 사항</li> <li>▪ 직무만족도</li> <li>▪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li> <li>▪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공통)</li> <li>▪ 교육 및 직업훈련(공통)</li> <li>▪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공통)</li> <li>▪ 정규교육 관련 사항 (공통)</li> <li>▪ 혼인상태(공통)</li> <li>▪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공통)</li> <li>▪ 차별여부 및 위험에 대한 태도</li> </ul>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상태(미취업)</li> <li>▪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li> <li>▪ 교육 및 직업훈련</li> <li>▪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li> <li>▪ 정규교육 관련 문항</li> <li>▪ 혼인상태</li> <li>▪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li> <li>▪ 차별여부 및 위험에 대한 태도</li> </ul>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포함</li> <li>▪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li> <li>▪ 부모님의 학력</li> <li>▪ 만 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님)의 경제활동상태</li> <li>▪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형제자매의 수</li> <li>▪ 혼인력과 출산력</li> </ul>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과 휴가</li> <li>▪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 및 주5일제 시행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조사</li> <li>▪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임금/비임금 공통)</li> <li>▪ 여성의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li> <li>▪ 생산시간표를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누어 조사(모든 응답자)</li> <li>▪ 여가의 내용, 소요시간, 지출 경비, 독서, 종교활동(모든 응답자)</li> <li>▪ 미취업자의 여가계획</li> </ul>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으로는 일자리의 종업원 수, 근로시간,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 관련 문항, 직업 및 산업 등이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일자리 시작동기를 새롭게 추가하여 자영업자 관련 설문을 보완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개인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된 설문에는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사회보험수급,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관련 추가문항, 직무만족도,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등이 조사되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성, 비구직사유 등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문항이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실태와 관련된 문항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가입 여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적 등은 측정오차의 문제로 제외되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차별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위험에 대한 선호도와 경제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 문항도 추가되었다.

신규용 설문은 당해년도에 조사되는 유형 ①~유형 ⑧에 해당되는 모든 설문내용 및 취업자미취업자용 설문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단위의 조사에 처음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만 15세 이후에 가졌던 일자리의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학력, 만 14세 무렵 부모님의 경제활동상태,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및 혼인력과 출산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용 설문에는 개인용 설문에서 반영된 모든 변경사항이 동일한 구조로 반영되었다.

부가조사는 주요이슈에 대해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심층조사이다. 7차년도에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응답자들의 근로시간 변화와 여가사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과 휴

가뿐만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임금/비임금 공통)도 조사하였다. 한편, 여성 응답자에게는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를, 모든 응답자에 대해서는 생활시간표 등의 내용도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응답자에 대해 여가의 내용, 소요시간, 지출 경비, 독서, 종교 활동 등도 조사하였다.

### 제 3 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sup>12)</sup>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실사는 민간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7차년도 조사는 2003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12)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 klips)를 참고.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지하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에 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는 기간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6>은 각 연도별 조사방식이 어떤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차년도에는 88.0%에 이르렀다. 반면 유치 조사는 1차년도에 21.7%나 되었지만, 7차년도에는 1.8%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설문을 실시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순수한 전화나 대리응답보다는 기본적으로 면접설문을 실시한 이후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답변에 대해 전화나 유치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7>은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당시 대리

응답의 비중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약 11%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대리응답이 9.7%로 한 자리 수 단위로 떨어졌다.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요 대리응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귀가가 너무 늦거나 면접 자체가 힘들었다는 이유, 즉 ‘부재중’이 28.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응답거부’가 18.4%, ‘바빠서’, 혹은 ‘학업’ 때문에 거절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횟수는 평균 3회로 지난해보다 0.1%p가 증가하였다(그림 2-1). 특히 지역별로 살펴볼 때 대구/경북 지역은 평균 방문횟수가 4회를 넘어서고 있어서 조사 성공여부와 방문횟수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대구/경북 지역은 타지

<표 2-6>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개인응답자수(신규 포함)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11,66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면접	64.4	77.7	83.0	83.7	83.8	86.3	88.0
(2) 유치	21.7	7.6	5.1	3.3	2.6	1.7	1.8
(3) 전화	1.5	7.4	5.3	4.6	3.9	3.8	4.1
(4) 면접+ 전화	2.6	4.7	3.8	4.9	6.4	5.7	3.7
(5) 유치+ 전화	3.7	2.5	1.4	1.2	1.0	0.9	0.4
(6) 면접+ 유치	2.6	0.0	0.9	1.8	1.0	1.3	1.6
(7) 면접+ 유치+ 전화	0.0	0.0	0.2	0.5	1.3	0.4	0.5

<표 2-7>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개인응답자수(신규 포함)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11,66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본인	74.0	88.6	88.3	83.3	83.8	83.1	85.7
(2) 대리인	19.7	11.3	8.1	11.0	9.8	11.2	9.7
(3) 본인+ 대리인	0.4	0.0	3.6	5.5	6.4	5.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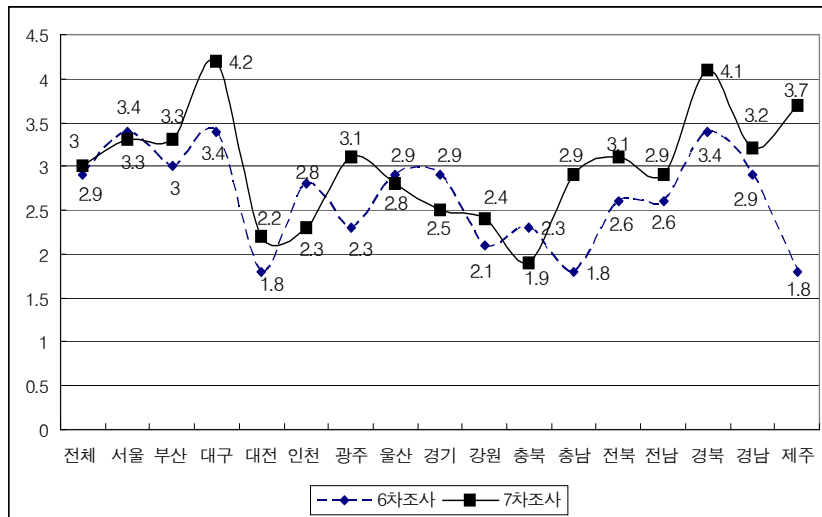
역에 비해 응답거부가 많은데, 이 때문에 면접원들의 접촉시도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이다.

[그림 2-2]는 조사시기별 진행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7차년도 조사의 시작은 4일(4월 21~3일) 동안 서울, 대전, 부산에서 각각 진행된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다.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집계는 설문지가 조사업체의 각 지방사무소와 면접원에게 배포된 후, 5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조사진행은 전반적으로 선형 혹은 완만한 포물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적인 조사진행 현황은 특정시기에 상관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시기별로 차이가 난다. 실제 조사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응답에 응하거나 조사가 용이한 가구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후기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사추적 등 보다 높은 면접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가구들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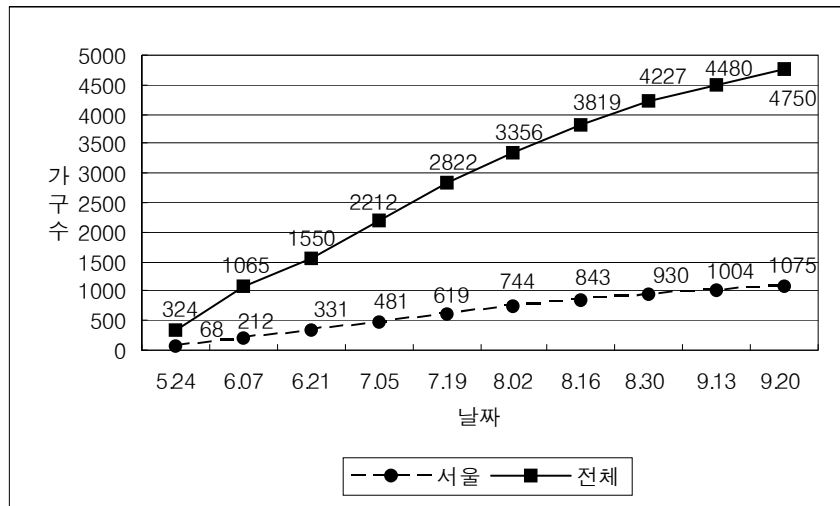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조사의 양적·질적 성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과거부터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사 관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응답자에게는 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기 전 노동부 공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의 평균방문횟수

(단위: 회)



[그림 2-2] 시기별 조사진행 정도



문 및 노동패널 소식지를 발송하고, 이사가구의 추적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발송한다. 만일 조사대상가구가 이사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알려오면 선물을 제공하며, 생일카드도 보내고 있다. 특히, 4차년도 조사부터는 응답 가구에 대해 3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조사응답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십여 가구를 추첨하여 선물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조사대상가구가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응답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면접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변경된 설문 내용과 면접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 중에도 각 지역의 실사 감독자와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실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의 관리를 한다. 이사추적이나 응답거부 등의 가구에 대해서는 패널조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면접기술이 뛰어난 면접원들을 선발하여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구들을 조사하는 데 성공하면 면접원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총 조사표본은 4,762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 15,256명이며,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기존조사자 11,217명과 신규조사자 444명을 합한 11,661명이다. <표 2-1>을 통해서 유효표본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8가구였으며, 3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80.9%에 해당한다. 4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3,865가구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이며,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전년도에 비해 1.3%p가 하락한 3,798가구로 76%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1.2%p가 증가한 77.2%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은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다. 원표본 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가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 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는 분모가 되는 원표본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000가구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차년도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비슷한 88%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차년도의 표본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5%p 낮으나 영국의 BHPS의 결과와 동일하며, 4차년도의 유지율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6~8%p, 영국에 비해서는 3%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5차년도의 유지

율은 외국패널과의 격차가 더욱 좁혀져서 미국에 비해서는 4%p, 영국에 비해서는 1%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6차년도에 표본유지율이 1%p 증가하고 이것이 7차년도에도 유지됨으로써 결국 다른 선진국 패널조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멸가구를 제외한 원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6차년도에는 전체 4,993가구 대비 77% 표본유지율로 5,000가구 대비 표본유지율과 동일하지만, 7차년도에는 소멸가구가 50가구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표본유지율이 78%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조사 표본은 표본설계 당시의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의의 특성에 따라 편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추출은 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15개 광역시 및 도를 층화하여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고른 조사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8>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 연도, 가구)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기준 1	기준 2	가구수
2차 년도	89% (1969)	90% (1985)	88% (1991)	79% (1994)	88% (1999)	-	4,379
3차 년도	86% (1970)	86% (1986)	81% (1992)	66% (1995)	81% (2000)	-	4,044
4차 년도	83% (1971)	85% (1987)	80% (1993)	59% (1996)	77% (2001)	-	3,867
5차 년도	80% (1972)	81% (1988)	77% (1993)	56% (1997)	76% (2002)	-	3,798
6차 년도	78% (1973)	79% (1989)	77% (1994)	44% (1998)	77% (2003)	77%	3,862
7차 년도	76% (1974)	78% (1988)	71% (1995)	종료	77% (2004)	78%	3,863

주: 1) 기준 1은 5,000가구 대비 성공률임.

2) 기준 2는 소멸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는 4,950가구임.



&lt;표 2-9&gt;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서울	100.0	84.9	74.8	68.4	69.7	73.5	72.9
부산	100.0	90.5	89.4	85.0	84.6	80.8	78.7
대구	100.0	84.1	94.3	67.5	71.5	76.9	70.2
대전	100.0	83.7	96.9	81.0	76.4	80.3	81.5
인천	100.0	85.6	93.9	74.5	76.3	75.2	79.9
광주	100.0	78.5	97.3	77.2	81.3	80.3	80.4
울산	100.0	96.5	97.3	88.8	86.2	85.3	85.1
경기	100.0	90.2	82.4	78.4	72.2	76.7	81.6
강원	100.0	87.7	97.4	71.5	66.2	62.2	66.2
충북	100.0	87.6	97.9	82.8	75.0	70.5	70.2
충남	100.0	91.6	97.1		83.1	84.7	84.7
전북	100.0	88.9	96.3	87.7	83.4	81.4	81.8
전남	100.0	92.1	97.1		87.3	82.1	84.2
경북	100.0	89.4	94.5	80.7	80.9	83.0	84.1
경남	100.0	90.1	93.4	93.0	85.5	83.0	81.7

주: 6차는 4,993가구, 7차는 4,950가구 기준임.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을 조사지역 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매년 감소하여 수렴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도의 표본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지역의 조사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 성공 비율을 살펴보면, 7차년도 조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울산이 가장 높은 원표본 조사성공률 85.1%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남, 전남, 경북, 대전 등이 모두 80% 이상의 높은 원표본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중 조사성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강원지역이었지만, 전년도보다 4%p가 상승한 66.2%의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대구 및 충청지역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70.2%의 낮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는 서

울지역 역시 72.9%의 성공률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과 광주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은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지역별 조사성공률의 차이를 볼 때 ‘수도권-지방’이라는 이분법식의 조사성공률 차이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조사성공률이 평균보다 낮는데 반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표본을 갖고 있는 경기와 인천은 오히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호남간 지역별 조사 격차도 단순한 설명논리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은 모두 성공률이 평균을 훨씬 상회하지만, 영남지역 내에서도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조사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사단위에서 동일한 면접원 집단이 경북과 대구지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지역단위별 면접원 성향이나 숙련도의 차이만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컨대, 지역별 조사성공률 격차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어쨌든, 한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성공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편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별 편차가 감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지역별 성공률 격차가 조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사 중간에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가구의 비중이 많다면 실사과정의 어려움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자료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표 2-10>은 1~7차년도 기간동안 조사성공 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6,057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82.5%,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17.5%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7차년도 기간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59.3%, 6회 이상 응답한 가구가 10.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가구 중에서는 6차년도 모두 조사에 응답한 가구가 6.5%인 반면, 1회만 응답한 구가 2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가가구의 경우 조사 진입년도가 가구별로 다르므로 이러한 비중만으로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정도, 즉 조사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 분가가구(130가구) 중 2~6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의 비중도 53.0%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원가구의 조사에 대한 충성도가 전반적으로 비원가구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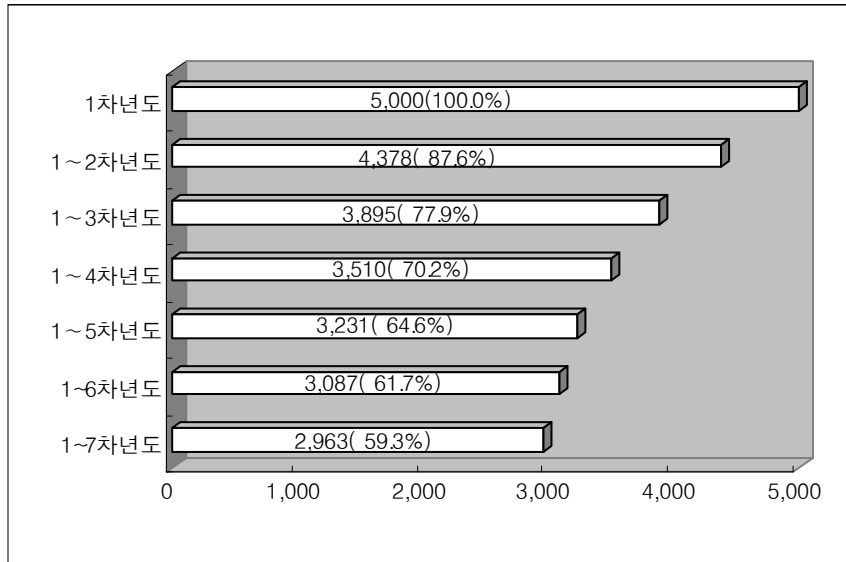
<표 2-10> 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단위: 가구수,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전 체
전 체	543 ( 9.0)	529 ( 8.7)	451 ( 7.5)	483 ( 8.0)	481 ( 7.9)	607 (10.0)	2,963 (48.9)	6,057 (100.0)
원가구	241 ( 4.8)	257 ( 5.1)	302 ( 6.0)	314 ( 6.3)	385 ( 7.7)	538 (10.8)	2,963 (59.3)	5,000 (100.0)
비원가구	302 (28.6)	272 (25.7)	149 (14.1)	169 (16.0)	96 ( 9.1)	69 ( 6.5)	- -	838 (100.0)

[그림 2-3]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963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61.7%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 77.9%, 4차년도 70.2%, 5차년도 64.6%, 6차년도 61.7%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단위: 가구, %)



<표 2-11> 소득분위별 1~7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원가구 대비)

(단위: 회, %)

소득분위	평균응답횟수 (표준편차)	계속응답가구 비중(%)
1분위(최상위)	6.47 (1.12)	75.9
2분위	6.53 (0.97)	75.4
3분위	6.45 (1.13)	75.1
4분위	6.53 (1.04)	77.2
5분위	6.43 (1.15)	73.8
6분위	6.52 (1.06)	76.4
7분위	6.58 (0.96)	78.1
8분위	6.55 (0.95)	75.4
9분위	6.68 (0.81)	82.5
10분위(최하위)	6.65 (0.88)	81.5

<표 2-11>은 7차년도 현재 원가구 대비 소득분위별 응답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7차년도에 응답한 원가구 중 소득이 '누락(missing)'된 가구를 제외한 3,811가구를 최상위소득(1분위)부터 최하위소득(10분위)까지 순서

대로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응답횟수와 계속응답가구의 비중 모두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상위 1분위의 평균응답횟수는 6.47인데 비해, 최하위 10분위의 응답 횟수는 6.65로 약 0.1회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계속응답가구의 비중은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한데, 최상위 1분위에서는 계속응답가구가 75.9%였지만, 최하위 10분위는 81.5%로 나타났다. 앞서서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복잡적이기는 하지만, 가구소득과 같이 패널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에서 이러한 응답률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응답자의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나 면접원 효과를 포함하는 조사체계 변수 등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소득수준별 응답률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7차년도 계속응답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주의 82.3%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 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3.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3.9%p 증가한 97.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 40대(27.9%) > 30대(27.1%) > 50대(19.7%) > 60세 이상(17.7%) > 30세 미만(7.6%) 순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1~7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60대 이상이 3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9.8%, 50대가 2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0.2%에 그치고 있어, 조사차수에 따른 연령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비교적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지속적인 응답에 보다 덜 참여하는 현상이 이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계속응답가구 중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가 1차년도(38.6%)보다 6.7%p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는 1차년도보다 2.8%p 정도 감소하였다.

<표 2-12> 1~7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sup>1)</sup>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7차년도 계속응답가구 <sup>2)</sup>
전 체		5,000 (100.0)	2,867 (100.0)
성 별	남 성	4,293 ( 85.9)	2,359 ( 82.3)
	여 성	707 ( 14.1)	508 ( 17.7)
혼인 상태	기혼(무배우 포함)	4,657 ( 93.1)	2,781 ( 97.0)
	미혼	332 ( 6.6)	86 ( 3.0)
연 령	30세 미만	380 ( 7.6)	6 ( 0.2)
	30대	1,356 ( 27.1)	357 ( 12.5)
	40대	1,397 ( 27.9)	855 ( 29.8)
	50대	984 ( 19.7)	692 ( 24.1)
	60세 이상	883 ( 17.7)	957 ( 33.4)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10 ( 38.6)	1,298 (45.3)
	고졸	1,819 ( 36.1)	966 (33.7)
	대학 재학 및 중퇴	147 ( 3.2)	54 ( 2.0)
	전문대졸	241 ( 4.8)	127 ( 4.4)
	대졸 이상	882 ( 17.5)	422 (14.7)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9 ( 44.6)	1,193 ( 41.6)
	비임금	1,440 ( 28.8)	852 ( 29.7)
	미취업자	1,331 ( 26.6)	822 ( 28.7)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7차년도: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가구주가 원표본가구원이 아닌 96case는 제외.

취업상태별로는 1차년도 조사당시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데 비해, 비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7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는 41.6%, 비임금근로자는 29.7%, 미취업자는 28.7%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2~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번 이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살펴볼 때, 가구주의 특성이 여성인 경우보다는 남성인 경우보다는 미혼인 경우보다는 중고령자보다는 저연령층이,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이,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중

요한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표본이탈 가구의 가구주 특성으로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2. 조사성공 가구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7차년도 조사까지 한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6,426명이다.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6,547명으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로 61.2%이며,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242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비원표본가구원은 신규가구 조사에 진입하는 연도에 따라 응답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응답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1차년도 조사당시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총가구원인 17,50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sup>13)</sup>이었다. 2차

<표 2-13> 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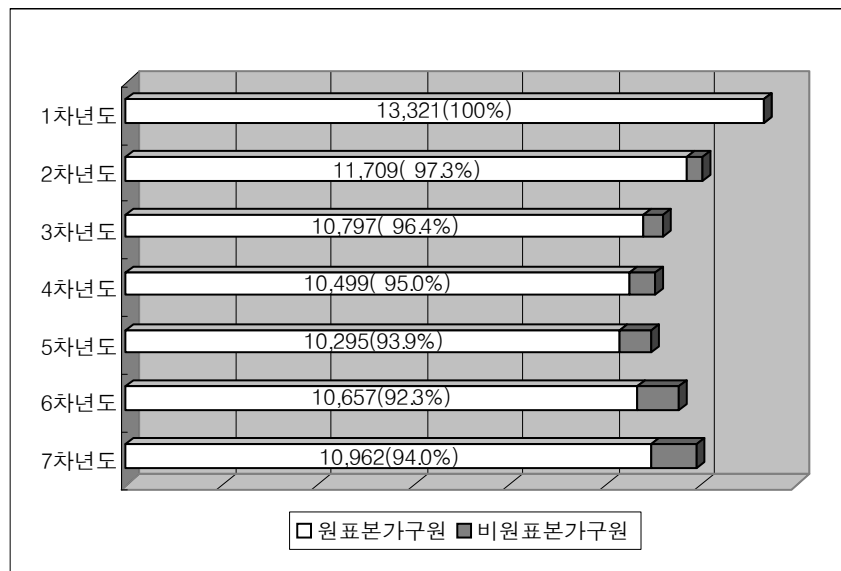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전체
전체	1,519 ( 9.3)	1,570 ( 9.6)	1,468 ( 8.9)	1,637 (10.0)	1,768 (18.8)	1,917 (11.7)	6,547 (39.9)	16,426 (100.0)
원표본 가구원	242 (2.3)	370 (3.5)	476 (4.5)	722 (6.8)	985 (9.2)	1,350 (12.6)	6,547 (61.2)	10,692 (100.0)
비원표본 가구원	1,277 (22.3)	1,200 (20.9)	992 (17.3)	915 (16.0)	783 (13.7)	567 (9.9)	- -	5,734 (100.0)

13) 1차년도 개인용 자료에는 13,738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417명은 가구조사를 통해서 성별·연령·교육수준·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정보만 조사되었을 뿐, 개인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차년도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응답자수를 13,321명으로 정의하였다.

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9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0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3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205명 중 96.4%에 해당하는 10,79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총 11,051명의 조사성공가구원 중 95%에 해당하는 10,49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5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0,9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10,295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6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43명 중 92.3%에 해당하는 10,65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7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661명 중 94%에 해당하는 10,962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즉, 1~6차년도 기간동안 당해연도 전체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원표본가구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6차년도에 들어오면서 4, 5차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차년도에는 원표본가구원의 비중까지도 오히려 전년도보다 1.7%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원표본 조사성공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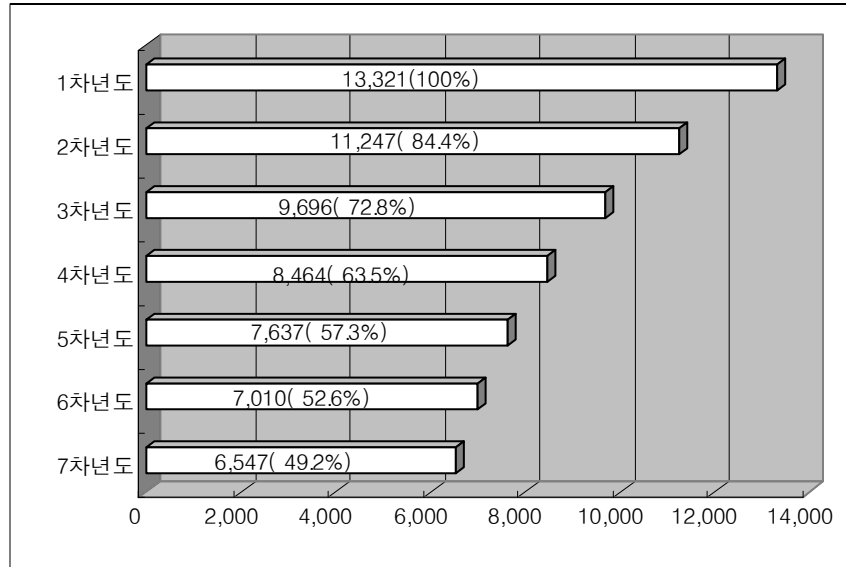
(단위: 명, %)





[그림 2-5]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1차년도 총 조사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p가 감소한 9,696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4차년도에는 9.3%p가 감소한 8,464명의 가구원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6.2%p가 감소한 7,637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7%p가 감소한 7,010명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차년도에는 3.4%p가 감소한 6,547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1~7차년도 기간동안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이탈했던 개인이 다시 복귀할 경우 중간에 누락되었던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주요 특성들에 대한 설문에서 복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당해연도에 직접 조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응답 가구원과 1차년도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2-14>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원 중 여성의 비중이 55.2%로 1차년도 51.4%와 비교할 때 3.8%p 정도 높은 가운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86.3%로 1차년도보다 15.2%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지난 7년간의 자연증가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계속응답자 비중이 25.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표 2-14> 1~7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sup>1)</sup>

(단위:명, %)

		1차년도 가구원 <sup>1)</sup>	1~7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
전 체		13,321 (100.0)	6,547 (100.0)
성별	남 성	6,471 ( 48.6)	2,932 ( 44.8)
	여 성	6,850 ( 51.4)	3,615 ( 55.2)
혼인 상태	미혼	3,845 ( 28.9)	894 ( 13.7)
	기혼유배우	3,854 ( 62.4)	4,814 ( 73.5)
	기혼무배우	1,164 ( 8.7)	839 ( 12.8)
연령	15~19세	1,445 ( 10.9)	0 ( 0.0)
	20~24세	1,248 ( 9.4)	297 ( 4.5)
	25~29세	1,451 ( 11.2)	388 ( 5.9)
	30~39세	3,047 ( 22.9)	1,322 ( 20.2)
	40~49세	2,616 ( 19.6)	1,715 ( 26.2)
	50~59세	1,706 ( 12.8)	1,182 ( 18.1)
	60세 이상	1,807 ( 13.6)	1,643 ( 25.1)
교육 수준 <sup>2)</sup>	무 학	856 ( 6.4)	497 ( 7.6)
	고졸 미만	4,575 ( 34.4)	2,207 ( 33.7)
	고 졸	4,403 ( 33.1)	2,198 ( 33.6)
	대졸 미만	1,136 ( 8.5)	249 ( 3.8)
	전문대졸	717 ( 5.4)	478 ( 7.3)
	대졸 이상	1,633 ( 12.3)	918 ( 14.0)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4,012 ( 30.1)	2,464 ( 37.6)
	비임금근로자	2,415 ( 18.1)	1,458 ( 22.3)
	미취업자	6,894 ( 51.8)	2,625 ( 40.1)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고졸 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수료·중퇴자를 포함. 대졸 미만은 전문대 및 일반대학의 재학·휴학·수료 및 중퇴자를 포함.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이 1~7차년도 계속응답자의 6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7.5%p가 증가한 반면, 미취업자의 비중은 10%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1. 이사 가구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이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4)</sup>.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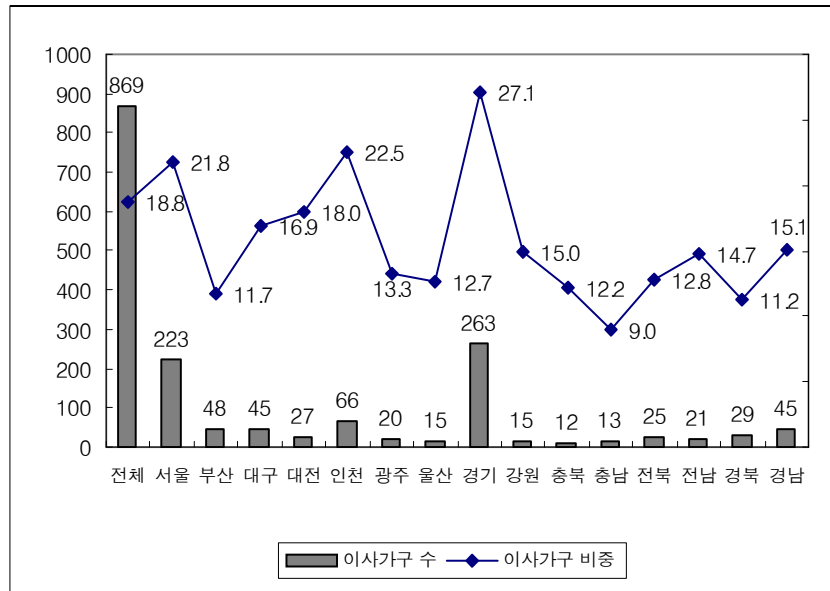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여부에 대한 설문은 2004년 분가한 142가구를 제외한 4,62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7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869가구로 분가가구를 제외한 전체 성공가구의 18.8%이다. 이는 6차년도의 이사율(22.0%)보다 3.4%p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통계청의 인구이동률과도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을 통해 현재 거주지별로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인천(22.5%), 서울(2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충남(9%), 경북(11.2%), 부산(11.7%)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인천, 서울 및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높은 이사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이 전체 이사비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광역시

14)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제시된 수치는 2000년 총인구 대비 전입자 비중이다.

[그림 2-6] 7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단위 : 가구수, %)



라 하더라도 부산의 경우 지난해(14.8%)에 이어 낮은 이사율을 보이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표 2-9>에서 살펴보았던 지역별 표본유지율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사성공률이 낮은 지역의 대부분이 높은 이사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사가구를 추적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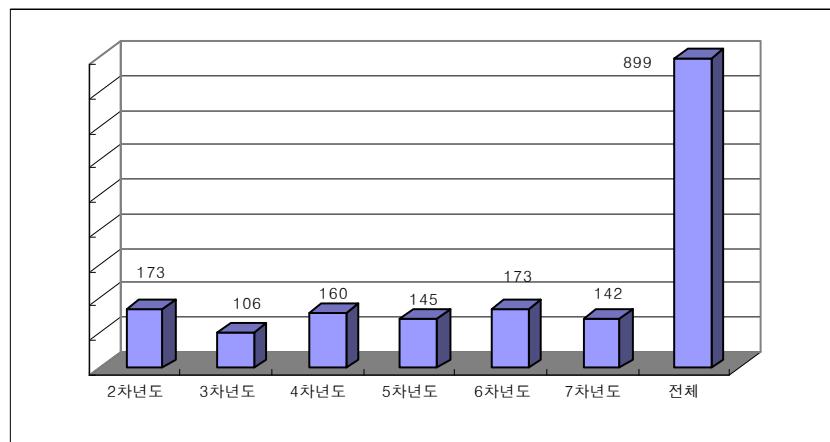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조사성공가구(4,762가구) 중에는 원표본 3,863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899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73가구이며, 3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06가구, 4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0가구, 5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5가구, 6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73가구, 7차년도에 진입한 가

구는 142가구로 나타났다(그림 2-7 참조).

한편,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5.2%, 4차년도 9.0%, 5차년도 11.6%, 6차년도 15.9%, 7차년도에는 18.9%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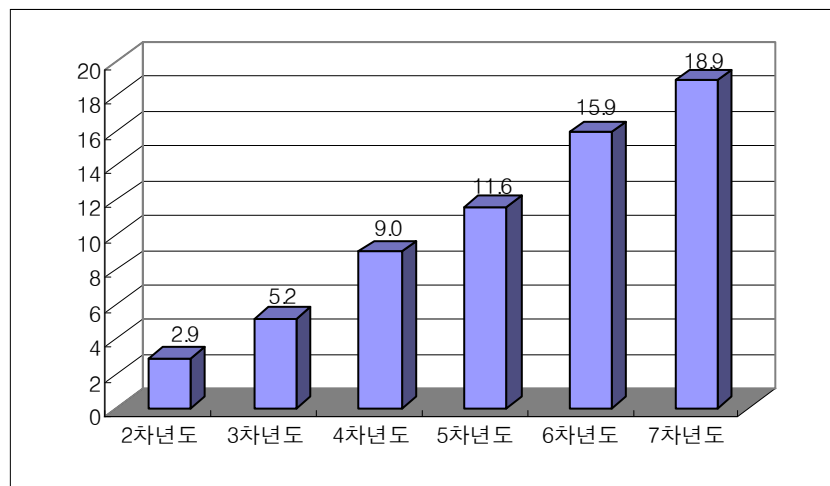
[그림 2-7] 7차년도 비원표본가구수

(단위: 가구수)



[그림 2-8]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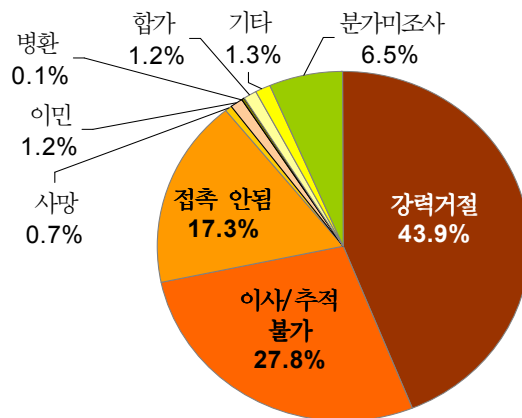




<표 2-15>의 계속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비성공 이유
262	65	43	26	56	31	64	72	1535	사례수
36.3	38.5	65.1	84.6	48.2	38.7	48.4	51.4	43.9	강력거절
26.7	44.6	11.6	11.5	32.1	32.3	28.1	29.2	27.8	이사/추적불가
24.8	9.2	9.3	0.0	10.7	16.1	10.9	2.8	17.3	접촉 안됨
1.1	0.0	2.3	0.0	0.0	0.0	1.6	1.4	0.7	사망
1.5	0.0	4.7	0.0	1.8	0.0	3.1	2.8	1.2	이민
0.0	0.0	0.0	0.0	0.0	0.0	0.0	0.0	0.1	병환
1.1	0.0	0.0	0.0	5.4	9.7	3.1	1.4	1.2	합가
1.9	3.1	0.0	0.0	0.0	0.0	0.0	1.4	1.3	기타
6.5	4.6	7.0	3.8	1.8	3.2	4.7	9.7	6.5	분가미조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그림 2-9] 비성공 사유



회와 4.8회로 높은 시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대구지역의 낮은 조사성공률을 면접원의 '노력'수준으로 귀결시키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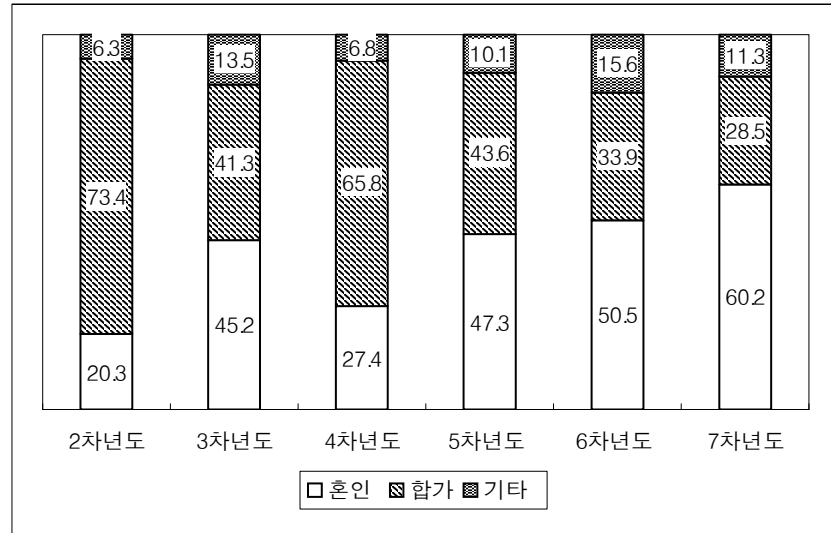
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의 신규 조사자는 444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42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202명으로 파악되었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들은 1~6차 조사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7차년도 조사당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비표본가구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표본가구가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7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23명 중에서 혼인이 74명, 합가가 35명, 기타 1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2-10]을 통해서 2~6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추가이유 중 혼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합가로 인한 추가는 감소하고 있다. 먼저 혼인의 경우 2차년도에는 20.3%에 불과하였으나 4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차년도에는 60.2%를 차지하였으며, 반대로 합가는 1차년도에 73.4%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7차년도에는 2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년도 신규응답자 중 원표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16 참조), 남성이 236명(53.2%)으로 208명으로 파악된 여성(4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가구주는 13.7%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원표본가구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58.6%를 차지한 가운데 원표본가구원은 모두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원표본가구원 대부분이 15세가 되면서 신규로 개인조사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24.56세로 기존 조사자들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원표본가구의 평균연령(15.4세)과 비원표본가구원(35.4세)의 연령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그림 2-10]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2~7차년도)  
(단위: %)



<표 2-16> 7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전 체		444 (100.)	242 (100.)	202 (100.)
성별	남 성	236 (53.2)	140 (57.9)	96 (47.5)
	여 성	208 (46.8)	102 (42.1)	106 (52.5)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주	61 (13.7)	2 ( 0.8)	59 (29.2)
	가구원	383 (86.3)	240 (99.2)	143 (70.8)
혼인 상태	미혼	260 (58.6)	242 (100.)	18 ( 8.9)
	기혼	184 (41.4)	0 ( 0.0)	184 (91.1)
평균 연령		24.5	15.4	35.4

### 제 6 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표본조사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도 인구센서스 및 고용

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중치의 부여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동패널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우선 한국노동패널의 1차조사가 1998년도임을 고려할 때 가구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개인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는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노동패널과 같은 ‘중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는 자료의 특성상 1차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 번째,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여되었다. 1단계로 이미 산출된 1차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조사의 개인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결혼·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05년)의 5년간 총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 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생산가능인구(1998~2002년)의 5년간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 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값은 <표 2-17>과 같다.

&lt;표 2-17&gt;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사례 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1차년도	11,276,899	30,039,370
2차년도	11,453,518	30,503,448
3차년도	11,632,899	30,974,696
4차년도	11,815,100	31,453,224
5차년도	12,000,165	31,939,145
6차년도	12,188,092	32,432,573
7차년도	13,719,233	35,016,440

###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표 2-18>은 지금까지 설명한 가중치 부여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중치의 변수명과 분석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연도의 데이터 셋에 삽입되어 있다. 예컨대, 1차년도 가구가중치는 1차년도 가구자료에, 7차년도 개인 횡단면·종단면 가중치는 7차년도 개인자료에 아래 표와 같은 변수명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상의 가중치는 한국노동패널의 분석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단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이 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의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

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 장부터 제시될 요약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표 2-18> KLIPS의 가중치 변수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가구분석		w1_h	w2_h	w3_h	w4_h	w5_h	w6_h	w7_h
개인분석	횡단면 분석	w1_pc	w2_pc	w3_pc	w4_pc	w5_pc	w6_pc	w7_pc
	종단면 분석	w1_pl	w2_pl	w3_pl	w4_pl	w5_pl	w6_pl	w7_pl

## 제 3 장

## 조사가구의 특성

이 장에서는 7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 성공한 4,762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지난 7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 변동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과 교류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중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2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이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

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함께 살고 있지 않으나 교육,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미혼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교류가 없거나 미혼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을 통해서 7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1~6차년도보다 낮은 3.2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차년도 이후, 전반적인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인(20.8%), 2인(16.4%)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체 (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1인	10.2	9.1	10.3	9.8	11.2	12.4	13.4
2인	13.1	12.4	13.7	13.3	15.2	16.1	16.4
3인	19.4	18.6	19.7	18.4	19.4	19.9	20.8
4인	38.1	38.6	38.0	38.6	38.4	37.1	36.4
5인	13.8	14.9	13.6	14.5	12.3	11.4	10.5
6인 이상	5.5	6.4	4.7	5.4	3.6	3.2	2.7
평균(인)	3.5	3.6	3.5	3.5	3.4	3.3	3.2

7차년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4인가구와 5인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0.7%p와 0.9%p 하락한 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1.0%p와 0.3%p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구추계자료<sup>15)</sup>에서 추정된 1인가구의 비중과 비교했을 때 3.3%p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일수

15) 인구센서스 및 가구추계에 의한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01년 15.8%, 2002년 16.1%, 2003년 16.4%, 2004년 16.7%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록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가구를 조사표본으로 삼고 있는 노동패널과 통계청조사와의 차이는 타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별로 가구원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의 평균 가구원수가 3.25명, 도지역이 3.21명으로 거주지별 평균 가구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림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지역의 가구구성이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3~4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1~2인가구의 비중 및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서울 및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 혹은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1~2인가구나 5인 이상의 가구원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가구의 세대구성<sup>16)</sup>을 <표 3-2>를 통해 살펴보면,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가구가 67.7%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가구는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가 13.4%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가구의 비중은 6.8%였다. 그러나 가구주와 그의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사는 4세대가구는 0.1%에 불과하였다.

세대구성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1%에 그쳤던데 반해 6차년도 조사에서는 2.0%p가 증가한 반

16)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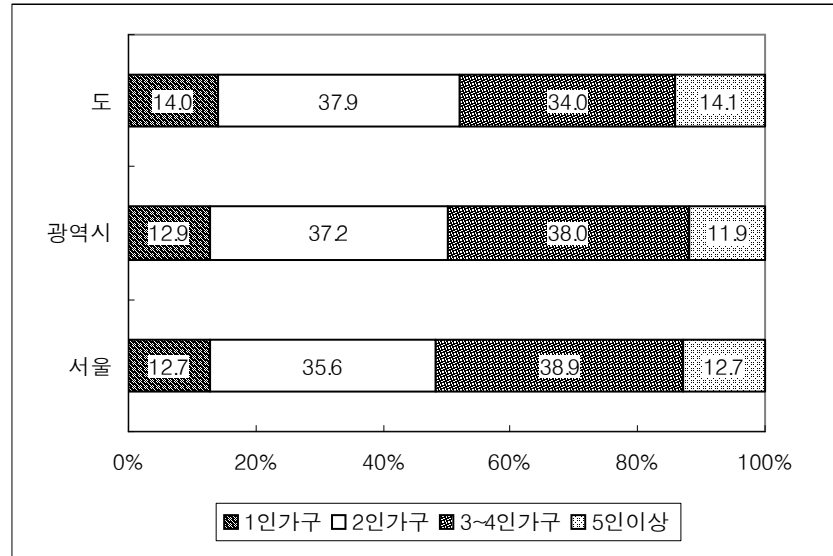
3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그림 3-1] 7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수

(단위: %)



<표 3-2> 연도별 세대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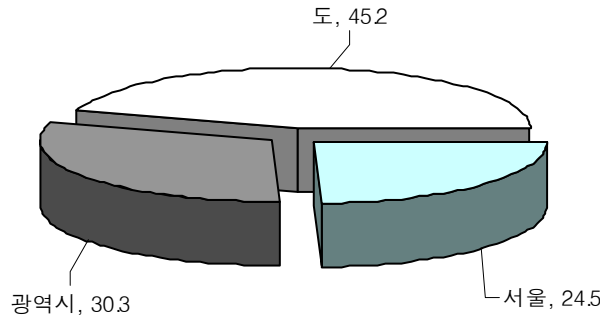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체 (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1인 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13.4
1세대 가구	10.1	10.1	10.7	10.9	11.8	12.1	12.1
2세대 가구	69.8	70.3	69.7	69.2	68.9	67.9	67.7
3세대 가구	9.8	9.8	9.3	8.8	8.3	7.6	6.8
4세대 가구	0.1	0.1	0.1	0.2	0.1	0.1	0.1

면, 3세대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2.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7차조사에서 3세대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45.2%가 도지역으로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난 6차년도(51.2%)보다는 그 비중이 6%p 감소하였다. 어쨌든, 이는 서울지역과 광역시지역의 3세대가구 비중을 합한 값보다는 적으나 중소도시일수록 여전히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잘 보여준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7차년도 3세대가구의 지역별 비중

(단위: %)



다음으로 <표 3-3>에서는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단독),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미혼자녀 가구가 56.4%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단독 가구가 11.2%,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8.0%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 2차년도 74.8%, 3차년도 75.1%, 4차년도 75.8%, 5차년도 76.0%, 6차년도와 7차년도가 모두 75.6%로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6차년도부터는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의 경우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체(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핵가족가구	74.4	74.8	75.1	75.8	76.0	75.6	75.6
부부 단독	9.0	9.0	9.5	10.2	10.8	11.2	11.2
부모+미혼자녀	59.3	59.6	59.1	59.2	58.6	56.6	56.4
편부모+미혼자녀	6.1	6.2	6.5	6.4	6.6	7.7	8.0
1인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13.4
비핵가구	15.4	15.5	14.8	13.4	13.1	12.1	11.0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8.5%, 2002년 68.6%, 2003년 68.7%, 2004년 68.8%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노동패널조사의 핵가족 비중이 약 7%p 정도 높은 가운데 핵가족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패널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1. 가구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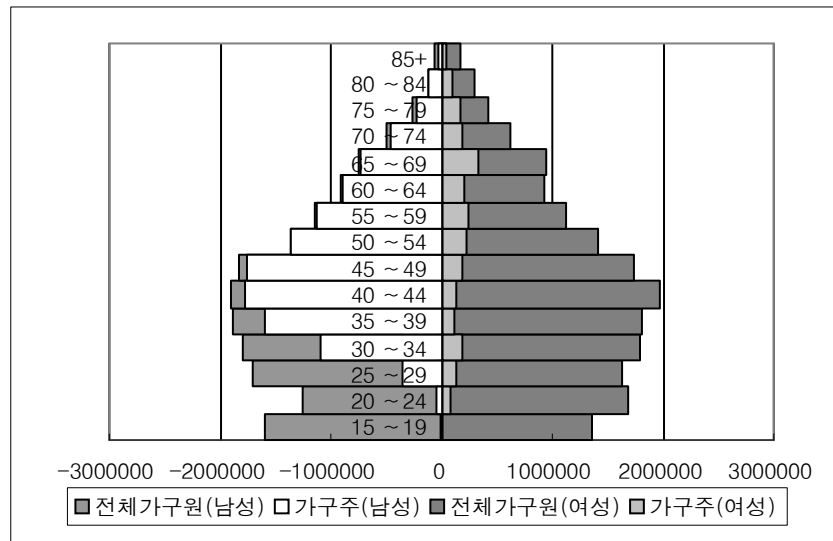
먼저 15세 이상 전체 가구원 대비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3 참조),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부터 가구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0대 초반의 남성 가구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7차년도에는 50대 초반의 비중이 9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40대부터 70대 초반까지의 남성은 90% 이상이 가구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의 경

---

17)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가구주의 비중이 훨씬 낮으며,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70대 초반 여성(39.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40대 전후의 경우 10% 안팎 가량만이 가구주로 파악되어 노동패널조사에서도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남성중심의 가계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7차년도 성·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주: 그림의 가로축 항목의 값들은 가중치를 곱한 후의 케이스임.

다음으로 <표 3-4>를 통해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9.4세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3.2%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가구주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전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40대의 비중이 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7차년도에는 처음으로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4&gt;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999	4,507	4,258	4,248	4,268	4,592	4,762
성별	남성	86.1	86.1	86.0	85.7	85.3	83.5	83.2
	여성	13.9	13.9	14.0	14.3	14.7	16.5	16.8
혼인 상태	미혼	6.6	5.9	6.1	5.6	5.9	6.7	7.5
	기혼유배우	77.3	80.9	80.0	79.7	78.9	77.0	75.6
	기혼무배우	16.1	13.2	13.9	14.7	15.2	16.3	16.9
연령	30세미만	7.6	6.0	4.9	4.7	4.5	4.6	4.7
	30대	27.3	27.0	26.2	23.7	23.0	21.5	22.7
	40대	28.0	27.7	28.2	29.2	28.5	28.8	28.2
	50대	19.5	20.3	19.9	20.2	20.4	20.3	19.6
	60세이상	17.6	19.0	20.8	22.2	23.6	24.8	24.8
	평균(세)	46.4	47.1	47.8	48.4	48.9	49.5	49.4
교육 수준	무학	6.2	6.2	6.1	5.9	6.0	5.7	5.5
	고졸미만	32.2	32.0	32.2	33.2	31.8	30.5	27.7
	고졸	36.1	35.6	35.5	34.1	34.1	33.8	32.6
	대재밋중퇴	2.9	2.7	2.5	2.6	2.4	2.6	3.2
	대졸이상	22.6	23.5	23.7	24.3	25.7	27.4	30.9

##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661명(개인조사 11,217명 + 신규조사자 444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5>를 통해서 7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조사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7차년도 조사에 이르게 되면 여성이 49.2%, 남성이 50.8%로 남성의 비중이 여성을 추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1.1세로 1~7차년도 조사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3-5&gt; 1~7차년도 조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13,321	12,039	11,205	11,051	10,966	11,543	11,661
성별	남성	48.6	48.9	49.3	49.6	49.9	50.1	50.8
	여성	51.4	51.1	50.7	50.4	50.1	49.9	49.2
연령	15~19세	11.8	11.7	11.3	10.3	9.8	8.9	8.9
	20~24세	9.4	9.5	9.4	10.1	10.1	9.5	9.5
	25~29세	11.2	10.8	10.7	10.6	10.5	10.9	10.7
	30~39세	23.0	22.9	22.6	21.7	21.7	21.3	21.5
	40~49세	19.1	19.0	19.2	20.1	20.0	20.6	20.5
	50~59세	12.6	12.5	12.3	12.3	12.3	12.6	12.9
	60세 이상	13.0	13.8	14.6	15.0	15.6	16.1	16.0
	평균(세)	39.2	39.5	39.8	40.1	40.4	41.0	41.1
가구 주 와의 관계	가구주	37.5	37.5	37.7	38.2	38.5	39.5	40.0
	배우자	29.6	29.1	28.7	28.3	28.2	27.2	26.7
	부모	4.0	3.7	3.5	3.1	2.8	2.5	2.2
	자녀	27.1	28.1	28.7	29.2	29.3	29.8	30.0
	형제	1.1	1.1	1.0	0.7	0.7	0.5	0.5
	기타	0.6	0.5	0.5	0.6	0.5	0.5	0.6
혼인 상태	미혼	28.8	29.7	30.6	30.8	31.1	31.9	32.6
	기혼유배우	61.2	62.5	61.4	60.9	60.2	59.2	58.4
	기혼무배우	10.0	7.8	8.0	8.3	8.7	8.9	9.0
교육 수준	무학	6.5	6.3	6.0	5.7	5.6	5.2	4.9
	고졸미만	45.3	33.2	32.2	31.8	30.5	29.4	28.3
	고졸	22.0	32.7	32.4	30.8	30.5	29.7	28.8
	대재밋중퇴	12.1	8.8	9.2	9.9	9.5	9.6	10.1
	전문대졸	4.1	5.9	6.5	7.2	8.0	8.4	8.9
	대졸이상	10.1	13.1	13.8	14.7	15.9	17.7	19.0

7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6.0%로 1차년도(13.0%)에 비해 3%p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의 11.8%에서 8.9%로 낮아졌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21.5%를 차지하고 있는 30대지만, 40대의 경우에도 20.5%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자녀가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형태가 9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조)부모의 비중은 1차년도 4.0%에서 7차년도에는 1.8%p까지 감소한데 반해, 자녀의 비중은 1차년도 2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차년도에는 2.9%p가 증가한 30.0%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가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중도 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도 28.3%에 이르고 있으나 1차년도(45.3%)에 비해서는 17.0%p나 감소한데 반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27.9%로 1차년도 14.2%에 비해 13.7%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한국노동패널의 조사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군입대·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sup>18)</sup>.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7차년도 기간동안 총 출생아는 1,035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차년도 20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년도와 7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중이 각각 55.4%와 50.2%로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년도에는 남아의 비중이 각각 50.7%, 54.1%, 54.7%, 51.2%로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8)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5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lt;표 3-6&gt; 2~7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체	1,035	148	122	191	150	217	209
남 성	523 (50.5)	75 (50.7)	66 (54.1)	87 (45.6)	82 (54.7)	111(51.2)	104 (49.8)
여 성	512 (49.5)	73 (49.3)	56 (45.9)	104(55.4)	68 (45.3)	106(48.8)	105 (50.2)

주: ( )안은 전체대비 비중임.

다음으로 1~7차년도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총 사망자는 427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을 차지했다. 7차년도 조사에 나타난 가구원의 조사망률<sup>19)</sup>은 6.2로,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에 나타난 조사사망률 5.1과 약 1.1%p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2~7차년도 기간동안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60.2%(257명), 여성이 39.6%(169명)로 남성이 약 21%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여성의 비중이 39.0%로 증가하고 4차년도에는 여성이 55.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에는 남성 사망자가 처음으로 60%를 넘어서고 6차년도에는 62.5%를 차지했다가, 7차년도 조사에서는 7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망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1~7차년도 기간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4.3%이며, 50~59세가 11.7%, 60~69세는 21.1%, 70~79세는 23.9%, 80세 이상은 24.6%로 나타나 이 기간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정도가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7차년도 기간동안 사망당시의 평균연령은 68.8세이며, 이 중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 3차년도 69.3세, 4차년도 70.7세, 5차년도 66.8세, 6차년도는 67.3세, 7차년도는 67.1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19) 조사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표 3-7> 2~7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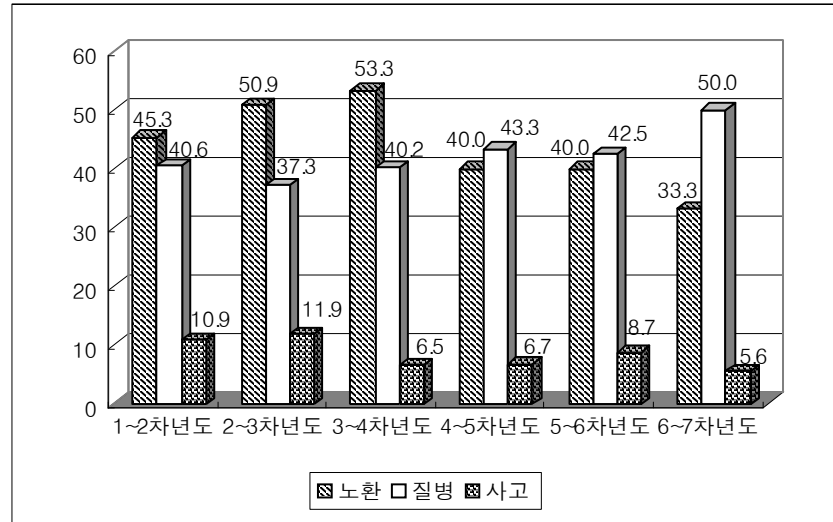
(단위: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27 (100.0)	64 (100.0)	59 (100.0)	92 (100.0)	60 (100.0)	80 (100.0)	72 (100.0)
성별	남 성	257 (60.2)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0 (71.4)
	여 성	169 (39.6)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0 (28.6)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61 (14.3)	12 (19.1)	6 (10.3)	10 (10.9)	9 (16.1)	13 (16.9)	11 (15.3)
	50~60세	50 (11.7)	6 (9.5)	6 (10.3)	12 (13.0)	6 (10.7)	8 (10.4)	12 (16.7)
	60~70세	90 (21.1)	18 (28.6)	15 (25.9)	11 (12.0)	10 (17.9)	20 (26.0)	16 (22.2)
	70~80세	102 (23.9)	14 (22.2)	17 (29.3)	26 (28.3)	21 (37.5)	14 (18.2)	20 (27.8)
	80세 이상	105 (24.6)	13 (14.1)	14 (24.1)	33 (35.9)	10 (17.9)	22 (28.6)	13 (18.1)
	평균(세)	68.8	65.5	69.3	70.7	66.8	67.3	67.1

주: 사망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명 있음.

[그림 3-4]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



6~7차년도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50.0%(3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환이 33.3%(24명), 사고가 5.6%(4명), 기타가 11.1%(8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사망원인이 기타인 경우를 제외한 404명에 대해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다. 분석 결과,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은 노환이 가장 많은 사망원인을 차지하였으나, 5차년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이를 추월하여 4~5차년도 43.3%, 5~6차년도 42.5%, 6~7차년도에는 절반수준까지로 증가하였다.

#### 제 4 절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된 조사는 4차년도부터 가구설문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먼저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7차년도 조사의 경우 친가(또는 시가) 부모님과 친정(또는 처가) 부모님<sup>20)</sup> 어느 한쪽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응답이 65.1%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양가 부모님 모두 계신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으며, ‘친가 부모님만 있다’(11.6%)고 응답한 경우보다 ‘친정 부모님만 있다’(18.8%)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제적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남자쪽

20) 앞서 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모든 가구주가 남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엔 가구주의 부모님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이, 부부 중 남성의 부모님이 된다. 본 절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부부 중 남성의 부모님을 친가(또는 시가) 부모님, 여성의 부모님을 친정(또는 처가) 부모님이라고 하기로 한다.

부모님을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실 경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친가와 친정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가 부모님 모두가 살아 계실 비중은 친가와 친정 모두 약 82%에 이르고 있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약 10% 전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로 사는 친정 부모님의 경우에도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높아져, 이들이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13.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높아져 친가와 친정에서 각각 84.9%와 76.9%

<표 3-8>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단위: %)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친가(또는 시가) 부모님만 있음	10.4	10.7	11.1	11.6
친정(또는 처가) 부모님만 있음	19.1	18.9	19.5	18.8
양가 부모님 모두 있음	35.4	34.8	35.4	34.6
소 계	64.9	64.4	66.0	65.1
양가 부모님 모두 없음	35.1	35.6	34.0	34.9

<표 3-9> 따로 사는 부모님의 생존 여부

(단위: %)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전 체	53.4	6.0	40.6	48.1	6.1	45.7	
가 구 주 의 연 령	30세 미만	78.0	6.3	15.7	86.2	2.9	10.9
	30~39세	70.2	3.4	26.4	68.6	3.4	28.0
	40~49세	48.4	7.4	44.2	44.1	5.9	50.0
	50~59세	22.7	9.0	68.2	22.6	10.9	66.5
	60세 이상	11.3	3.8	84.9	13.2	9.9	76.9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왕래 정도는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친가 부모님과 ‘자주 왕래한다’는 비중이 58.6%, ‘가끔 왕래한다’는 비중은 38.9%인데 반해, 친정 부모님과는 ‘가끔 왕래한다(49.6%)’가 ‘자주 왕래한다’(46.3%)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방문횟수에 있어서도 친가 부모님과의 왕래(자주왕래 월 4.2회, 가끔왕래 연 4.7회)하는 빈도가 친정 부모님과의 왕래(자주왕래 월 3.8회, 가끔왕래 연 4.7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왕래 빈도를 살펴보면,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약 70% 정도가 자주 왕래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중은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먼저 친가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가 있다는 응답은 72.0%인데 반해 여성인 경우에는 6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중은 약 25%인데 반해, 도움을 드리는 비중은 약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적 교

<표 3-10>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단위 : %)

가구주의 연령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자주 왕래	가끔 왕래	거의 안함	자주 왕래	가끔 왕래	거의 안함
전 체		58.6	38.6	2.9	46.3	49.6	4.2
가 구 주 의 연 령	30세 미만	71.4	27.7	0.9	78.6	21.5	0.0
	30 ~ 39세	66.5	32.5	0.9	57.8	39.5	2.7
	40 ~ 49세	51.8	44.0	4.2	38.0	58.0	4.1
	50 ~ 59세	52.7	43.0	4.3	36.7	56.3	7.1
	60세 이상	49.2	43.7	7.1	42.5	50.7	6.8
평균방문횟수		월 4.2회	연 4.7회	-	월 3.8회	연 4.7회	-

<표 3-11>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

월평균 가구소득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경제적 교류 있음	받는 도움	드리는 도움	경제적 교류 있음	받는 도움	드리는 도움
전 체	72.0	28.4	92.3	62.4	21.4	90.9
100만원 미만	49.2	38.4	74.0	40.5	22.7	75.1
100만~200만원	66.9	28.9	90.3	57.5	23.8	87.5
200만~300만원	73.7	29.6	94.5	63.6	23.2	92.9
300만원 이상	81.9	25.3	95.5	72.5	18.4	94.6

료를 한다는 응답이 친가의 경우 49.2%, 친정인 경우에는 40.5%에 그치고 있지만,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가와 교류 있는 가구의 비중이 81.9%, 친정과의 교류가 있는 가구는 7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비중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먼저 연간 총금액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보다는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액은 친가와 친정 모두 188만원으로 동일했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친가가 175만원으로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돈 74만원보다 약 100만원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족중심적인 노인부양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이러한 부양의무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우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2> 따로 사는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혹은 받는 금액

(단위 : 만원)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액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액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지난해 연간총금액	188	175	188	74

## 제 4 장

## 가계 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7차년도(2004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계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 제 1 절 가계소득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 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1~5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6차년도 조사부터는 이전소득 항목 중 정부보조금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타소득에는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7차년도의 경우 2003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대답하게 했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년도의 연간 총소득은 2,907만원(월평균 24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7만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sup>21)</sup>하면, 6차년도에 비해 72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5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총소득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7차년도 조사가구의 최상위 1분위가 차지하는 소득몫이 전체 소득의 31.7%로 최하위 10분위에 비해 5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분위 소득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상위 1분위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몫이 1차년도 30.3%에서 3차년도에 29.8%까지 하락하였으나 7차년도에는 다시 31.7%를 차지하여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10분위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몫은 1차년도 0.4% 수준에서 2~3차년도 기간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나, 4~7차년도 기간동안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4-1>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

(단위: 가구,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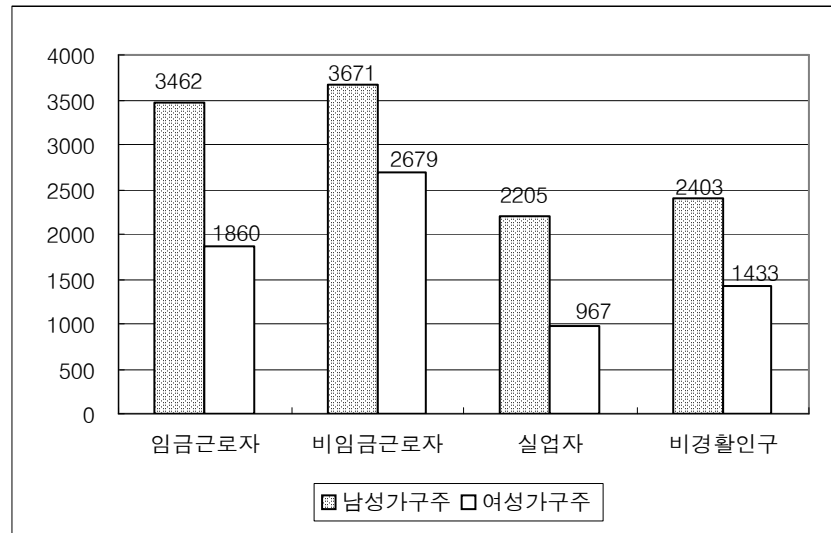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체	5,000		4,359		4,147		4,095		4,298		4,592		4,762	
1분위	5,469	30.3	5,719	30.5	5,927	29.8	6,535	30.6	8,185	31.3	8,579	31.4	9,208	31.7
2분위	2,934	16.3	3,032	16.2	3,185	16.0	3,477	16.3	4,133	15.8	4,448	16.3	4,796	16.5
3분위	2,347	13.0	2,371	12.7	2,485	12.5	2,750	12.9	3,300	12.6	3,506	12.8	3,707	12.7
4분위	1,916	10.6	1,954	10.4	2,152	10.8	2,274	10.7	2,767	10.6	2,860	10.5	3,056	10.6
5분위	1,656	9.2	1,684	9.0	1,804	9.1	1,909	8.9	2,305	8.8	2,392	8.8	2,507	8.6
6분위	1,315	7.3	1,348	7.2	1,492	7.5	1,582	7.4	1,916	7.3	1,998	7.3	2,097	7.2
7분위	1,102	6.1	1,125	6.0	1,200	6.0	1,237	5.8	1,567	6.0	1,623	5.9	1,685	5.8
8분위	774	4.3	827	4.4	893	4.5	915	4.3	1,134	4.3	1,133	4.1	1,185	4.1
9분위	449	2.5	502	2.7	551	2.8	492	2.3	679	2.6	629	2.3	665	2.3
10분위	70	0.4	165	0.9	188	0.9	150	0.7	184	0.7	153	0.6	186	0.6
명목 소득	1,803		1,928		2,039		2,205		2,616		2,730		2,907	
실질 소득	1,999		1,987		2,084		2,205		2,513		2,554		2,626	

21)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 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0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그림 4-1] 7차년도 성별·경제활동상태별 가구 총소득

(단위: 만원)



7차년도 가구 총소득을 가구주의 성별 및 경제활동상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먼저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3,290만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1,721만원)보다 1.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비임금근로자일 때 가구소득이 가장 높아 각각 평균값이 3,671만원과 2,679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인 경우에는 남녀 각각 2,205만원과 967만원,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남녀 각각 2,403만원과 1,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빈곤상태를 <표 4-2>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빈곤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달할 때를 일컫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절대빈곤<sup>22)</sup>은 2차년도 조사(1998년)에서 25.9%를 기록한 이후

22) 절대적 빈곤선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실제 행정적 기준으로 처음으로 사용된

&lt;표 4-2&gt;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절대빈곤율	24.3	25.9	22.4	21.4	17.3	17.6	18.3
차상위계층빈곤율	8.7	8.7	6.7	7.4	5.3	4.6	4.0
상대빈곤율	21.3	18.4	21.3	20.2	20.8	21.0	22.5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17.3%까지 하락하다, 2002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2년 17.6%, 2003년 18.3%를 나타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비중도 1998년 8.7%에 이르던 것이 2003년에는 4.0%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상대빈곤율<sup>23)</sup>은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 당시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율보다 7.5%p가 낮은 18.4%로 나타나고 있지만, 1999년 이후로 다시 상승하여 2003년에는 22.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3>은 7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와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절대빈곤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구주 성별 가구유형을 보면, 여성가구주 가구 중 34.8%가 절대빈곤 가구, 5.9%가 차상위계층의 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가구주 가구 중 15.0%가 절대빈곤 가구, 3.6%가 차상위계층의 빈곤가구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대빈곤 가구 비율은 19.8%p, 차상위계층의 빈곤가구 비율은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주 연령별 절대빈곤 가구 비율은 30세 이하 15.6%, 30대 9.5%, 40

200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해당가구의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한다. 2000년 이외의 연도에 대해서는 각 연도의 명목소득을 2000년 물가기준 실질소득으로 전환한 후 2000년 빈곤선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구의 빈곤지위를 판별하였다.

23) 상대빈곤율은 OECD(1995)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를 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대 11.7%, 50대 13.7%, 60세 이상 37.6%로 나타났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30세 이하 1.9%, 30대 3.1%, 40대 4.5%, 50대 2.3%, 60세 이상 5.7%로 60세 이상 연령의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높고, 여성노인가구주가 남성노인가구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주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절대빈곤 가구의 경우 무학 62.4%, 고졸 미만 26.4%, 고졸 14.3%, 대재 및 중퇴 10.5%, 전문대졸 5.5%, 대졸 이상 7.8%이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무학 6.4%, 고졸 미만 5.7%, 고졸 3.9%,

&lt;표 4-3&gt; 7차년도 가구유형별 빈곤율

(단위 : %)

가구주의 특성		절대빈곤율	차상위계층 빈곤율
전체 가구		18.3	4.0
성별	남성	15.0	3.6
	여성	34.8	5.9
연령	30세 이하	15.6	1.9
	30대	9.5	3.1
	40대	11.7	4.5
	50대	13.7	2.3
	60세 이상	37.6	5.7
교육수준	무학	62.4	6.4
	고졸 미만	26.4	5.7
	고졸	14.3	3.9
	대재및중퇴	10.5	3.8
	전문대졸	5.5	2.9
	대졸 이상	7.8	1.4
경제활동상태	임금근로자	8.0	3.5
	비임금근로자	10.3	3.0
	실업자	30.1	9.7
	비경제활동인구	39.0	4.2
가구구성별	부부단독	32.4	6.2
	부모+ 미혼자녀	10.9	3.2
	편부모+ 미혼자녀	25.6	5.9
	1인가구	31.5	3.7
	비핵가구	20.7	4.4
거주지역별	서울	15.4	3.4
	광역시	18.0	4.5
	도	20.0	3.9

대재 및 중퇴 3.8%, 전문대졸 2.9%, 대졸 이상 1.4%로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절대빈곤 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빈곤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은 절대빈곤 가구의 경우 임금근로자 8.0%, 비임금근로자 10.3%, 실업자 30.1%, 비경제활동인구 39.0%이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임금근로자 3.5%, 비임금근로자 3.0%, 실업자 9.7%, 비경제활동인구 4.2%인데, 가구주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절대빈곤 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빈곤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 빈곤율은 절대빈곤 가구의 경우 부부단독가구 32.4%, 부모와 미혼자녀가구 10.9%, 편부모와 미혼자녀가구 25.6%, 1인가구 31.5%, 비핵가구 20.7%이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부부단독가구 6.2%, 부모와 미혼자녀가구 3.2%, 편부모와 미혼 자녀가구 5.9%, 1인가구 3.7%, 비핵가구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별 빈곤율은 절대빈곤 가구의 경우 서울 15.4%, 광역시 18.0%, 도 지역 20.0%이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서울 3.4%, 광역시 4.5%, 도 지역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4-4>에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가구소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IMF 직후인 2차년도 조사 당시 83.4%로 1차년도에 비해 2.4%p가 하락하였으나, 이후 3차, 4차년도에 각각 85.8%와 87.4%로 증가하다가, 5차년도에 다시 84.2%로 하락하였고, 6차년도부터 다시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여 6차년도 84.7%, 7차년도 85.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원은 전체 소득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소득이며, 이진소득이 3.2%, 기타소득 2.9%, 사회보험소득 2.0%, 금융소득은 1.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5차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6차년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며, 퇴직금이나 증여/상속재산 등 기타소득의 비중은 증가하였다가 7

&lt;표 4-4&gt;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단위: 가구, %, 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5,000	4,359	4,147	4,094	4,298	4,592	4,762
근로소득	85.8	83.4	85.8	87.4	84.2	84.7	85.6
금융소득	2.5	2.2	3.3	2.0	1.7	1.3	1.1
부동산소득	2.1	4.2	2.7	3.0	6.7	5.4	5.1
사회보험소득	2.7	1.2	1.4	1.5	2.0	1.9	2.0
이전소득	2.1	2.7	2.4	2.7	3.3	3.4	3.2
기타소득	4.9	6.2	4.3	3.4	2.2	3.3	2.9
연평균총소득	1,803	1,928	2,039	2,205	2,616	2,730	2,907

차년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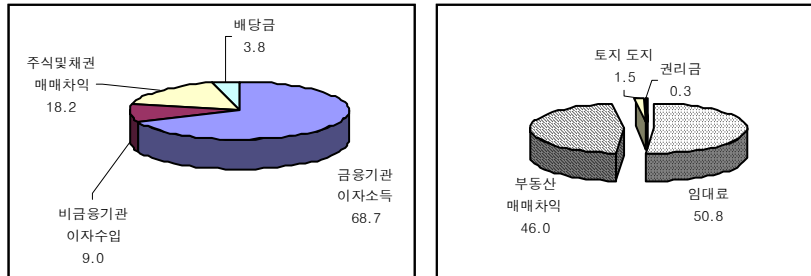
각각의 소득원천에 대한 항목별 구성을 살펴보면(그림 4-2 참조),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6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이 18.2%, 비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9.0%를 차지하였으며, 배당금의 비중은 3.8%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료가 5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부동산 매매차익이 46.0%로 나타났다. 반면 권리금과 토지를 도지 준 것은 각각 0.3%와 1.5%에 그치고 있다. 한편 5차년도 조사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이 가장 많은 비중(54%)을 차지하였으나, 6차년도 조사부터는 부동산 임대료로 인한 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sup>24)</sup> 이는 5차년도 가구의 급격한 소득 증가가 부동산소득, 특히 부동산 매매차익에 인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그림 4-3]과 같이 이전소득의 항목별 구성 비중은 친척친지 보조금이 8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기타정부보조금은 각각 8.1%와 3.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5)</sup>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부조 형태가 여러 선진국처럼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의 형태가 아니라,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혈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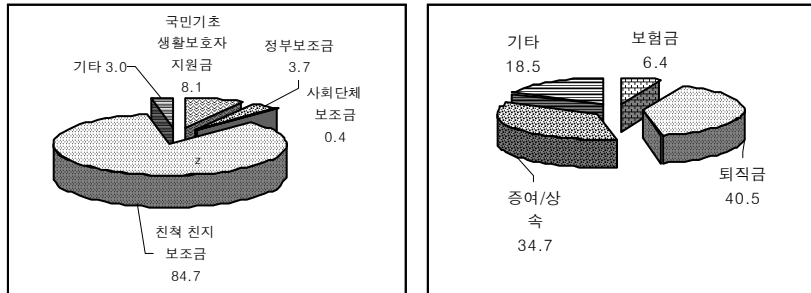
24) 5차년도 소득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5차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 pp.71~72를 참조하기 바란다.

25) 1~5차년도 조사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되던 정부보조금을 6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기타정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림 4-2] 7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단위: %)



[그림 4-3] 7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단위: %)



에 의한 사적이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원으로는 퇴직금이 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여/상속이 34.7%, 보험금의 비중은 6.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 2 절 가계소비

이 절에서는 7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계소비는 작년 한 해(7차년도의 경우 2003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

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 외식비 (3)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4)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5)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6)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7) 경조사비, (8) 보건의료비, (9)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10)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1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12) 용돈, (13) 피복비, (14) 현금 및 각종 기부금, (15)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16) 대중교통비, (17)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 예·적금, (2) 개인연금, (3)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4)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5) 계, (6)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 1. 생활비

<표 4-5>는 1~7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12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의 경우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차년도와 비교할 때 생활비의 증가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3차년도는 전년도보다 7만원이 증가한 108만원, 4차년도에는 118만원, 5차년도에는 137만원, 6차년도에는 151만원, 7차년도에는 16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항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19.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차년도 조사에서는 9.7%까지

&lt;표 4-5&gt; 1~7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986	4,473	4,248	4,211	4,290	4,567	4,746
50만원 미만	19.3	16.9	16.4	13.9	12.3	10.8	9.7
50만~75만원 미만	23.2	21.8	22.1	17.3	13.3	12.0	10.3
75만~100만원 미만	12.3	14.9	11.3	13.3	9.7	9.6	9.1
100만~150만원 미만	26.6	29.9	27.9	30.0	28.4	25.5	23.0
150만~200만원 미만	12.5	11.9	15.6	16.6	20.6	20.0	21.0
200만원 이상	6.0	4.5	6.8	8.9	15.8	22.0	27.9
월평균 생활비	101	101	108	118	137	151	163

감소한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에는 6%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7차년도에는 2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을 통해 가구의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6.7%, 50만~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27.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65%는 월 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00만~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

&lt;표 4-6&gt;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55	1,273	1,043	1,275
50만원 미만	36.7	1.8	0.3	
50만~75만원 미만	27.9	10.0	1.5	0.2
75만~100만원 미만	13.1	15.3	5.9	1.5
100만~150만원 미만	14.9	41.0	28.4	7.7
150만~200만원 미만	4.6	25.5	38.5	17.9
200만원 이상	2.8	6.4	25.4	71.7
월평균 생활비(만원)	71.9	128.3	174.1	2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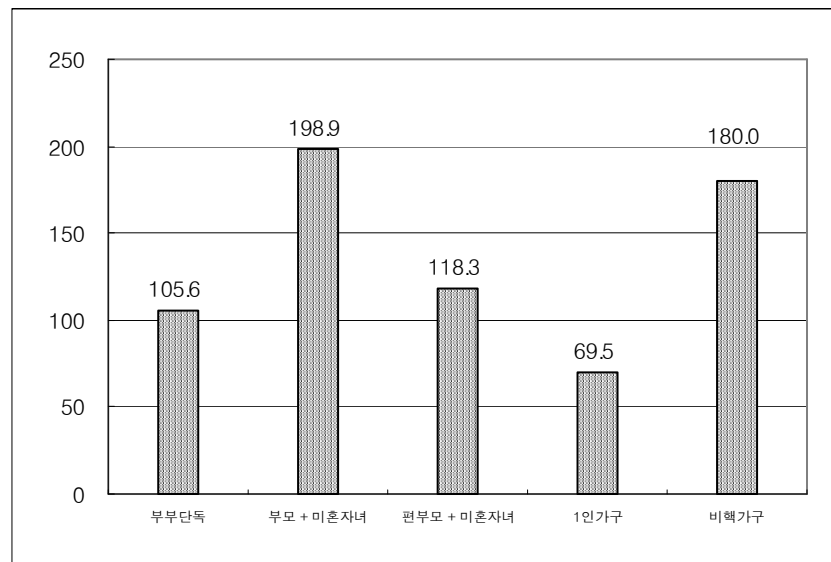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50만~2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8.5%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71.7%에 이르고 있어, 가구 소득수준별로 생활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계층별 평균생활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평균생활비는 265.4만원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평균생활비 71.9만원)보다 3.7배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4]를 통해서 7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가구구성별로 전형적인 핵가족 구성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198.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가구가 69.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확대가족을 의미하는 비핵가족의 경우 180.0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더 많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미혼자녀 가구보다 월평균 생활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생활비는 118.3만원으로 부부단독가구(105.6만원)의 생활비보다 12.7만원 정도 높았다.

[그림 4-4] 7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



거주지역별 생활비는 가구 소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182.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는 158.0만원, 도 지역은 155.0만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sup>26)</sup>을 살펴보면(표 4-7 참조),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19.8%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차년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외식비의 비중은 2차년도 3.2%에서 4차년도 3.9%, 5차년도 4.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6차년도 4.0%, 7차년도 3.7%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공교육비는 2차년도 9.3%에서 4차년도 8.2%, 5차년도 7.1%, 6차년도 6.9%, 7차년도 5.8%로 감소하였으나, 사교육비의 비중은 2차년도 8.4%에서 4차년도 8.9%, 5차년도 8.9%, 6차년도 10.0%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8.7%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거비 및 경조사비의 부담정도는 2~7차년도 기간 동안 각각 3.4%p와 4.6%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현금 및 기부금의 비중은 1.7%,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의 비중은 5.3%, 대중교통비의 비중은 2.7%로 조사되었고, 6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피복비의 비중은 3.0%로 조사되었고, 5차년도 조사부터 추가적으로 조사된 용돈의 경우에는 12~14% 안팎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4차년도 이후 조사된 통신비의 비중 또한 7% 이상으로 나타나 인터넷 및 휴대전화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차년도 주요 생활비 항목을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그림 4-5 참조), 가구소득별 생활비 지출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은 용돈과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비록 가구당 자녀의 수나 가구원 수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으나, 사교육비의 경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평균 2만6천원인데 비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평균 29만

26) 한국노동패널 2, 4, 5, 6, 7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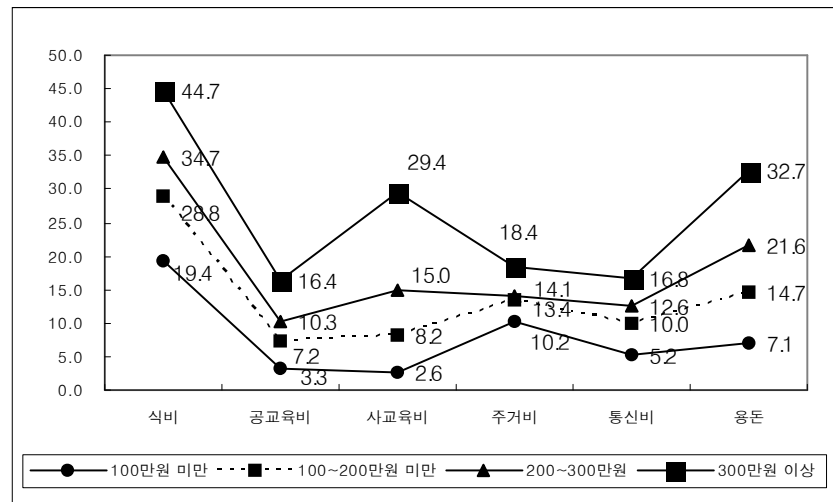
<표 4-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체 생활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비	34.5	28.4	24.1	21.4	19.8
외식비	3.2	3.9	4.2	4.0	3.7
공교육비	9.3	8.2	7.1	6.9	5.8
사교육비	8.4	8.9	8.9	10.0	8.7
차량유지비	9.0	10.5	9.8	9.7	9.3
주거비	12.1	11.6	9.8	8.8	8.7
경조사비	8.3	5.0	4.5	4.4	3.7
보건의료비	5.1	4.2	3.7	3.6	3.3
문화비	2.3	5.2	2.2	2.3	2.1
내구재비	2.2	1.3	1.4	1.6	1.2
통신비	-	7.2	7.4	7.4	7.0
용돈	-	-	14.4	14.1	11.9
피복비	-	-	-	3.6	3.0
현금부담금	-	-	-	-	1.7
국민연금및의료보험료	-	-	-	-	5.3
대중교통비	-	-	-	-	2.7
기타	5.8	5.5	2.5	2.3	2.1

[그림 4-5]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요 생활비

(단위: 만원)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소득계층간에 27만원 가량의 격차가 나타났다. 용돈 항목의 경우에도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가구당 7만1천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2만7천원으로 26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와 통신비 같이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지출은 소득계층별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저 축

7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4.9%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2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8 참조).

1~7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53.9%에서 2차년도 52.6%와 3차년도 51.5%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4차년도에는 69.8%까지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73.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중은 65.6%, 7차년도에는 64.9%로 소폭 감소하였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 또한 1차년도에는 33만3천원에서 2차년도(24만8천원)까지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3차년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7차년도에는 42만9천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이나 생활비 지출과 그 맥락을 거의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그림 4-6]을 통해 각 소득계층별 저축을 한 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이후 감소된 저축률의 회복이 주로 고소득가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의 저축률은 여전히 그 회복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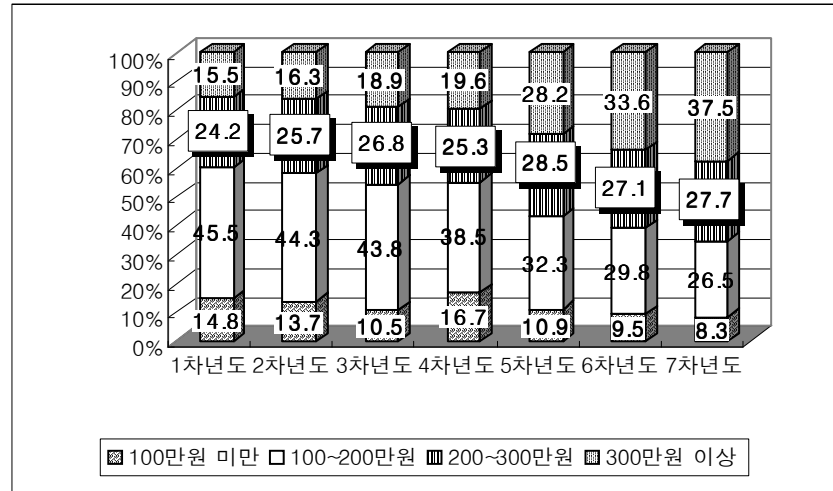
<표 4-8> 1~7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 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965	4,458	4,247	4,186	4,292	4,592	4,761
저축 안함	46.1	47.4	48.5	30.2	26.8	34.4	35.0
저축함	53.9	52.6	51.5	69.8	73.2	65.6	64.9
월평균저축액	33.3	24.8	28.7	34.5	41.7	40.7	42.9

[그림 4-6] 1~7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가구의 경우 1차년도 당시 저축을 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 그치고 있으나,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3차년도에도 1차년도보다 3.4%p 증가한 18.9%로 나타나고 있으며, 7차년도에는 37.5%까지 증가하고 있다. 7차년도에 월평균 소득이 200만~300만원인 가구 역시 5차년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차년도 이후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가구는 1차년도에 전체 저축을 한 가구 중에서 45.5%를 차지하였으나, 7차년도에는 오히려 19%p가 감소한 26.5%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차년도 14.8%에서 7차년도에는 8.3%까지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살펴볼 때 저소득가구는 최근 전반적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 4-9>를 통해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의 경우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94.8%로, 이들 소득계층의 경우 저축액수 측면에서도 그다지 큰 액수를 저축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200

만원 미만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월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비중이 67.6%로 가장 높으며, 월소득 200만~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50만~100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27.2%에 이르고 있다.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의 경우에는 39.6%가 월 100만원 이상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 규모별 월평균 저축액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월평균 저축액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22만5천원인 데 반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109만6천원으로 약 4.9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7]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교육비’와 ‘노후생활 대비’가 각각 15%와 14%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12%로 그리 크지 않았으며, 결혼이나 상제례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비중 역시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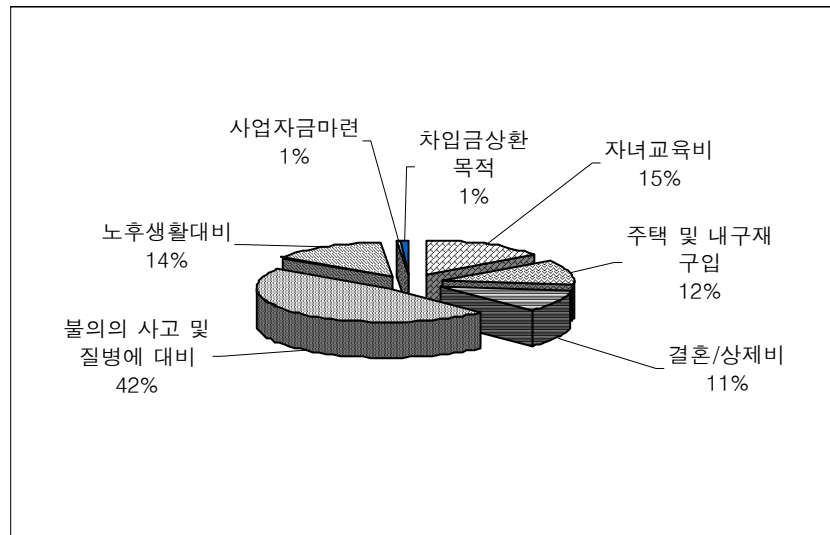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4-8]을 통하여 가구구성별로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 보면, 비핵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이 7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저축액이 41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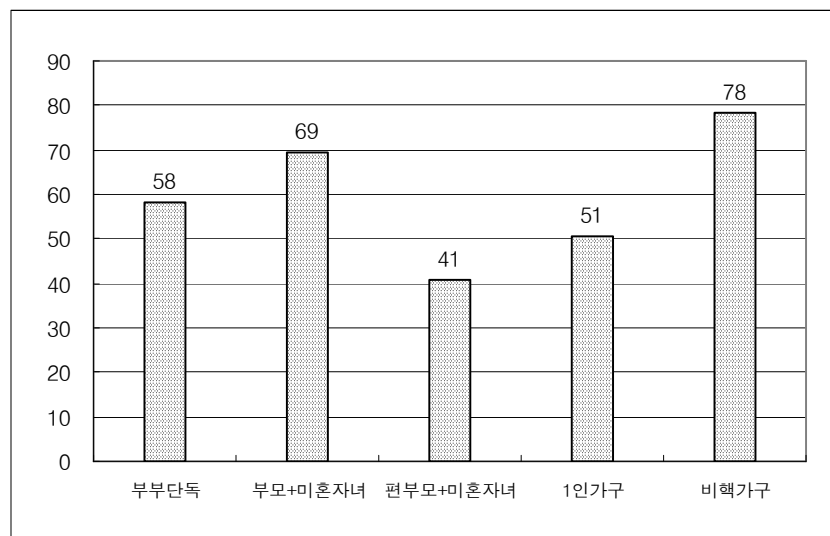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가구수)	269	829	871	1,130
25만원 미만	94.8	67.6	40.3	23.8
25만~50만원 미만	1.9	16.8	20.9	14.0
50만~100만원 미만	2.7	13.3	27.2	22.6
100만원 이상	0.7	2.3	11.6	39.6
월평균 저축액(만원)	22.5	32.1	52.7	109.6

[그림 4-7] 7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그림 4-8] 7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만원)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이 80만7천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54만9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도 지역은 6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7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sup>2</sup>)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먼저 <표 4-10>을 통해 7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60.7%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3.1%, 월세 10.6%로 나타났다. 1~7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1차년도 55.8%에서 7차년도에 이르러 60.7%까지 증가한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40.3%에서 6.6%p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0> 1~7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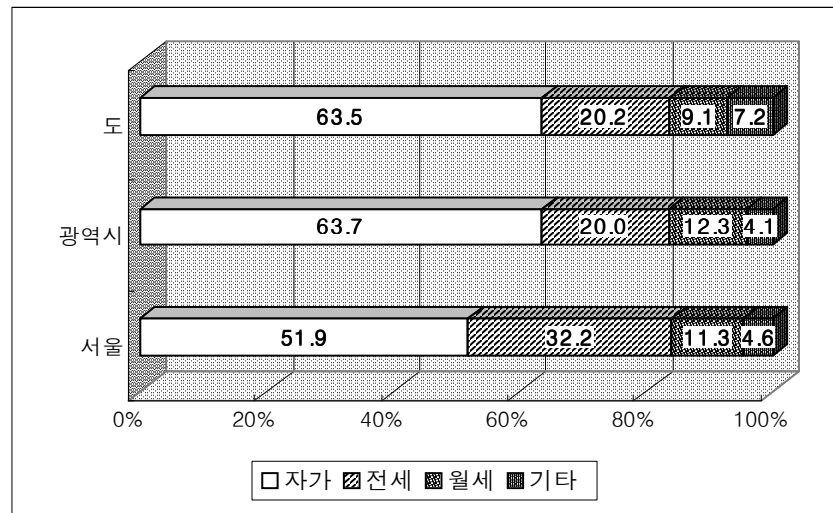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5,000	4,508	4,258	4,248	4,286	4,592	4,762
자 가	55.8	56.6	56.8	59.2	60.1	61.1	60.7
전 세	31.0	30.1	30.4	28.6	27.6	23.8	23.1
월 세	9.3	9.1	8.4	7.6	7.3	9.2	10.6
기 타	3.8	4.2	4.3	4.6	5.0	5.9	5.6

[그림 4-9]를 통하여 7차년도 조사가구의 거주지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 지역의 자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전·월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 자가 비중은 광역시가 63.7%로 서울(51.9%)보다 11.8%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 지역(63.5%)에 비해서도 0.2%p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전세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 비중은 32.2%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역시는 20.0%, 도 지역은 20.2%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세 비중은 광역시가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은 11.3%, 도 지역은 9.1%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9] 7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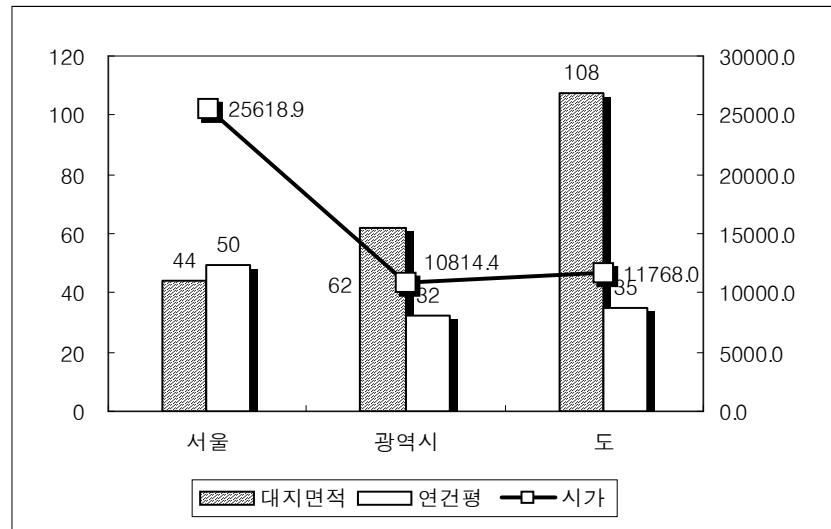


이러한 거주지별 편차는 집값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0]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8평인데 비해서 광역시는 62평, 서울은 44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50평인데 비해서 도 지역은 35평, 광역시는 32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2억5천619만원인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42.2%에 해당하는 1억814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억1천7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서울의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의 주거공간이 타 지역에 비해 넓고 집값 또한 2배 가량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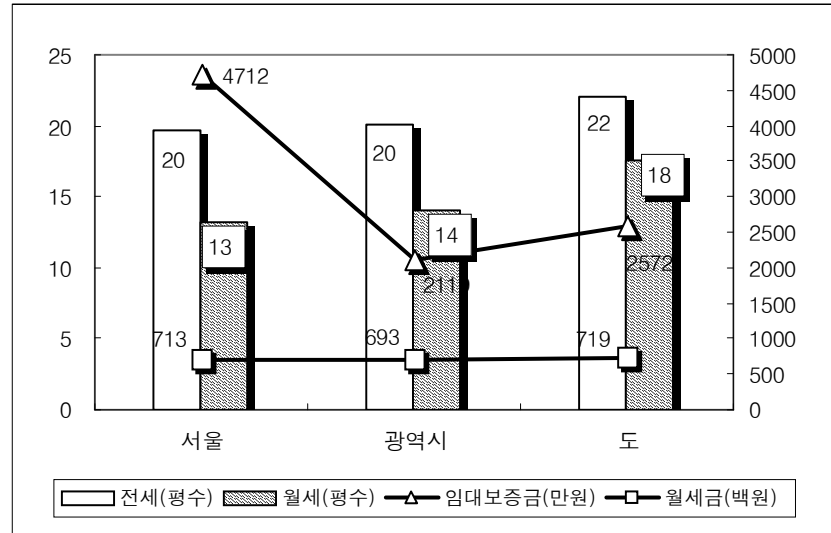
[그림 4-10] 7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원)



[그림 4-11] 7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단위: 평, 만원)



다음으로 [그림 4-11]은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주택의 실제 사용평수와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전세인 경우 도 지역의 평수가 22평으로 20평에 그친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2평 정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도 비슷한데 도 지역에 거주할 경우 실제평수가 18평인데 비해 광역시는 14평, 서울은 13평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세 거주자의 실제 평수는 전세에 비해 4~7평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세 거주자가 월세 거주자에 비해서는 활용가능한 주거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전·월세 평균 임대보증금은 4천712만원으로 광역시(2천119만원)보다는 약 2.2배 정도 높으며, 도 지역(2천572만원)보다도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금은 도 지역의 경우 7만2천원, 서울은 7만1천원인데 비해 광역시는 6만9천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표 4-11>은 1~7차년도 주택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7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41.4%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34.1%를 차지한 단독주택과 10.1%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간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1차년도 3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차년도에 이르러 9.4%p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00년 49.9%),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00년 36.8%)라는 추세가 노동패널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별 주택 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12]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 서울의 경우 19.4%에 이르지만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10.0%, 5.3%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중(각각 33.8%, 38.4%)이 서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거주자의 비중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36.4%로 광역시(43.2%)와 도 지역(42.8%)에 비해 낮지만, 단독주택보다는 오히려 10.2%p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 응답자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30.6%로 도 지역(11.9%)과 광역시(18.7%)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13]은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자가의 분포와 유사하게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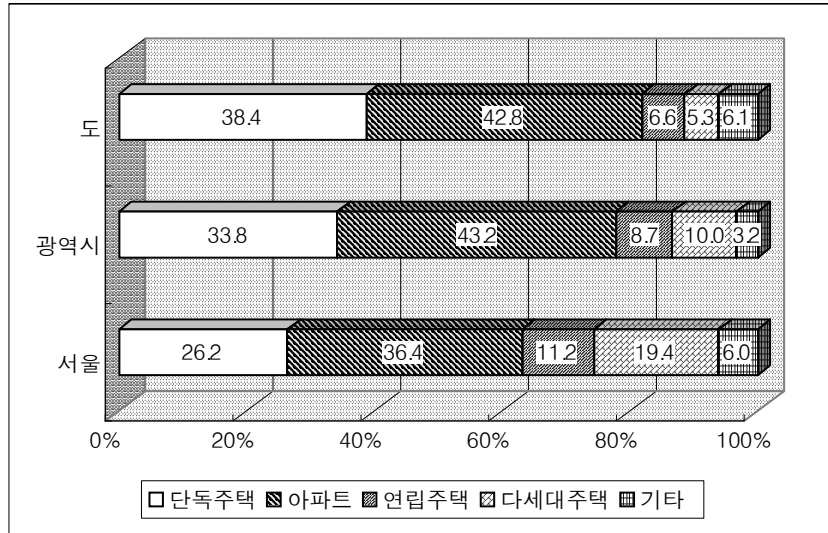
<표 4-11> 1~7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996	4,506	4,250	4,248	4,286	4,592	4,762
단 독 주 택	39.2	38.4	37.8	38.0	36.5	36.6	34.1
아 파 트	32.0	33.5	34.5	35.7	37.3	39.6	41.4
연 립 주 택	8.1	7.8	8.0	7.8	7.7	7.5	8.3
다 세 대 주 택	16.2	15.3	14.8	12.0	12.3	10.2	10.1
기 타	4.5	5.0	4.9	6.6	6.1	6.2	5.3

[그림 4-12] 7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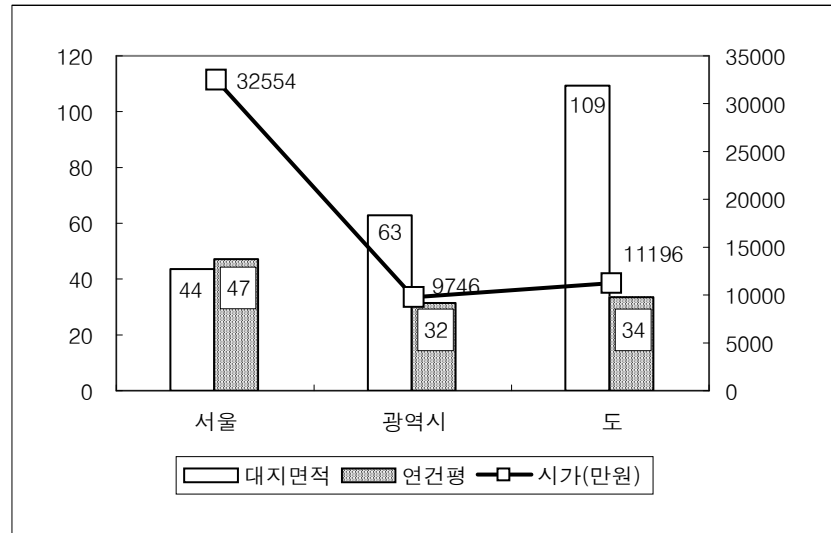


역이 109평으로 가장 넓은 데 비해서 연건평은 서울이 47평으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주거지 시가의 경우 서울은 평균 3억2천554만원인데 비해서 타지역은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9천746만원(광역시)과 1억1천196만원(도 지역) 수준이었다.

이어서 [그림 4-14]는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와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가 자기 집인 경우 아파트 평수는 모든 지역이 29~30평 사이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월세인 경우에도 아파트 평수는 서울이 25평, 광역시가 22평, 도 지역이 24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 소유자일 경우 아파트 시가를 살펴보면, 서울이 2억9천134만원으로 광역시(1억1천771만원)보다는 2.5배, 도 지역(1억4천919만원)보다는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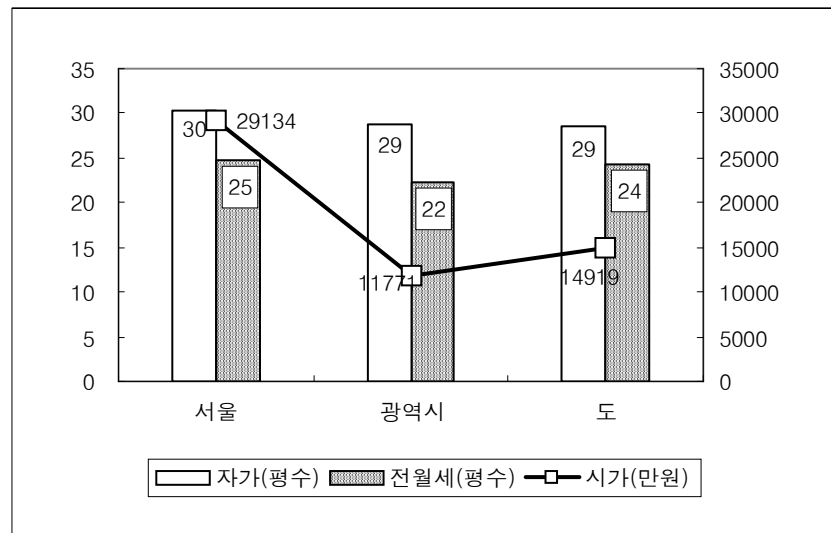
[그림 4-13] 7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단위: 평, 만원)



[그림 4-14] 7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단위: 평, 만원)



## 제 4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7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7차년도의 경우 2004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등을 포함한다.

### 1. 부동산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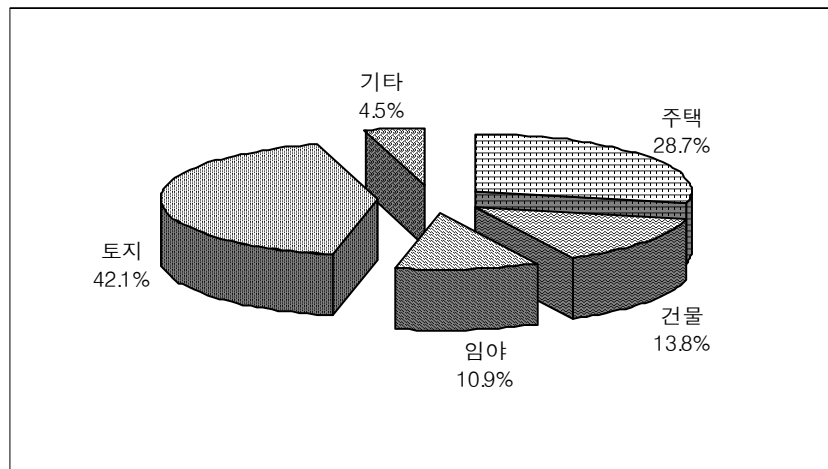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7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1.3%로 전년도에 비해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시가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7차년도의 경우 1억~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지만,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부동산 시가가 3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에 1.5%에서 3차년도에 0.2%p 정도 감소했으나, 7차년도에는 3.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3차년도와 4차년도에 각각 7.6%,

&lt;표 4-12&gt;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부동산 소유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78.8	78.7
있 음	21.3	20.0	22.3	22.3	21.2	21.3
1천만원 미만	8.7	6.3	8.3	5.8	6.8	6.1
1천~5천만원 미만	28.9	30.2	27.7	24.1	28.5	21.6
5천~1억원 미만	24.2	24.0	26.5	26.5	19.1	19.2
1억~3억원 미만	28.4	30.7	26.5	31.0	28.8	30.2
3억~5억원 미만		5.3	4.4	5.9	7.1	9.4
5억~10억원 미만	3.6	2.3	2.8	4.0	5.8	7.1
10억원 이상	1.5	1.3	1.8	1.8	2.8	3.2
잘 모르겠음	4.6	-	2.0	0.9	1.0	3.2

[그림 4-15] 7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증가하여 7차년도에는 16.5%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7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림 4-15]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28.7%, 건물이 13.8%, 임야가 10.9%, 기타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13>을 통해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총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의 시가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1천만~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35.4%)이 가장 높은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는 1억~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3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51.5%로 절반이 넘는 데 반해, 월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4.3%,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5.5%,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6.6%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저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자산이 1억~3억원 미만인 경우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20.6%를 차지하고 있지만,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5.7%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 가구 중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80	203	183	420
1천만원 미만	16.1	9.3	5.6	1.1
1천만~5천만원 미만	35.4	25.0	19.9	15.5
5천만~1억원 미만	16.2	25.2	18.2	17.9
1억~3억원 미만	20.6	22.2	34.5	35.7
3억~5억원 미만	3.8	10.9	6.7	12.0
5억~10억원 미만	2.0	4.2	6.3	10.7
10억원 이상	0.0	0.3	4.3	5.3
잘 모르겠음	5.9	2.9	4.5	1.8

## 2. 금융자산

<표 4-14>를 통해서 7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3차년도 64.9%, 4차년도 65.9%, 5차년도 66.3%, 6차년도 63.3%, 7차년도 60.4%로 지난 7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1,344만원에서 3차년도 1,396만원, 4차년도 1,582만원, 5차년도 1,598만원, 6차년도 1,674만원이었으며, 7차년도에는 2차년도보다 316만원이 증가한 1,66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7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4%, 250만~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5.7%, 500만~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소득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소득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7차년도의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늘고,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였다.

&lt;표 4-14&gt;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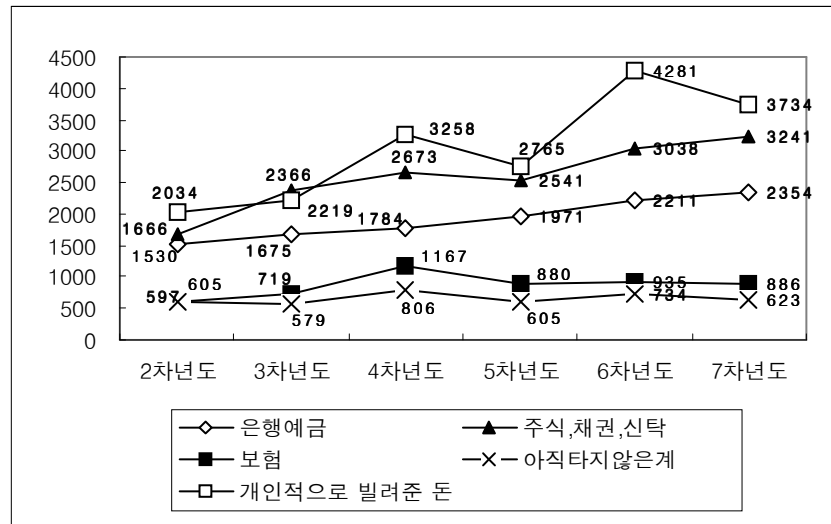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없음	28.8	35.1	34.1	33.7	36.7	39.6
250만원 미만	15.7	12.7	14.7	12.4	11.8	11.4
250만~500만원 미만	8.6	7.4	6.1	5.6	5.3	5.7
500만~1000만원 미만	12.7	12.4	12.3	11.4	10.8	9.7
1000만~5000만원 미만	27.8	25.2	25.4	27.7	27.2	24.7
5000만~1억원 미만	4.4	4.6	4.4	6.1	4.7	5.3
1억원 이상	2.0	2.7	3.1	3.0	3.6	3.6
평균(만원)	1,344	1,396	1,582	1,598	1,674	1,660

주: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다음으로 [그림 4-16]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2차년도에 평균 2,034만원이었으나 4차년도에 3,258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6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4,281만원이었으나 7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3,73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간 격차 또한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원으로 은행예금(1,530만원)보다 136만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1만원과 88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5차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570만원으로 좁혀졌으나, 6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다시 827만원이 되었고 7차년도에는 887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저축성보험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차년도 597만원에서 4차년도에는 최고 1,167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88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6차년도에는 조금 증가한 935만원이었다가 7차년도에

[그림 4-16] 2~7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단위: 만원)



는 다소 감소하여 88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 타지 않은 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년도와 7차년도 조사에서 각각 평균 605만원과 62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표 4-15>는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5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하였다. 월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45.2%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비중이 19.0%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월소득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금융자산 1,000만~5,000만원 미만으로 그 비중이 30.2%에 이르며,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은 30.5%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22.4%까지 크게 줄어들었으며, 1,000만~5,00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39.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졌다는 응답도 11.6%에 이르며, 1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비중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계층별 금융자산 소유의 불평등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66	1,275	1,045	1,276
없음	59.8	45.2	30.5	22.4
250만원 미만	17.5	13.9	9.2	5.8
250만~500만원 미만	4.7	6.9	8.3	3.5
500만~1천만원 미만	5.3	10.5	14.6	8.8
1천만~5천만원 미만	9.6	19.0	30.2	39.5
5천만~1억원 미만	1.6	3.1	4.5	11.6
1억원 이상	1.5	1.4	2.7	8.5

특이한 점은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금융자산을 1억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1.5%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 계층에 속한 가구의 가구주가 은퇴한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가구의 부채

7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6.8%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0.6%) 당시보다 약 6.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평균 부채잔액도 1차년도 773만원에 그쳤으나 2차년도 1,045만원, 3차년도 1,043만원, 4차년도 1,072만원, 5차년도 1,092만원, 6차년도 1,152만원, 7차년도 1,227만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긴 했지만, 가계부채 또한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장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패널자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6> 부채잔액 분포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 체	4,942	4,491	4,259	4,225	4,281	4,581	4,742
부채 없음	59.4	51.2	55.4	52.4	52.5	52.9	53.2
500만원 미만	6.8	7.7	5.9	6.3	5.9	5.0	4.1
500만~1천만원 미만	5.8	7.4	6.4	6.7	6.5	6.1	5.4
1천만~5천만원 미만	24.8	27.2	25.1	27.7	27.8	27.0	27.1
5천만원 이상	3.3	6.5	7.3	6.9	7.3	9.0	10.2
평균(만원)	772.8	1,044.6	1,043.4	1,072.0	1,091.9	1,151.9	1,227.3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다음으로 7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의 분포를 부채잔액별로 살펴보면 <표 4-17>과 같다. 먼저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65.5%에 이르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중도 함께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48.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 부채잔액의 비중이 가장 크게 변동하는 구간은 5,000만원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4%에 그치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6.3%로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잔액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모든 소득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5%만이 이 구간에 해당되지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가구는 28.7%, 200만~300만원인 가구는 32.7%,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5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 부채잔액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748만원, 월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43만원,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63만원,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20만원으로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부채잔액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7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잔액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63	1,267	1,041	1,271
부채 없음	65.5	49.5	49.6	48.3
500만원 미만	5.2	5.7	2.4	2.9
500만~1천만원 미만	6.5	6.7	5.5	2.7
1천만~5천만원 미만	17.5	28.7	32.7	29.8
5천만원 이상	5.4	9.4	9.8	16.3
평 균(만원)	747.6	1,242.8	1,363.0	1,5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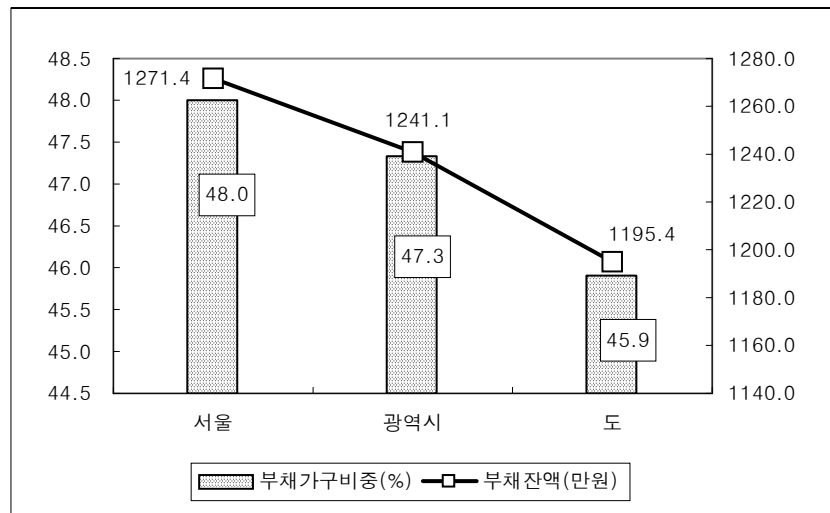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이어서 [그림 4-17]을 통해 거주지별로 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48%로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 지역이 45.9%로 낮게 나타났다.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부채가구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지역의 경우 평균 부채잔액이 1,195만원으로 서울(1,271만원)보다 76만원 정도 적고, 광역시에 비해서 46만원 정도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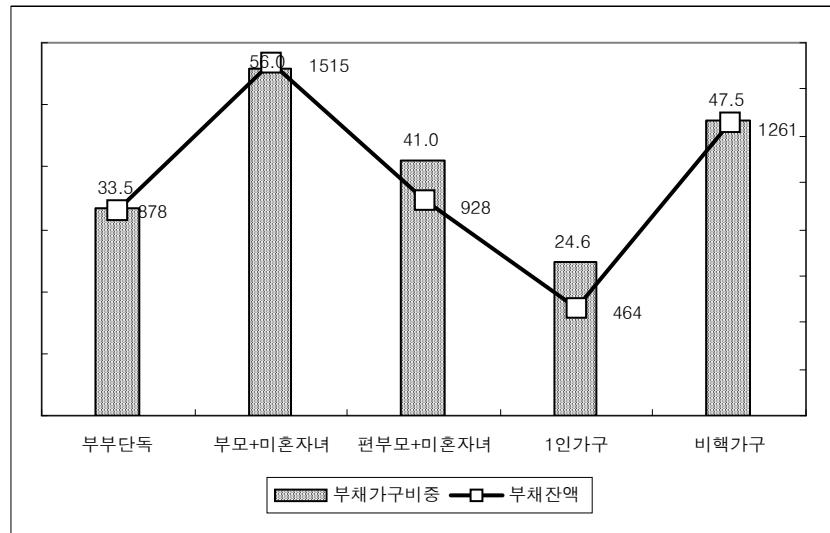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4-18]을 통하여 가구구성별 부채가 있는 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핵가족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부채가구의 비중이 56%로 가장 높으며,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부채가 있다는 비중이 41%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문제로 인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확대가족 형태의 비핵가구의 경우에도 47.5%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구성별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부채잔액이 가장 높은 가

[그림 4-17] 7차년도 가구의 거주지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그림 4-18] 7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단위: %, 만원)



구형태도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로 1,5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비핵가족(1,261만원),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928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부단독가구나 1인가구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3.5%와 24.6%로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평균 부채잔액 또한 각각 878만원, 464만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장

## 자녀 교육

본 장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실태 및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에서는 대학(원)생 자녀로까지 확대 조사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서 조사되는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종류는 (1)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2)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3) 동거하고 있는 타인, (4)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 (5) 학원, (6) 개인 및 그룹과의, (7) 학습지, (8)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별도의 수업료를 지불한 경우), (9) 방과후 교실(학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특기지도 혹은 보충학습), (10) 국공립 어린이집, (11) 민간 어린이집, (12) 사설놀이방, (13) 직장보육시설, (14) 정규 유치원, (15) 시간연장제 유치원, (16) 종일제 유치원, (17) 어학연수, (18) 인터넷(온라인 교육) 유료 강좌

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종류는 5차년도(2002년)까지는 조사되었으나, 6차년도(2003년) 조사에는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종류와 이용횟수 그리고 이용시간을 제외한 이용여부와 월평균 수업료만 조사하였고, 7차년도 조사에서는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종류를 포함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계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7차년도에 조사된 자녀교육 항목을 중심으로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실태와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과 이용하고 있는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제2절에서는 자녀교육에 따른 가

<표 5-1> KLIPS 7차년도 재수생 이하 자녀의 교육관련 측정항목

자녀번호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여부	사교육 종류	월평균 수업료(만원)
첫 번째 자녀	1.이용함 2.이용안함	항목 (1)~(18)	1인당 지출비용 총액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			

<표 5-2> KLIPS 7차년도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관련 측정항목

자녀번호	연평균 정규학교 등록금(만원)	월평균 등록금 외 지출 비용(만원)
첫 번째 자녀	가계의 실제 부담금액	1인당 지출비용 총액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		

계의 총 지출비용을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대상은 7차년도에 조사된 4,762가구 중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2,062가구와 대학(원) 자녀가 있는 768가구와 이들 가구의 개별 자녀이다. 특히,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 이용종류 그리고 지출비용에 있어서는 이를 이용하는 자녀가 없는 511가구를 제외한 1,551가구와 2,418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어머니 특성과 관련된 분석의 결과는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9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본 장의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7차년도 가구가중치가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 제 1 절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2,062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구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고,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하였다. 우선 가구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률은 가구내 재수생 이하 자녀수(B)대비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자녀수(A)의 비율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표 5-3>과 <표 5-4>는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이용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5-3>에 정리되어 있는 가구 특성에 따른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선 분석대상 가구 전체의 평균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이용률은 7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각의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재수생 이하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이용률이 78.2%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로 구분할 경우 4명의 가구원이 있

는 가구의 경우가 77.2%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 가족구성으로 구분하면 핵가족과 비핵가족은 각각 72.1%와 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용률을 제시한 월평균 가구총소득 수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이용률은 47.2%인데 반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은 90.5%로 그 차이가 43.3%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76.0%로 가장 높고, 광역시와 도 지역은 모두 6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에서는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92가구가 제외된 1,970가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률을 비교하였다. 분석가구의 전체 평균 이용률은 72.4%로 어머니의 정보

<표 5-3> 가구 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

(단위: %)

특성	범주	구성비율	이용률
재수생 이하 자녀수	1명	36.3	61.9
	2명	56.0	78.2
	3명 이상	7.7	65.8
가구원수	3명 이하	22.8	60.0
	4명	56.8	77.2
	5명	15.7	69.4
	6명 이상	4.7	62.7
가족구성	핵가족	87.2	72.1
	비핵가족	12.8	66.3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24.6	47.2
	100만~200만원 미만	28.2	62.6
	200만~300만원 미만	22.0	70.8
	300만~500만원 미만	18.1	82.0
	500만원 이상	7.1	90.5
거주지역	서울	24.0	76.0
	광역시	28.4	69.9
	도	47.6	69.9
전 체		100.0	71.3

&lt;표 5-4&gt;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

(단위: %)

특성	범주	구성비율	이용률
연령	만 30세 미만	7.4	39.5
	만 30~39세	50.8	76.7
	만 40세 이상	41.8	73.0
교육수준	고졸 미만	14.4	51.4
	고졸	55.6	76.2
	전문대졸	12.7	71.4
	대졸 이상	17.4	79.3
취업상태	취업	50.1	79.1
	미취업	49.9	73.4
전 체		100.0	72.4

가 없는 가구도 포함된 2,062가구의 전체 평균 이용률 71.3%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세 범주로 구분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가구의 이용률이 76.7%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73.0%, 20대 39.5%로 나타났다. 20대의 젊은 어머니의 경우에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자녀가 사교육이나 탁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인 가구의 이용률이 79.3%로 가장 높고, 고졸(76.2%)의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71.4%)의 경우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고졸 미만의 경우가 5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률의 차이가 27.9%p로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의 이용률(79.1%)이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가구의 이용률(73.4%)에 비해 5.7%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와 <표 5-6>은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가구 특성과 어머니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표 5-5>에 제시되어 있는 가구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2명의 재수생 이하 자녀의 비율이 63.3%로 가장 많으나,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1명의 비율이 65.1%로 가장 높다.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나 그렇지 않은 가구나 평균 가구원수는 3.9~4.0명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4명인 비율(62.2%)이 비이용가구(37.1%)보다 높고, 비이용가구는 3명 이하의 비율(42.6%)이 이용가구(17.5%)보다 높아, 재수생 이하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가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에 있어서 핵가족의 비율은 이용가구(88.2%)나 비이용가구(83.5%) 모두 8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비핵가족의 비율이 비이용가구에서 4.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월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기점으로 하여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비율이 비이용가구의 경우에 비해 높은 반면에, 비이용가구의 경우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비율이 이용가구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이 이용가구는 6.5%, 비이용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14.8%p 높은 21.3%이며, 월평균 10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에서도 비이용가구의 비율이 이용가구에 비해 1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만~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비율에서는 이용가구의 경우가 비이용가구에 비해 2.4%p 높고, 300만~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비율에서는 그 차이가 12.0%p에 달하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비율에서는 10.8%p의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이용가구의 서울지역 거주율은 25.1%로 비이용가구의 19.6%보다 5.5%p 높고, 이용가구의 광역시 거주율은 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 지역의 거주율은 비이용가구 50.3%, 이용가구 46.9%로 비이용가구의 경우가 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시장이 성장 발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5-5>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가구 특성 비교 (단위: %)

특성	범주	전체	이용가구	비이용가구
전체		100.0	75.2	24.8
		100.0	100.0	100.0
재수생 이하 자녀수	1명	36.3	28.6	65.1
	2명	56.0	63.3	29.2
	3명 이상	7.7	8.1	5.8
	평균(명)	1.7	1.8	1.4
가구원수	3명 이하	22.8	17.5	42.6
	4명	56.8	62.2	37.1
	5명	15.7	16.0	14.2
	6명 이상	4.7	4.3	6.0
	평균(명)	4.0	4.0	3.9
가족구성	핵가족	87.2	88.2	83.5
	비핵가족	12.8	11.8	16.5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24.6	6.5	21.3
	100만~200만원 미만	28.2	24.4	35.0
	200만~300만원 미만	22.0	28.1	25.7
	300만~500만원 미만	18.1	27.1	15.1
	500만원 이상	7.1	13.8	3.0
	평균(만원)	292.4	318.1	197.4
거주지역	서울	24.0	25.1	19.6
	광역시	28.4	28.0	30.1
	도	47.6	46.9	50.3

<표 5-6>은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어머니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어머니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보면 이용가구가 38.1세로 비이용가구 37.4세보다 0.7세 높은데, 이 같은 차이는 만 30세 미만의 비율이 비이용가구의 경우(19.5%)가 이용가구(4.3%)에 비해 15.2%p 높기 때문이며, 이용가구가 비이용가구에 비해 30세 이상의 비율, 특히 4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비이용가구 어머니의 경우 고졸 미만의 비율이 28.7%로 이용가구 어머니에 비해 17.8%p 높은 것에 반해, 이용가구 어머니는 고졸학력의 비율 14.9%p, 대

졸 이상의 비율 3.7%p 높아 이용가구 어머니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상태의 경우는 이용가구의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이 51.0%로 비이용가구 어머니의 취업비율 45.6%보다 5.4%p 높아,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가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1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재수생 이하 3,45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여부와 종류를 자녀의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자녀의 학력집단은 (1) 미취학 아동(1,136명), (2) 초등학교생(1,159명), (3) 중학생(580명), (4) 고등학생(582명)<sup>27)</sup>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학력집단 내에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종류를 파악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서 재수생 이하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조사항목은 자녀 1인당 최대 4개 종류까지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5-7>은 학력집단 내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표 5-6>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어머니 특성 비교  
(단위 : %)

특성	범주	전체	이용가구	비이용가구
전체		100.0	86.4	23.6
		100.0	100.0	100.0
연령	만 30세 미만	7.4	4.3	19.5
	만 30~39세	50.8	54.5	35.9
	만 40세 이상	41.8	41.2	44.7
	평균(세)	37.9	38.1	37.4
교육수준	고졸 미만	14.4	10.9	28.7
	고졸	55.6	58.5	43.6
	전문대졸	12.7	12.5	13.3
	대졸 이상	17.4	18.1	14.4
취업상태	취업	50.1	51.0	45.6
	미취업	49.9	49.0	54.4

27) 여기서의 고등학생은 재수생(24명)을 포함하고 있다.



&lt;표 5-7&gt; 연령별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여부

(단위 : %)

연령 이용개수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41.7	14.2	23.6	46.1
1	41.9	50.8	64.1	46.7
2	12.9	23.9	9.1	6.5
3	2.9	7.1	2.8	0.7
4	0.9	4.1	0.3	-

주 : 고등학생에는 재수생을 포함하고 있음.

이용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58.3%, 초등학생의 85.8%, 중학생의 76.4%, 그리고 고등학생의 53.9%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이나 탁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자녀가 2개 이상의 사교육 혹은 탁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과 [그림 5-1]은 재수생 이하 자녀의 학력집단별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종류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21.5%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18.4%는 학습지를, 그리고 50.0%가 탁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탁아서비스로는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3.2%, 국공립 어린이집 9.4%, 민간 어린이집 15.5%, 사설놀이방 2.9%, 정규 유치원 11.8%, 시간연장제 유치원 4.2%, 그리고 종일제 유치원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에 있어서는 학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집단별로 초등학생의 66.7%, 중학생의 72.5%, 고등학생의 70.2%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를 이용하는 비율은 자녀의 학력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습지를 이용하는 비율은 학력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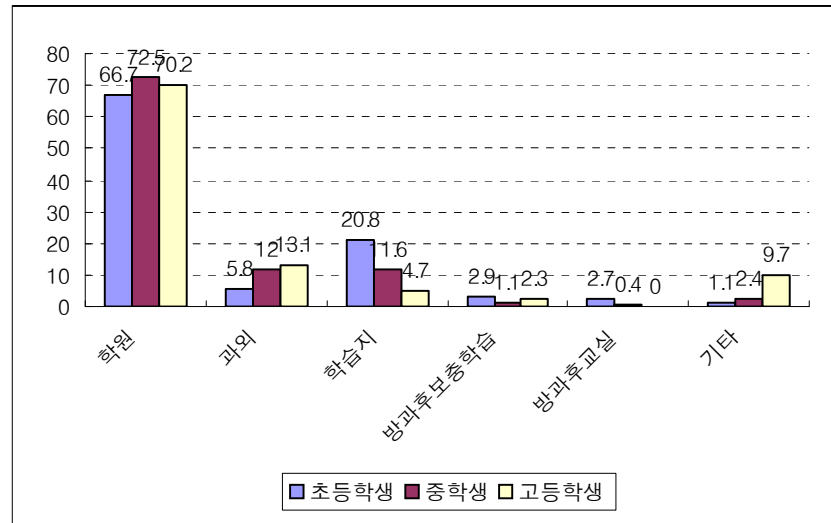
(단위: %)

학원	21.5		
학습지	18.4		
탁아서비스	50.0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3.2
기타	10.1	국공립 어린이집	9.4
		민간 어린이집	15.5
		사설놀이방	2.9
		정규 유치원	11.8
		시간연장제 유치원	4.2
		종일제 유치원	3.0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그림 5-1] 학력별 사교육 이용종류

(단위: %)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 제 2 절 자녀교육에 따른 지출비용

### 1. 가구의 총 지출비용

자녀교육에 따른 가구의 지출비용은 재수생 이하 자녀, 대학(원) 자녀 그리고 재수생 이하 자녀 또는 대학(원)생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구의 총 지출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나누고, 이를 가구와 어머니 특성별로 제시한 것이 <표 5-9>와 <표 5-10>이다.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의 총 지출비용을 제시한 <표 5-9>를 살펴보면,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2,062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30만1천원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 중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없는 511가구를 제외하고, 이용하는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1,551가구의 지출금액은 38만2천원으로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비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재수생 이하 자녀수로 구분해 볼 때, 전체 분석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모두 재수생 이하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지출금액이 각각 39만4천원과 46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원수를 구분하여 지출금액을 살펴볼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5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지출금액이 35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5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가 43만6천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 및 육아서비스와 관련한 가계의 지출비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체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와 이용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를 과

&lt;표 5-9&gt; 가구 특성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단위: 만원)

특성	범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이용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재수생 이 하 자녀수	1명	18.5	29.9
	2명	36.4	40.9
	3명 이상	39.4	46.9
가구원수	3명 이하	15.9	26.3
	4명	34.8	40.4
	5명	35.1	43.6
	6명 이상	25.8	35.5
가족구성	핵가족	30.9	38.8
	비핵가족	24.9	34.3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2.7	23.9
	100만 ~ 200만원 미만	17.7	24.5
	200만 ~ 300만원 미만	24.8	30.9
	300만 ~ 500만원 미만	41.0	47.2
	500만원 이상	63.3	66.9
거주지역	서울	40.4	48.9
	광역시	25.7	33.2
	도	27.6	35.6
전 체		30.1	38.2

&lt;표 5-10&gt;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비용

(단위: 만원)

특성	범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이용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연령	만 30세 미만	9.6	20.4
	만 30 ~ 39세	29.1	33.9
	만 40세 이상	37.0	47.2
교육수준	고졸 미만	14.9	26.6
	고졸	31.0	36.7
	전문대졸	34.8	44.1
	대졸 이상	42.2	50.5
취업상태	취업	33.7	39.2
	미취업	24.1	41.1
전 체		30.1	38.2

소 또는 과대된 것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자의 주의를 요하며, 관련주제 분석에 있어서 전체대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와 구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지출비용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분석의 결과와 이용가구 분석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된 소득범주별로 나누어 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12만3천원이고,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63만3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는 가구의 지출금액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차이는 이용가구에서는 다소 줄어드는데,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이용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23만9천원이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경우는 66만9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는 가구보다 지출금액이 2.8배 많다. 결국 소득수준에 따른 지출금액의 차이는 이용가구만을 분석했을 경우가 적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이용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그에 따른 지출비용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별 가구의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의 월평균 지출금액이 40만4천원(이용가구: 48만9천원)으로 광역시와 도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출하는 광역시지역과 서울지역의 차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14만7천원,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15만7천원으로 지역에 따라 지출금액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구의 총 지출비용을 제시한 <표 5-10>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92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30만1천원으로 전체 2,062가구를 분석한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70가구 중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출금액은 38만2천원으로 전체 대상가구를 분석한 경우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금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중·고등학교 입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이용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어머니가 고졸 미만 학력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14만9천원이고 이용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26만6천원인 반면,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지출금액은 42만2천원, 이용가구의 지출금액은 50만5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고졸 미만과 고졸 사이 16.1%p, 전문대졸과 대졸 사이 7.4%p의 차이가 있고,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고졸 미만과 고졸 사이의 차이가 10.1%p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의 차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에 있어서는 7.4%p 차이가 있어 비슷한 수준이었던 전체 가구의 분석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사이에 있어서는 전체 가구의 분석결과와 비슷한 6.4%p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여부뿐만 아니라 지출비용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영향을 미침을 짐작케 한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지출비용을 비교해 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의 지출금액과 취업하지 않은 가구의 지출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체 가구의 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그리고 이용가구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의 지출금액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의 자녀 1인당 교육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의 학력집단을 재수생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4개의 학력집단(① 미취학 아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및 재수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하고, 각 학력집단에 따라 자녀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을 <표 5-11>과 <표 5-12>에 제시하였다.

<표 5-11>은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내 재수생 이하 자녀의 1인당 지출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lt;표 5-11&gt; 재수생 이하 자녀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재수생 이하 자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위계층(0~30%)	8.7	7.0	7.2	7.5	6.1
중위계층(30~70%)	13.7	9.1	13.6	14.4	12.3
상위계층(70~100%)	29.4	17.3	23.9	30.9	34.4
전 체	16.4	11.7	16.9	19.1	20.0

우선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해당가구는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로 자녀 1인당 월평균 16만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가구는 자녀 1인당 8만7천원을 지출하고, 고소득가구는 이보다 20만7천원이 많은 29만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계층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10%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8만8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반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고소득층은 이보다 4배가 많은 35만9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학력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녀의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11만7천원, 초등학생은 16만9천원, 중학생 19만1천원, 그리고 고등학생 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에 따른 지출비용의 증가 추이는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하위소득계층과 중위소득계층에서는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 지출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768가구의 자녀 1인당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을 제시한 것이다<sup>28)</sup>. 우선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학(원)생 1인에 대해 월평균 등록금 33만7천원과 그 외 지출비용 29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

28) 7차년도에 조사된 대학(원) 등록금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로 가계가 부담한 금액이며, 그 외 지출비용은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lt;표 5-12&gt; 대학(원)생 자녀의 1인당 월평균 교육비

(단위: 만원)

	총교육비	등록금	등록금 외 지출비용
하위계층(0~30%)	50.0	28.5	21.5
중위계층(30~70%)	57.4	25.3	32.2
상위계층(70~100%)	70.5	36.3	34.0
전 체	62.7	33.7	29.0

주: 대학(원) 자녀의 총교육비 = 등록금 + 그 외 지출비용.

을 합한 자녀 1인당 총교육비는 62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등록금 28만5천원과 그 외 지출비용 21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을 합한 자녀 1인당 총교육비는 5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소득가구는 등록금 36만3천원과 그 외 지출비용 34만원을 지출하여 이들을 합한 자녀 총교육비는 저소득가구의 1.4배인 70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와 같이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 2.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가계가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해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기 위하여 소득계층별과 소득대비 지출비율별로 5점 척도로 측정된 가계의 부담정도를 분석하였다.

<표 5-13>과 <표 5-14>는 소득계층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한 분포이다. 우선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2,062가구의 66.2%가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구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7%이고, 고소득가구의 경우는 그 비율이 26.2%에 달하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65.8%가 부담된다고 하였으며, 29.6%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14>는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768가구의 소득수준별 가계의



&lt;표 5-13&gt; 재수생 이하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하위계층(0~30%)	100.0	12.3	3.2	18.7	36.2	29.6
중위계층(30~70%)	100.0	4.5	4.9	22.7	41.8	26.1
상위계층(70~100%)	100.0	2.9	6.1	26.2	41.3	23.4
전 체	100.0	4.7	5.3	23.8	40.9	25.3

&lt;표 5-14&gt;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하위계층(0~30%)	100.0	-	-	23.1	39.7	37.2
중위계층(30~70%)	100.0	6.5	5.0	21.2	31.0	36.3
상위계층(70~100%)	100.0	3.4	6.9	36.6	32.2	21.0
전 체	100.0	4.3	6.0	30.8	32.1	26.8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한 분포이다.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58.9%가 자녀의 교육비의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가구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1%이고, 고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그 비율이 36.6%에 달하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76.9%가 부담된다고 하였으며, 37.2%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이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비용이나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가계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 5-15>와 <표 5-16>은 소득대비 지출비율별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분포이다. 우선 <표 5-15>는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5% 미만인 가구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26.1%로 나타났으나, 5% 이상에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가계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가구 총소득의 5% 미만을 지출할 때 42.2% 비율의 가구만이 체감할 뿐이다. 지출비용이 가구 소득의 5~1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6.0%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44.0%로 38%p 증가하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은 13.2%로 가구 총소득의 5%가 넘을 때 절반 이상의 가계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득대비 지출 비율이 10~15% 미만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은 19.5%로 17.3%p 감소하고,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9.3%p 증가하여 53.3%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가구소득의 15~20%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33.1%로, 이는 10~1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1.4배 가량 되는 높은 응답비율이다. 이 비율은 2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 범주에서 다시 1.6배 증가함을 보여 가구소득의 20% 이상을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의 53.2%가 지출금액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은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대학 교육비 지출비중이 5% 미만인 가구에서는 자녀의 교육비가 전

<표 5-15> 재수생 이하 자녀 가구의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5% 미만	100.0	26.1	16.1	32.9	19.2	5.8
5~10% 미만	100.0	-	6.0	36.8	44.0	13.2
10~15% 미만	100.0	0.2	2.9	19.5	53.3	24.1
15~20% 미만	100.0	-	1.6	17.9	47.4	33.1
20% 이상	100.0	-	0.3	9.2	37.3	53.2
전 체	100.0	4.6	5.3	23.9	40.8	25.3

&lt;표 5-16&gt; 대학(원)생 자녀 가구의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5% 미만	100.0	30.4	8.1	32.7	16.3	12.6
5~10% 미만	100.0	2.2	16.8	25.8	38.1	17.2
10~15% 미만	100.0	-	3.1	24.0	42.7	30.2
15~20% 미만	100.0	-	1.0	13.6	41.2	44.2
20% 이상	100.0	0.2	1.2	8.1	24.7	65.9
전 체	100.0	2.4	2.7	13.5	29.0	52.4

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30.4%로 나타났으나, 5% 이상에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가계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가구 총소득의 5% 미만을 지출할 때 38.5%의 가구만이 체감할 뿐이다. 지출비용이 가구소득의 5~1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16.8%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38.1%로 21.8%p 증가하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은 17.2%로 가구 총소득의 5%가 넘을 때 절반 이상의 가계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득대비 지출비율이 10~15% 미만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은 24%로 1.8%p 감소하고,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2.7%로 4.6%p 증가하였다. 가구소득의 15~20%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44.2%로, 이는 10~1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1.5배 가량 되는 높은 응답비율이다. 이 비율은 2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범주에서 다시 1.5배 증가함을 보여 가구소득의 2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65.9%가 지출금액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6 장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4년도 제7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연도간 비교 분석시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2004년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된 각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는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6-1&gt;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 1998 ~ 2004년

(단위 : 명)

		전 체	개인자료	신규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9	11,236	473
3차년도		10,798	10,495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10,295	10,072	223
6차년도		10,657	10,381	276
7차년도	종단 분석	10,692	10,450	242
	횡단 분석	11,654	11,211	443

주 : 1~6차년도 시계열 가중치 0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7차년도 종단분석도 동일하게 계산. 7차년도 횡단분석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제 1 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1. 경제활동상태

노동패널조사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 기간<sup>29)</sup>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노동패널조사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추가하여, 노동패널조사의 원표본이 되는 1998년 가구들은 전부 도시지역 거주 가구들이었다.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농촌으로 이사해 농가가 생기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원표본 특성의 차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관련 정의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농가가 농촌에 살며 가구주가 농민인 경우를 지

---

29)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대상 기간이다.

칭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발표되는 전국수치, 농가 및 비농가 수치와도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6-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은 2002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고 있다. 1998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2002년에 53.9%까지 증가하였다가 하락하여 2004년의 경우 53.4%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업자<sup>30)</sup>의 비중은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해 2004년 현재 2.8%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과 [그림 6-2]는 지난 6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

<표 6-2> 경제활동상태비교 : 1998 ~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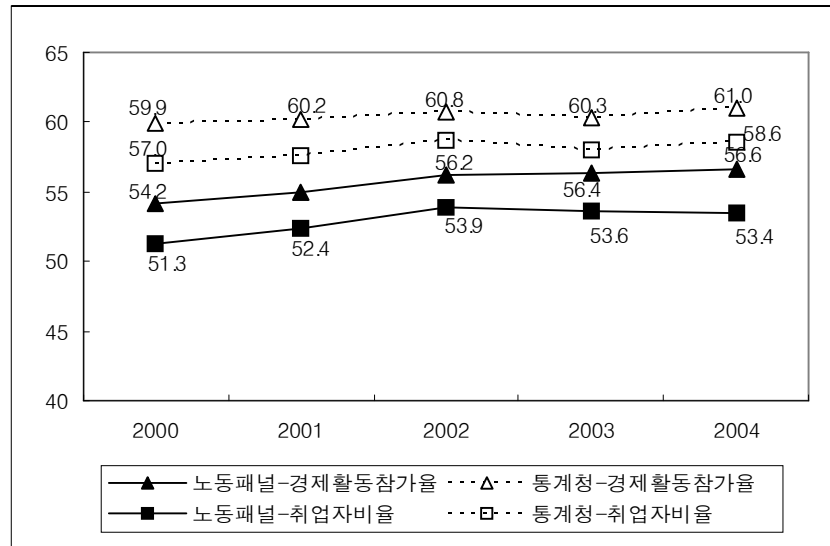
(단위 :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998	48.3 (48.3)	7.6 ( 9.4)	44.1 (42.3)
1999	51.8 (51.8)	3.8 ( 4.5)	44.5 (43.7)
2000	51.3 (51.3)	2.4 ( 2.9)	46.3 (45.8)
2001	52.4 (52.4)	2.1 ( 2.6)	45.5 (45.0)
2002	53.9 (53.9)	2.0 ( 2.3)	44.1 (43.8)
2003	53.6 (53.6)	2.5 ( 2.8)	44.0 (43.6)
2004	53.4 (53.4)	2.8 ( 3.2)	43.8 (43.4)

주 : ILO 기준 실업자 정의. (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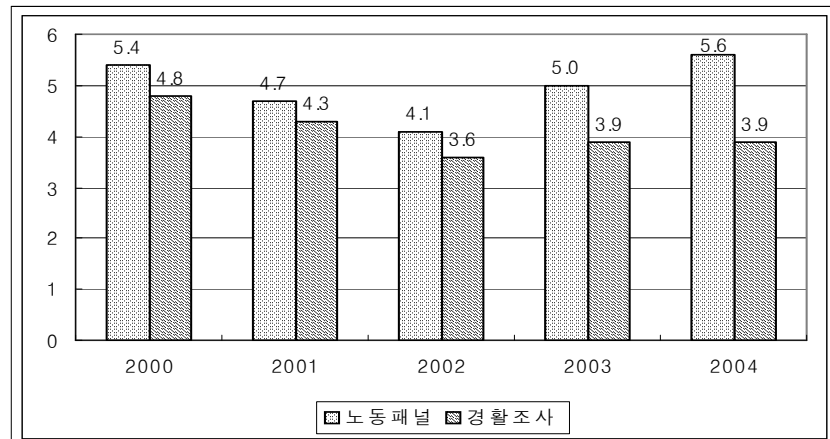
30) 현재 공식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전자를 실업자의 정의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자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ILO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림 6-1] 최근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를 비교 : 2000~2004년  
(단위 : %)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실업자로 정의되는데, 이 중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임.  
 취업인구비율=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그림 6-2] 최근 5년간 실업률 비교 : 2000~2004년  
(단위 : %)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실업률=실업자(OECD 정의)/경제활동인구×100.

여 제시하고 있다. 경황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 비율은 약 3~4%p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두 자료는 가구 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노동패널조사가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잘 요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개인 표본수를 비교할 때 경황조사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자 수와 같이 표본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 지표들은 해석상의 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3>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취학 연령인 15~24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은퇴자들이 많은 65세 이상과 비슷한 20% 초반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어느 해나 40~44세였으며, 55세부터 급격히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과 비교해 25~29세, 30~34세, 50~54세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에 떨어졌다.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인 청년층 실업률이 높고, 여성들이 육아에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40~44세에서 다시 실업률이 상승하고, 이후 55~59세 또는 60~64세 연령대에서 소폭 상승하는 분

<표 6-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98~2004년

(단위: %)

	15~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1998	17.6	52.4	61.2	67.2	69.5	66.6	60.8	52.8	40.3	18.3
1999	21.0	55.9	64.9	72.3	72.9	72.6	66.9	56.0	41.5	19.9
2000	21.0	55.9	63.1	71.9	73.4	71.3	66.8	53.3	42.9	19.5
2001	22.5	57.7	64.1	71.3	75.3	73.2	67.5	56.0	41.9	20.2
2002	22.9	59.3	65.1	73.6	76.3	75.2	71.3	60.2	44.8	19.7
2003	22.9	61.7	64.0	71.6	76.6	74.4	68.4	59.3	44.2	20.1
2004	21.5	63.6	64.0	71.0	76.1	73.8	70.4	58.7	43.9	20.0



&lt;표 6-4&gt; 연령별 실업률 : 1998 ~ 2004년

(단위 : %)

	15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49세	50 ~ 54세	55 ~ 59세	60 ~ 64세	65세 이상
1998	11.8	12.2	8.9	8.4	9.5	9.2	10.8	9.1	7.1	3.2
1999	6.0	6.0	4.9	3.3	4.4	4.2	3.9	4.8	3.7	1.7
2000	3.0	5.2	4.4	2.8	3.2	2.2	2.0	2.3	2.1	0.4
2001	3.3	4.8	3.4	2.6	2.0	1.5	2.1	2.9	1.0	0.7
2002	3.4	4.7	3.0	1.9	2.0	1.6	1.4	1.4	1.6	0.1
2003	3.8	6.0	3.8	2.8	2.4	2.8	1.5	1.5	0.6	0.3
2004	3.6	7.3	5.8	1.9	2.9	2.5	1.8	1.1	2.0	0.6

포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에도 이러한 패턴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5>는 경제활동상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은 6차 조사(2003년)에서의 경제활동상태가 7차 조사(2004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며, 오른쪽은 5차 조사(2002년)에서의 경제활동상태가 7차 조사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6차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은 89.7%가 7차 조사에서도 취업자로 남아 있었으며, 2.5%는 실업자로 이동했고, 7.9%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 6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2.4%가 7차 조사에서 취업자가 되었으며, 약 1/5 가량인 22.4%는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 있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6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7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미취업자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2년이 경과한 상태를 보면, 5차 조사에서의 상태를 7차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5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들의 7차 조사에서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절반이 넘는 61.9%의 사람들이 실업상태를 탈출해 취업자가 되었

31) 미취업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만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년이 경과하는 시간 동안 일자리를 갖고 있었으나 다시 미취업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lt;표 6-5&gt; 경제활동상태의 이동

(단위 : %)

	6차 → 7차				5차 → 7차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 체
취업자	89.7	2.5	7.9	100.0	85.4	3.0	11.6	100.0
	87.8	41.0	10.0	-	82.7	51.7	15.4	-
	48.0	1.3	4.2	53.5	46.3	1.6	6.3	54.2
실업자	42.4	22.4	35.3	100.0	61.9	9.0	29.1	100.0
	2.3	20.4	2.4	-	2.6	6.6	1.7	-
	1.2	0.7	1.0	2.9	1.4	0.2	0.7	2.3
비경제 활동인구	12.4	2.8	84.7	100.0	19.0	3.0	78.0	100.0
	9.9	38.6	87.6	-	14.7	41.6	82.9	-
	5.4	1.2	36.9	43.5	8.2	1.3	33.9	43.4
전 체	-	-	-	-	-	-	-	-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54.7	3.2	42.1	100.0	56.0	3.2	40.8	100.0

주 : 7차 가중치 적용.

으며, 단지 9.0%만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었고, 29.1%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였다.

경제활동상태 이동을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표 6-6 참조), 남성의 경우 6차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 중 7차 조사에서도 취업자로 남은 사람은 92.0%, 실업자로 이동한 사람은 2.5%,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은 5.5%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6차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 중 86.1%가 취업자로 남아 있었고, 실업자로 이동한 사람은 2.4%,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은 11.5%로, 남성에 비해 취업자로 남아 있는 사람의 비중은 낮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은 7차 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0%가 취업자가 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은 34.7%만이 취업자가 되었다. 여전히 실업자인 사람은 남성은 25.3%, 여성은 17.6%로 남성이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여성이 남성에 비

<표 6-6> 6차년도 → 7차년도 성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 체
남성	취업자	92.0	2.5	5.5	100.0
	실업자	47.0	25.3	27.7	100.0
	비경제활동 인구	14.8	3.6	81.5	100.0
여성	취업자	86.1	2.4	11.5	100.0
	실업자	34.7	17.6	47.8	100.0
	비경제활동 인구	11.1	2.4	86.5	100.0

주: 7차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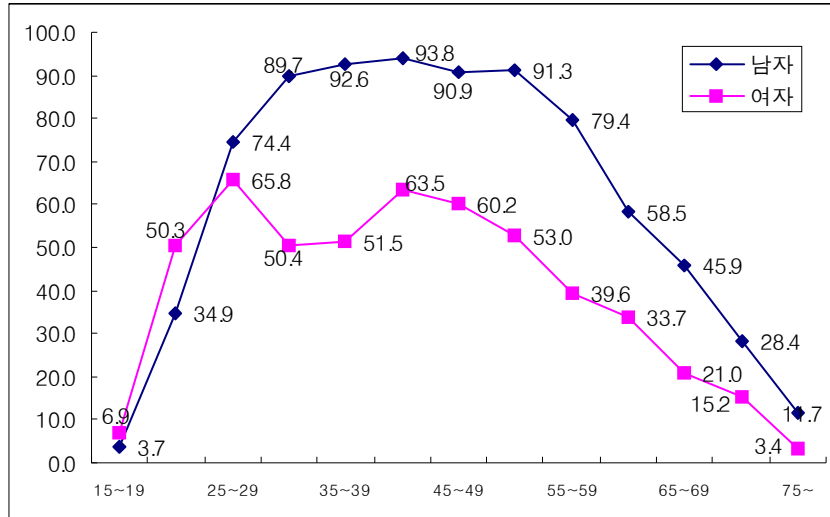
해 20.1%p 가량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실업 → 실업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 비해 더 높아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은 남성이 더 낮다. 이로 인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과 진입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탈출률의 역수로 계산되는 평균실업기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나겠지만<sup>32)</sup>, 그 이면에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탈출이 높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3]은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30~34세, 35~39세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M커브가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25~29세, 40~44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점에 이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도 40~44세가 정점이지만, 50~54세까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어지는 반면, 여성은 50~54세부터 완연한 하락세를 보여 남성보다 더 빠른 은퇴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32) 1년이라는 기간차가 존재하므로 중간의 실업 → 취업 → 실업 같은 이동은 잡아내지 못하므로, 이 역수를 곧바로 평균실업기간이라고 보는 것은 물론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림 6-3]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7차년도

(단위 : %)



##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 1. 산업별·직업별·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표 6-7>과 <표 6-8>은 산업별로 노동패널조사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패널조사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2차 산업 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3차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조사설계 당시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1차년도 당시 이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경찰조사보다 약 4%p 정도 낮았지만, 이후 조사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6년간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노동패널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4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8.3	22.9	68.8
1999	8.7	22.5	68.8
2000	8.4	22.6	69.0
2001	7.7	21.2	71.1
2002	6.5	21.2	72.3
2003	6.3	20.8	72.9
2004	5.7	19.9	74.4

주: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1차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산업: 광업 및 제조업.

3차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표 6-8>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4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12.0	19.7	68.2
1999	11.3	19.9	68.7
2000	10.6	20.4	69.0
2001	10.0	19.9	70.2
2002	9.3	19.2	71.5
2003	8.8	19.1	72.1
2004	8.1	19.1	72.8

주: 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6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광공업의 경우에도 농림어업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998년 22.9%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19.9%의 수치를 기록한 데 반해, 경찰조사에서는 2000년까지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여 20.4%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04년에는 19.1%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두 조사 모두 지난 6년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부문 종사자들의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두 조사 사이에 1%p 이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 측면에서 노동패널조사는 매우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농림어업과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경황조사와 많게는 3~4%p의 격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두 조사 간에는 거의 동일한 산업별 구성을 보여주었다.

<표 6-9>는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직업별 종사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증가 대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전문관리직은 1998년 당시 21.5%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4년에는 4.5%p가 증가한 26.0%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폭으로 증가했는데, 1999년 10.7%에서 2004년에는 13.7%까지 증가하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4.8%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21.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8.8% → 2004년 5.7%)과 생산직(1999년 35.6% → 2004년 33.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6-9>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 ~ 2004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21.5	11.2	24.8	8.8	33.7
1999	20.7	10.7	24.5	8.5	35.6
2000	21.5	10.9	23.5	8.3	35.9
2001	21.9	12.2	23.8	7.5	34.6
2002	23.2	12.4	23.4	6.4	34.6
2003	24.9	12.8	22.2	6.2	33.9
2004	26.0	13.7	21.2	5.7	33.4

- 주 : 1) 전문관리직에는 임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를,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각각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  
2) 통계청의 직업분류의 변경을 반영하여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모든 수치를 2002년에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함.

한편 직업별 분포에서도 노동패널조사와 경활조사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0>에 제시된 경활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두 조사 간에 적게는 0.4%p(사무직)에서 많게는 약 3.8%p(서비스판매직) 정도의 격차가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두 조사 간에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경활조사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관찰되지 않으나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문관리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인 구성 면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생산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활조사의 경우 전문관리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200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먼저 산업 및 직업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6-11>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은 3차 산업 종사자가 7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차 산업 종사자는 23.5%로 나타났다. 1차 산업 종사자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3차 산업 종사자가 70.1%로 가장 높은 반면, 임금근로자와 달리 1차 산업 종사자가 2차 산업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생산직의 비중이 39.8%

<표 6-10>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 ~ 2004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18.8	12.4	23.6	11.5	33.7
1999	19.1	11.3	23.7	10.7	35.1
2000	18.9	11.6	23.8	10.0	35.7
2001	20.9	12.1	25.6	9.2	32.2
2002	21.3	12.4	25.5	8.6	32.2
2003	20.1	14.3	25.2	8.3	32.2
2004	20.5	14.1	25.0	7.5	32.8

주 :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lt;표 6-11&gt;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2004년

(단위: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산업	1 차 산 업	0.7	17.7
	2 차 산 업	23.5	12.2
	3 차 산 업	75.8	70.1
	전 체	100.0	100.0
직업	전 문 관 리 직	28.2	17.6
	사 무 직	17.3	3.9
	서 비 스 관 매 직	15.1	36.6
	농 립 어 업 직	0.6	17.7
	생 산 직	38.8	24.1
	전 체	100.0	100.0

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전문관리직 28.2%, 사무직이 17.3%, 서비스판매직이 15.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이 36.6%를 차지한 반면, 사무직은 3.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취업자의 직업 및 산업별 분포는 고용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2>는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중은 여성(36.7%)이 남성(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22.1%)에, 여성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1.7%)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60세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2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공업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 및 부동산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졸 이상은 기타 서비스업에, 고졸 미만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고졸 미만은 농림어업의 비중도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높았다.



<표 6-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2004년

(단위 : %)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금융 부동산	공공 행정	기타 서비스	전 체
성별	남 성	5.7	22.1	14.0	18.0	3.4	3.7	33.1	100.0
	여 성	6.7	16.7	1.3	31.7	4.9	2.0	36.7	100.0
연령	15~29세	0.4	20.2	4.8	23.0	5.0	1.9	44.6	100.0
	30~39세	1.1	22.2	8.1	23.6	5.3	3.5	36.2	100.0
	40~49세	3.5	23.4	10.4	25.2	3.6	2.9	31.0	100.0
	50~59세	10.1	16.6	11.7	23.9	2.9	3.9	30.8	100.0
	60세 이상	33.8	7.5	8.1	18.0	1.7	2.1	28.8	100.0
교육 수준	고졸미만	18.4	19.5	12.1	25.1	0.9	1.3	22.6	100.0
	고 졸	3.0	24.0	10.4	27.9	3.5	2.6	28.4	100.0
	대재중퇴	2.2	12.2	6.3	25.9	5.3	5.1	43.0	100.0
	전문대졸	1.1	19.9	6.3	22.8	6.3	3.3	40.3	100.0
	대졸이상	0.4	14.9	4.8	14.7	6.7	5.0	53.4	100.0

주: 기타 서비스업은 3차 산업 중 건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표 6-13>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32.1%)이 남성(15.0%)보다 약 2배 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남성(42.6%)이 여성(21.6%)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32.9%, 사무직이 2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40% 전후가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앞의 산업별 비중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직(33.4%)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겨우 3.1%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60.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의 분포는 고졸 미만의 경우 50%를 넘는데 비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lt;표 6-13&gt;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 2004년

(단위 : %)

		전문관리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생산직	전 체
성별	남 성	26.2	10.5	15.0	5.7	42.6	100.0
	여 성	22.9	16.9	32.1	6.5	21.6	100.0
연령	15~29세	32.9	28.1	17.9	0.6	20.4	100.0
	30~39세	32.9	16.3	20.9	1.2	28.7	100.0
	40~49세	21.4	8.9	25.3	3.1	41.3	100.0
	50~59세	18.8	5.4	23.5	10.2	42.1	100.0
	60세 이상	7.5	2.0	18.4	33.4	38.8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3.1	2.0	25.0	18.3	51.5	100.0
	고 졸	13.4	12.4	27.2	3.0	44.0	100.0
	대재 중퇴	27.9	21.3	25.2	2.2	23.4	100.0
	전문대 졸	35.7	24.9	19.4	1.1	18.9	100.0
	대졸 이상	60.8	19.2	10.6	0.5	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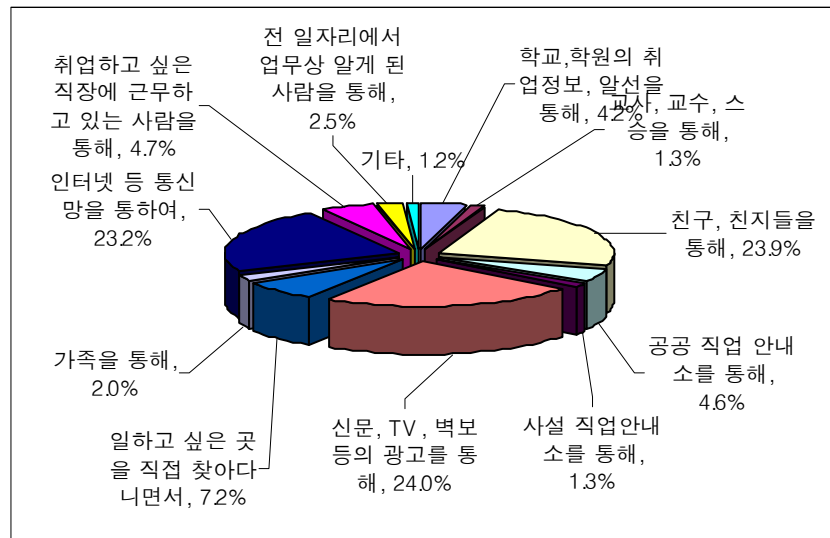
### 제 3 절 미취업자

####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2004년 노동패널조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6-4]는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비공식적인 방법인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24.0%로 가장 높고, 친구, 친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2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23.2%, 취업하고 싶은 직장의 근무자를 만나서가 4.7%,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나 알선을 통한 경

[그림 6-4]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 2004년



우가 4.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공 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33)</sup>.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림 6-5], <표 6-14>~<표 6-15>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33)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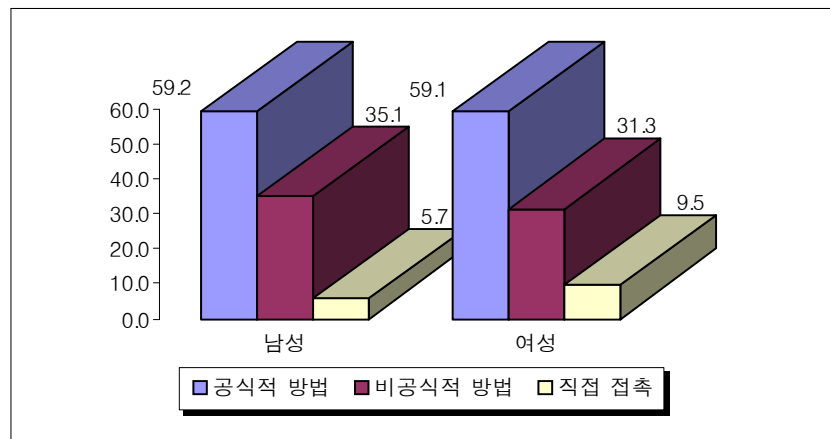
살펴보면, 성별과 관계없이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비공식적 방법, 직접접촉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4>를 통해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60대를 제외하고는 공식적 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40대의 경우 공식적 방법에 의한 구직활동이 47.9%,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구직활동이 42.6%로 차이가 적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비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0대의 경우에는 비공식적 연결망조차도 갖추기 어려운 연령층이므로 공식적 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40대 정도 되면 비공식적 방법이라는 축적된 사회적 자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식적 방법에 대한 의존이 줄고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별 구직방법을 살펴보면 <표 6-15>와 같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인 구직방법이 많이 이용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졸자는 공식적 방법에 의한 구직이 82.9%로 고졸 미만의 2배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고졸 미만은 절반 가까이 비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에 고연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차이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5]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2003년

(단위 : %)



<표 6-14> 연령별 구직방법 : 2004년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15 ~ 29세	69.3	24.1	6.5	100.0
30 ~ 39세	56.8	37.7	5.4	100.0
40 ~ 49세	47.9	42.6	9.5	100.0
50 ~ 59세	59.3	36.9	3.8	100.0
60세 이상	32.0	49.9	18.1	100.0

<표 6-15> 교육수준별 구직방법 : 2004년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고졸미만	46.5	41.9	11.7	100.0
고 졸	49.8	41.5	8.7	100.0
대재중퇴	77.7	11.6	10.7	100.0
전문대졸	56.2	42.7	1.0	100.0
대졸이상	82.9	14.3	2.9	100.0

##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6-16>과 같다. 지난 6년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추세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1998년에 비해 1999년과 2000년에 약 10%p 정도 낮게 추정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88%를 넘어서 2004년에는 9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질문하였다. <표 6-17>을 통해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고 80% 이상이 전일제

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경우 미취업 구직자의 30% 가량이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며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미취업 구직자의 1/3 가량은 전일제 일자리를 취업을 고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6-18>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약 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29세의 임금근로자 희망이 95.8%로 가장 높았고, 40대의 임금근로자 희망이 82.6%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 대졸 이상 인구의 임금근로자 희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6>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 1998~2004년

(단위 : %)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1998	88.8	11.2
1999	79.2	20.6
2000	81.7	18.3
2001	88.2	11.1
2002	88.5	11.5
2003	89.5	10.5
2004	90.4	9.6

주 : 희망하는 고용형태 중에서 가족종사자는 제외함. 1999년 0.2%를 제외하고 가족종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표 6-17>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 1998~2004년

(단위 : %)

	전일제	시간제
1998	69.7	30.3
1999	83.8	16.2
2000	84.8	15.2
2001	83.7	16.3
2002	84.3	15.7
2003	85.9	14.1
2004	89.9	10.1

<표 6-18>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 : 2004년

(단위 : %)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전 체
성별	남 성	88.0	12.0	100.0
	여 성	93.8	6.2	100.0
연령	15 ~ 29세	95.8	4.2	100.0
	30 ~ 39세	86.3	13.7	100.0
	40 ~ 49세	82.6	17.4	100.0
	50 ~ 59세	92.2	7.8	100.0
	60세 이상	92.8	7.2	100.0
교육 수준	고졸미만	96.2	3.8	100.0
	고 졸	85.7	14.3	100.0
	대재중퇴	88.3	11.7	100.0
	전문대졸	92.3	7.7	100.0
	대졸이상	94.9	5.1	100.0

<표 6-19>는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

<표 6-19>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단위 : %)

		전일제	시간제	전 체
성별	남 성	96.5	3.5	100.0
	여 성	81.5	18.5	100.0
연령	15 ~ 29세	90.0	10.0	100.0
	30 ~ 39세	93.1	6.9	100.0
	40 ~ 49세	87.1	12.9	100.0
	50 ~ 59세	86.4	13.6	100.0
	60세 이상	90.3	9.7	100.0
교육 수준	고졸미만	88.4	11.6	100.0
	고 졸	92.8	7.2	100.0
	대재중퇴	54.5	45.5	100.0
	전문대졸	97.1	2.9	100.0
	대졸이상	93.8	6.2	100.0

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가사나 아동문제 등이 비구직 이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을 돌보는 문제가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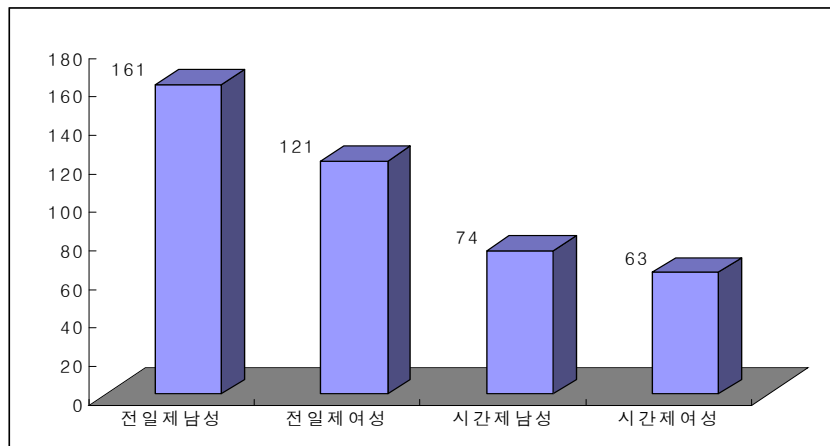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30대의 시간제 선호 비중이 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재학생이 분포하고 있는 대재 및 중퇴의 경우 45.5%가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과 일의 문제가 근로시간 형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전문대졸이 가장 낮은 2.9%였다.

한편,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형태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림 6-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161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이 121만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남성의 경우 74만원, 여성은 63만원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6-20>에는 이와 관련된 9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그림 6-6] 성별·근로시간형태별 평균희망임금

(단위: 만원)





부터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1.8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의 수입'(2.4점)이나 '취업 또는 창업정보의 부족'(2.3점)을 각각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차별요인에 대해서는 구직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간에도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도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의 수입이나 근로조건, 혹은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정보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전체	남성	여성
1.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8	1.7	1.8
2. 취업 또는 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3	2.5	2.1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0	3.1	3.0
4. 경험이 부족하다	3.0	3.1	2.8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4	2.4	2.4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7	2.8	2.5
7. 나이가 너무 많다	3.1	3.2	3.0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7	2.7	2.8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3.3	-	3.3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점수임. 설문지상의 응답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 제 7 장

##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표 7-1>에서는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본 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7차년도에는 전체 4,257명의 임금근로자

<표 7-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4년

(단위 :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2	62.9	37.1	62.4
2차년도	3,959	59.9	40.1	63.7
3차년도	3,727	60.7	39.3	64.4
4차년도	3,822	59.9	40.1	66.1
5차년도	3,975	59.6	40.5	67.1
6차년도	4,211	59.3	40.7	68.1
7차년도	4,257	59.5	40.5	68.2

주 : 1)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시계열 가중치 적용.

2) 1차년도는 'p01573'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는 개인데이터의 'jobclass'와 신규데이터의 '문3.주된일자리'를 합쳐서 계산.

가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취업자 중 68.2%가 임금근로자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998년 61.7%, 2004년 66.0%에 비해 다소 높지만, 1998년 이후 꾸준히 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1 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7차년도(2004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샘플 4,257명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w7\_pc)를 부여해 계산한 것이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졸자로 34.4%였다. 여성의 경우는 중졸 이하에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0대가 26.6%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 시기가 빠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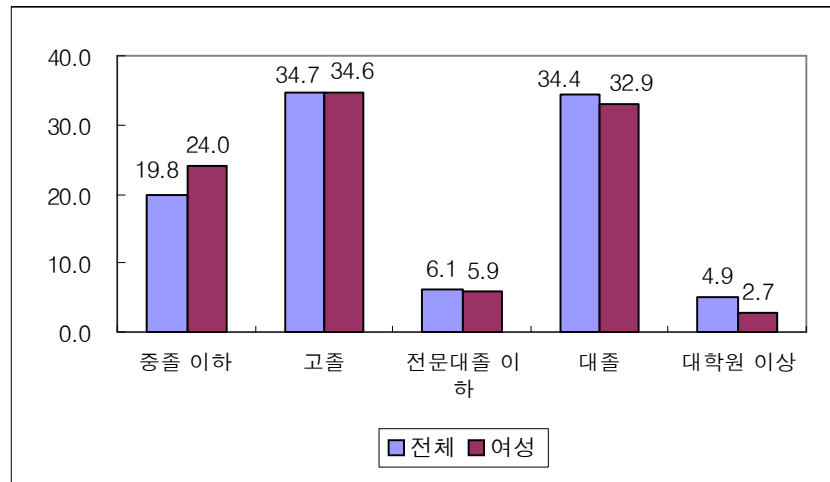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공서비스업이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23.6%)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기사서비스업은 1.5%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sup>34)</sup>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37.1%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였으나,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2%)이었다.

---

34) KLIPS 표본 추출시 도시지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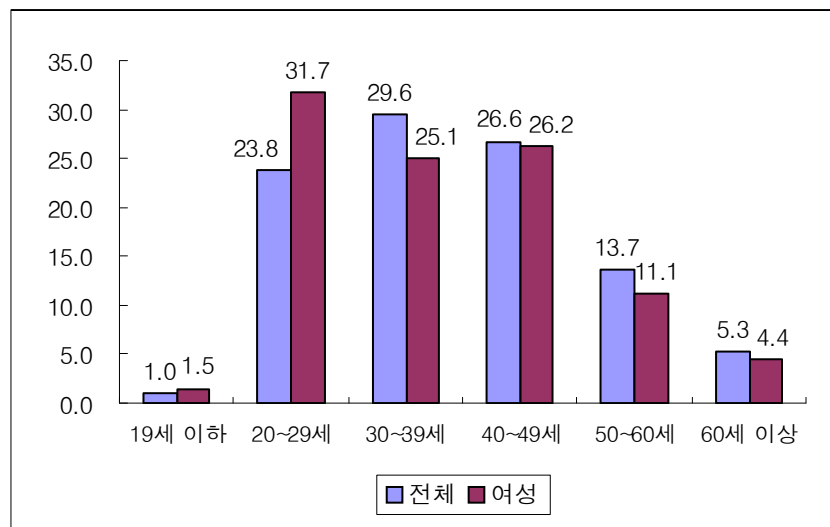
[그림 7-1] 임금근로자의 학력분포

(단위 : %)



[그림 7-2]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

(단위 : %)



직종에 따라서는 생산직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28.2%)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분포에 비해 사무직(21.6%), 서비스 직(23.7%)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업종	농림어업	0.7	0.6	0.8
	광공업	23.6	25.9	20.2
	건설업	10.9	17.3	1.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7	1.9	0.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4	12.1	25.2
	운수통신업	6.1	8.2	2.9
	금융 및 부동산업	6.8	5.5	8.6
	공공서비스업	32.4	29.1	37.1
	가사서비스업	1.5	0.3	3.4
직업	전문관리직	28.2	28.7	27.5
	사무직	17.3	14.4	21.6
	서비스직	15.1	9.0	23.7
	농림어업직	0.6	0.7	0.6
	생산직	38.8	47.3	26.4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7.5	33.5	43.4
	10 ~ 29인	13.5	14.1	12.6
	30 ~ 99인	12.0	13.1	10.4
	100 ~ 299인	6.9	8.2	4.9
	300 ~ 499인	2.6	2.8	2.1
	500인 이상	27.6	28.3	26.6
기업 형태	민간회사	74.9	75.4	74.3
	외국인회사	1.1	1.0	1.3
	공기업	3.9	4.5	2.9
	법인단체	5.2	4.5	6.3
	정부기관	8.2	8.4	8.0
	비소속	5.3	4.7	6.2
	기타	1.3	1.6	1.0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89.7	87.2	93.4
	2조 2교대제	6.4	8.0	4.1
	3조 3교대제	2.6	2.9	2.2
	기타 교대제	1.3	1.8	0.4
종사상 지위	상용직	77.7	80.8	73.2
	임시직	10.8	6.5	17.0
	일용직	11.5	12.7	9.8

주 :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0인 이상(27.6%)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43.4%)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4.9%)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8.2%)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대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3%였으며, 남성(12.8%)이 여성(6.6%)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2교대제)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7.7%였고, 임시·일용직은 22.3%였다. 통계청은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8.8%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여성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 제 2 절 근로시간

제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은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

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였다.

<표 7-3>을 보면 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2.3시간을 근무하였으나, 7차년도인 2004년에는 50.0시간만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수준으로는 약 5시간 가량 길었으나<sup>35)</sup>,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가 5인 이상 상용직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1998~2004년

(단위: 시간, %)

조사시점	평균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가율
1차년도	52.3	-
2차년도	52.7	0.8
3차년도	52.3	-0.8
4차년도	51.1	-2.3
5차년도	50.9	-0.4
6차년도	50.5	-0.8
7차년도	50.0	-1.0

주: 1)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 증가율은  $\{(\text{해당연도}-\text{전년도})/\text{전년도}\} \times 100$ 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처리함.

35) 2004년도 「매월노동통계」 연평균으로 매월총근로시간은 197.2시간으로, 한 달을 4.3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주당 45.9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2.2시간)이 여성(46.7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5.5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인 응답자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3.6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대가 39.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10대와 60대처럼 노동시장 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고 보면 30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60세 여성의 근로시간은 50대에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30대에서 가장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와 고졸은 주당 근무시간이 각각 53.0시간과 51.9시간인데 반해 대졸자는 47.9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43.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51.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성별로 보아도 상용직인 남성이 53.8시간, 여성은 48.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임시직

<표 7-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2004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전체		50.0	52.2	46.7
연령별	19세 미만	39.7	42.1	38.4
	20~29세	48.4	51.2	45.8
	30~39세	50.3	52.9	45.4
	40~49세	50.3	51.6	48.4
	50~59세	50.6	51.1	49.6
	60세 이상	53.6	57.2	46.6
학력별	중졸 이하	53.0	54.5	51.3
	고졸	51.9	54.8	47.6
	전문대졸 이하	47.4	50.8	43.4
	대졸	47.9	49.7	44.2
	대학원 이상	43.3	45.3	36.0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인 경우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5시간으로 상용직보다 7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상용직	51.7	53.8	48.4
임시직	44.5	47.3	42.9
일용직	43.0	44.2	40.9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7-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2004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성	여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6.2	49.0	41.9
	사무직	47.3	48.9	45.7
	서비스직	53.6	56.4	52.1
	농림어업직	44.9	54.6	29.9
	생산직	52.6	54.3	47.9
업종별	농림어업	44.5	55.1	33.6
	광공업	52.2	53.6	49.5
	건설업	48.3	48.8	41.2
	전기가스 및 수도업	44.6	45.8	35.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2.4	53.4	51.6
	운수통신업	54.1	56.5	44.4
	금융 및 부동산업	45.9	48.8	43.3
	공공서비스업	48.4	52.2	44.0
가사서비스업	41.3	52.1	40.2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9.6	51.9	47.0
	10~29인	51.3	54.6	45.9
	30~99인	52.7	54.9	48.7
	100~299인	52.8	54.1	49.7
	300~499인	50.7	51.8	48.5
	500인 이상	47.8	49.6	45.1

한편 <표 7-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가사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산업에서 임시 혹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을 제외하면, 전기가스수도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4.6시간으로 짧은 편이며, 운수통신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4.1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이 53.6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으며, 근로시간이 짧은 직종은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는 전문관리직(46.2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299인이 52.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500인 이상이 47.8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7>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7차년도에 25.1%로 나타나, 6차에 이어 7차에도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54.2%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5.2%)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2.8%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7천원으로, 6차년도에 상승한 이후 그 수준을 유지했다.

<표 7-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단위: %, 시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초과근로를 안함		59.8	69.5	66.7	68.9	67.5	76.4	74.9
초과근로를 함		39.9	30.5	33.3	31.2	32.5	23.6	25.1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8.9	8.3	8.5	8.1	8.0	8.4	8.5
초과급여 지급 안함		54.5	51.9	45.5	42.9	40.7	43.4	45.8
초과급여 지급함		45.4	48.1	54.5	57.1	59.3	56.6	54.2
초과 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74.2	77.2	83.4	78.4	78.5	85.7	85.2
	일정 금액	21.9	18.2	11.6	13.9	14.6	10.3	12.8
	기준 없음	3.6	4.1	5.0	7.1	7.0	3.0	2.1
	모름/ 무응답	0.3	0.5	-	0.7	-	-	-
시간당 평균초과급여(천원)		4.6	4.7	5.2	5.5	5.9	7.0	7.0

### 제 3 절 임금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인구학적 특성·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표 7-8>을 통해 임금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3.0%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3.0%, 3.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2.5%)과 여성(93.7%)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7-8&gt;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지급방법 : 2004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지급주기	한 달	93.0	92.5	93.7
	보름/주	0.7	0.5	0.9
	매일	3.1	2.8	3.5
	수시	3.0	4.1	1.4
	기타	0.3	0.2	0.4
임금지급방법	연봉계약제	10.4	13.9	5.2
	월급	73.9	71.0	78.2
	주급/격주	0.2	0.1	0.4
	일당	9.3	11.1	6.7
	시간급제	2.2	1.1	3.8
	도급제	0.7	0.7	0.8
	실적급	3.1	1.9	4.7
	기타	0.3	0.3	0.2

다음으로 임금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7.5%)보다 2.9%p 증가한 10.4%로 나타났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1.0%), 여성(78.2%)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13.9%)이 여성(5.2%)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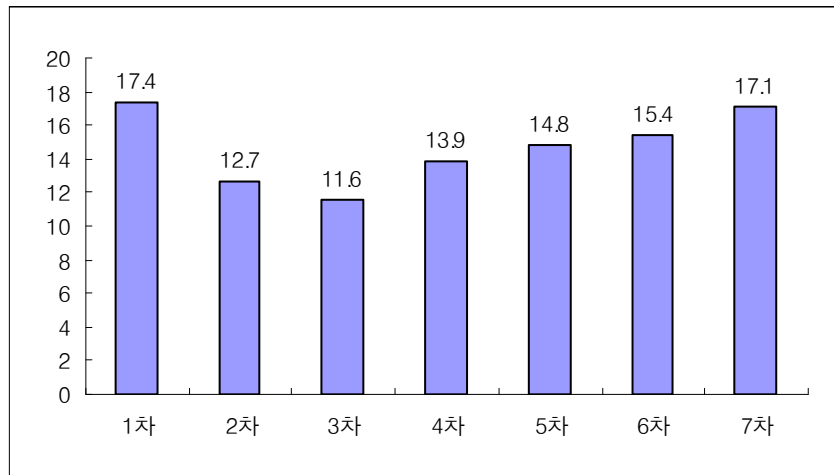
KLIPS에서는 직장에서 임금 결정시에 성과급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림 7-3]은 성과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8년(17.4%)부터 2000년(11.6%)까지는 성과급제의 적용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2004년(17.1%)까지는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는 성과급제 실시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이 43.9%인 반면 건설업은 9.8%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도 전문관리직은 22.7%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전문관리직의 절반 가량인 13.4%에 불

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예상 가능한 것처럼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29.6%가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29인인 경우에는 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3]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을 받는 사람의 비중 추이 : 2004년

(단위 : %)



<표 7-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여부 : 2004년

(단위 :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별	남성	18.1	81.9
	여성	16.7	83.4
업종	농림어업	19.7	80.3
	광공업	21.2	78.8
	건설업	9.8	90.2
	전기·가스 및 수도업	14.8	8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2	84.8
	운수통신업	26.4	73.7
	금융 및 부동산업	43.9	56.1
	공공서비스업	12.8	87.2

&lt;표 7-9&gt;의 계속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직종	전문관리직	22.7	77.3
	사무직	16.1	83.9
	서비스직	19.8	80.2
	농림어업직	21.7	78.4
	생산직	13.4	86.6
종사상 지위	상용직	20.0	80.1
	임시직	10.0	90.1
	일용직	8.7	91.3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2.0	88.0
	10 ~ 29인	9.4	90.6
	30 ~ 99인	14.4	85.6
	100 ~ 299인	21.0	79.0
	300 ~ 499인	19.5	80.6
	500인 이상	29.6	70.4

## 2. 월평균 임금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7-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7년간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14만5천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05만6천원)에서 9만원쯤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109만6천원, 4차년도 116만2천원, 5차년도 123만1천원, 6차년도 130만8천원, 7차년도 13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7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12만6천원으로 남성의 59.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임금의 변동은 「매월노동통계조사」<sup>36)</sup>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

36)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lt;표 7-10&gt;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단위: 만원, %)

	전체		남성		여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1	114.5	130.9	134.9	77.4	79.8
2차년도	103.3 (-7.0)	105.6 (-7.8)	123.8 (-5.4)	126.6 (-6.2)	72.6 (-6.2)	74.2 (-7.0)
3차년도	109.6 (6.1)	109.6 (3.8)	131.0 (5.8)	131.0 (3.5)	76.7 (5.6)	76.7 (3.4)
4차년도	121.0 (10.4)	116.2 (6.0)	144.8 (10.5)	139.1 (6.2)	85.7 (11.7)	82.3 (7.3)
5차년도	131.6 (8.7)	123.1 (5.9)	157.3 (8.6)	147.1 (5.8)	93.7 (9.3)	87.7 (6.6)
6차년도	144.8 (10.0)	130.8 (6.3)	172.8 (9.9)	156.1 (6.1)	104.3 (11.3)	94.2 (7.4)
7차년도	158.3 (9.3)	138.0 (5.5)	189.3 (9.5)	165.0 (5.7)	112.6 (8.0)	98.2 (4.2)

주: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이가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2004년 월평균임금액은 237만3천원인데, KLIPS는 158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더라도 1999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1.1% 증가했지만, KLIPS의 경우 오히려 -7.8% 감소했다. 이렇게 KLIPS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sup>37)</sup>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며, 1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37)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10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2005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에 처해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한편 <표 7-11>은 임금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3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지니계수가 꾸준히 상승해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추이와 비교해 보면<sup>38)</sup>, 지니계수의 수준 자체는 KLIPS가 다소 높지만, 3차년도 지니계수가 하락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꾸준히 두 조사에서 모두 지니계수가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7-12>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임금이 223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3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임금소득분배 추이

(단위: %)

	지니계수	P90/50	P50/10	P90/10	중위값
1차년도	0.306	2.00	2.00	4.00	100
2차년도	0.310	2.00	2.25	4.50	90
3차년도	0.300	1.90	2.00	3.80	100
4차년도	0.308	2.10	2.00	4.20	100
5차년도	0.311	2.18	2.20	4.80	110
6차년도	0.322	2.08	2.00	4.17	120
7차년도	0.327	2.30	2.17	5.00	130

- 주: 1) 중위값=P50=임금수준의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수준.  
 2) 지니계수: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  
 3) P90/50은 임금수준을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가운데(50%)인 근로자의 임금보다 9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몇 배 더 많은지를 표현. P50/10, P90/10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됨.

38)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지니계수는 1998년부터 0.282, 0.286, 0.299, 0.300, 0.303, 0.311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2005 KLI 노동통계』에서 재인용).



<표 7-1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임금 : 2004년

(단위 :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평균임금	상대임금	평균임금	상대임금	평균임금	상대임금
연 령	19세 이하	60.9	54.1	54.9	41.6	64.8	56.7
	20~29세	122.5	100.0	132.1	100.0	114.2	100.0
	30~39세	176.1	143.8	200.0	151.4	130.0	113.8
	40~49세	177.9	145.2	223.0	168.8	109.6	96.0
	50~59세	176.6	144.2	212.6	160.9	103.6	90.7
	60세 이상	88.4	72.2	105.2	79.6	54.6	47.8
학 력	중졸 이하	100.8	70.4	125.0	73.1	75.6	74.3
	고졸	143.1	100.0	171.0	100.0	101.7	100.0
	전문대졸 이하	143.6	100.3	168.5	98.5	113.9	112.0
	대졸	221.1	154.5	246.3	146.2	169.3	166.5
	대학원 이상	270.6	189.1	291.2	170.3	197.0	193.7

주 :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상대임금은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을 100으로 하여 계산.

월평균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 고졸보다 154.5%(221만1천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중졸은 고졸의 70.4%(100만8천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3>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176만1천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48%, 일용직은 60.1%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임시직의 월평균임금이 일용직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직으로 분류되는 퇴직금 등 부가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KLIPS에서는 상용직으로 분류되고, 이와 같은 조사의 차이 때문에 임시직 중 임금이 비교적 높은 집단이 KLIPS에서는 상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lt;표 7-13&gt;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단위: 천원)

		월평균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176.1	100.0
	임시직	84.5	48.0
	일용직	105.8	60.1

다음으로 <표 7-14>는 산업별·직업별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265만7천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218만3천원)과 운수통신업(178만6천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광공업 월평균임금의 79.7%(122만7천원)로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은 직업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임금은 211만4천원으로 사무직의 123.7%이며, 생산직과 서비스업은 사무직의 74.8%, 7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외국인회사가 가장 높은 240만7천원이었으며, 공기업은 그 다음이었다. 정부기관이 225만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민간회사는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146만6천원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300~499인 규모일 때가 194만2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월평균임금	상대 임금	월평균임금	상대 임금	월평균임금	상대 임금
직 업	전문관리직	211.4	123.7	248.1	114.9	155.4	122.2
	사무직	170.9	100.0	215.9	100.0	127.2	100.0
	서비스직	124.0	72.6	176.3	81.7	95.1	74.8
	농림어업직	96.8	56.6	136.3	63.1	35.9	28.2
	생산직	127.8	74.8	148.6	68.8	73.7	57.9
산 업	농림어업	86.7	56.3	138.7	73.9	32.6	36.2
	광공업	153.9	100.0	187.8	100.0	90.1	100.0
	건설업	157.5	102.3	161.5	86.0	93.7	104.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65.7	172.6	283.3	150.9	120.5	13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2.7	79.7	163.4	87.0	93.9	104.2
	운수통신업	178.6	116.0	187.1	99.6	144.0	159.8
	금융 부동산업	218.3	141.8	273.9	145.8	166.6	184.9
	공공 서비스업	169.7	110.3	203.2	108.2	131.1	145.5
	가사 서비스업	59.0	38.3	64.8	34.5	58.3	64.7
종 업 원 규 모	10인 미만	134.9	99.9	162.9	100.9	103.9	113.4
	10~29인	135.1	100.0	161.4	100.0	91.6	100.0
	30~99인	159.1	117.8	182.4	113.0	116.3	127.0
	100~299인	183.2	135.6	209.4	129.7	119.2	130.1
	300~499인	194.2	143.7	226.3	140.2	130.0	141.9
	500인 이상	191.6	141.8	229.2	142.0	132.6	144.8
기 업 형 태 별	민간회사	146.6	60.9	176.7	62.7	101.6	53.5
	외국인회사	240.7	100.0	281.9	100.0	189.9	100.0
	공기업	229.1	95.2	262.5	93.1	154.7	81.5
	법인단체	210.8	87.6	256.1	90.8	163.3	86.0
	정부기관	225.7	93.8	249.6	85.5	188.4	99.2
	기타	97.9	40.7	129.7	46.0	62.8	33.1

주: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상대임금은 직종은 사무직, 산업은 광공업, 규모는 10~29인, 기업형태는 외국인 회사를 100으로 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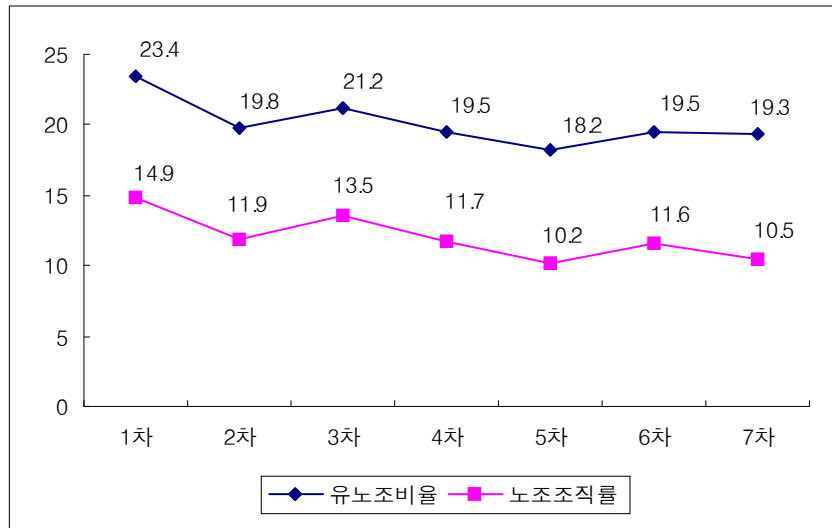
### 제 4 절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체내 노동조합 유무 및 본인의 가입 여부 등이 있다. [그림 7-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 중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하 ‘유노조비율’) 및 본인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하 ‘노조조직률’)은 2004년 들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유노조비율이 23.4%로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21.2%, 4차년도에는 19.5%, 5차년도에는 18.2%까지 감소하였지만, 6차년도에는 19.5%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 유노조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19.3%에 그쳤다.

또 노조조직률의 경우에도 1차년도는 14.9%에 이르고 있으나 5차년도에는 10.2%까지 하락하였으며, 다시 6차년도에 11.6%로 소폭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조직률도 7차년도에 10.5%로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노조조직률의 추이는 유노조비율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하는

[그림 7-4] 임금근로자의 유노조비율 및 노조조직률 : 1998 ~ 2004년

(단위 : %)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 전통 아래서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KLIPS의 노조조직률은 노동부 발표 노조조직률<sup>39)</sup>인 10.3%와도 엇비슷한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가입 이유를 묻은 결과, 가장 많은 42.5%가 가입자격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35.6%가 노조가 필요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사용자 만류와 노조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2.9%와 6.0%로 낮게 나타났다. 가입자격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다는 사람의 비중은 6차년도와 비교할 때 조금 증가한 반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어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람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7-15>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비노조 가입자의 노조 비가입 이유: 2004년  
(단위: %)

	가입자격 없음	노조에 불만	주위의 만류	사용자의 만류	노조 필요없음	기타	전 체
4차년도	41.7	5.5	2.0	5.0	30.2	15.6	100.0
5차년도	46.4	3.2	0.5	2.7	41.8	5.4	100.0
6차년도	37.7	4.4	1.2	3.8	42.6	10.3	100.0
7차년도	42.5	6.0	1.5	2.9	35.6	11.6	100.0

### 제 5 절 비정규직 근로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7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조사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사·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

39) 조합원수를 전체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

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 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 (혹은 일용대기근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문6~문11<sup>40)</sup>에서 조사된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아래에서는 다양한 고용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비정규직의 규모

다음으로 <표 7-16>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독립도급근로(34.0%)이며, 시간제근로(29.1%)와 일용대기근로(14.4%)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3.1%와 8.8%로 나타났다.

<표 7-1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단위: %)

	정규직	일용 대기	파견	용역	독립 도급	가내	시간제	단기 계약	전 체
전체	74.7	3.6	0.8	2.2	8.6	1.2	7.4	1.6	100.0
		14.4	3.1	8.8	34.0	4.4	29.1	6.2	100.0
남성	78.7	4.1	0.8	2.4	8.4	0.4	3.8	1.3	100.0
		19.3	3.8	11.4	39.6	1.7	18.0	6.3	100.0
여성	68.8	3.0	0.8	1.9	8.9	2.3	12.5	1.9	100.0
		9.5	2.4	6.1	28.5	7.2	40.2	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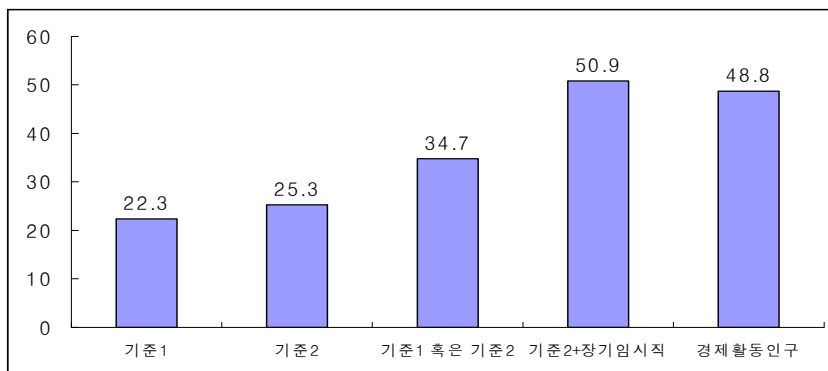
-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근속이 1년 안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40) 7차년도 취업자용 설문문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5]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2.3%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8.8%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조작적 정의를 이용할 때(기준 2)에는 25.3%로 경활조사와의 격차가 감소하며,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 1 혹은 기준 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34.7%까지 증가한다. 여기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50.9%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거의 같은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 간 조사방법상의 차이점<sup>41)</sup>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5]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주: 기준 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 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 2+ 장기임시직에서 장기임시직은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제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41)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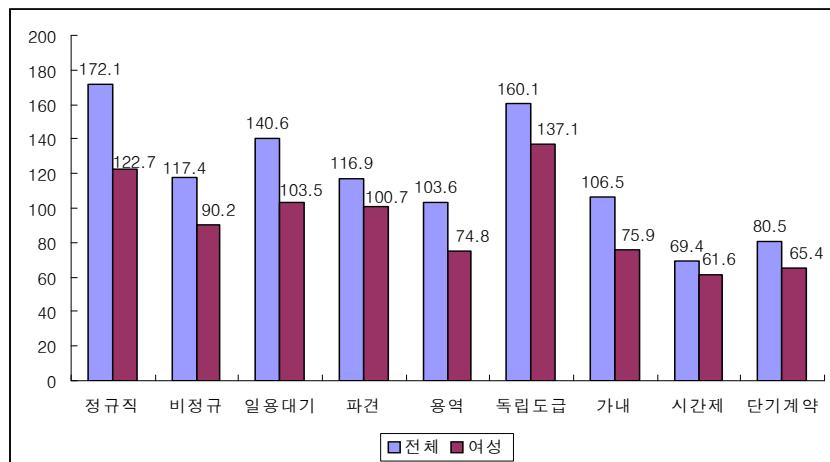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6]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17만4천원으로 정규직(172만1천원) 근로자의 약 68.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천원으로 정규직 근로자(8천5백원)의 82.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 근로(160만1천원)일 때의 임금은 정규직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일용대기(140만6천원), 파견근로(116만9천원)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의 70~80%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용역(103만6천원), 가내 근로(106만5천원), 단기계약(80만5천원), 시간제(69만4천원) 등에서 더 심해졌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규직의 월평균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독립도급일 경우에는 월평균임금이 137만1천원으로 정규직(122만7천원)의 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6]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단위: 만원)



주: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 제 8 장

##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8-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 8-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4년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비중	여성비중	
1차년도	2,415	58.6	41.4	37.6
2차년도	2,262	58.7	41.3	36.3
3차년도	2,082	59.7	40.3	35.6
4차년도	2,005	58.9	41.2	33.9
5차년도	1,980	59.5	40.5	32.9
6차년도	2,000	59.9	40.1	31.9
7차년도	2,027	60.3	39.7	31.8

##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8-2>를 통해 7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6.5%, 자영업자 50.8%, 그리고 가족종사자는 22.7%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고 있다. 특히, 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4.1%였으나 점차 줄어 7차년도 22.7%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KLIPS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는 통계청의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20.3%이므로, KILPS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1.9%로 KLIPS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61.2%), 고용주(34.9%), 가족종사자(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51.4%)의 비중이 가

&lt;표 8-2&gt; 1~7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20.8	55.1	24.1
2차년도	22.2	54.0	23.8
3차년도	23.1	52.9	24.0
4차년도	24.3	51.8	23.9
5차년도	25.9	50.3	23.9
6차년도	26.3	51.2	22.6
7차년도	26.5	50.8	22.7

&lt;표 8-3&gt;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성별	남성	34.9	61.2	3.9
	여성	13.7	34.9	51.4
연령	19세 미만	0.0	0.0	100.0
	20~29세	25.6	49.1	25.3
	30~39세	33.7	44.8	21.5
	40~49세	28.8	46.9	24.4
	50~59세	26.8	52.3	20.9
	60세 이상	12.7	64.4	22.9
학력	중졸 이하	12.2	57.8	30.0
	고졸	27.7	48.9	23.4
	전문대졸 이하	35.2	49.8	15.0
	대졸	54.0	37.4	8.6
	대학원 이상	52.5	47.5	0.0
산업	농림어업	7.7	58.2	34.1
	광공업	39.2	38.5	22.2
	건설업	43.1	49.9	7.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7.9	45.8	26.3
	운수통신업	16.1	79.2	4.7
	금융 및 부동산업	23.9	62.0	14.2
	공공서비스업	34.7	48.6	16.7
	가사서비스업	24.7	75.3	0.0

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34.9%), 고용주(13.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44.8%로 20대에 비해 4.3%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46.9%와 52.3%를 차지하다가 60대에 이르르면 64.4%에 이르고 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sup>42)</sup>로는 광공업(39.2%), 건설업(43.1%), 공공서비스업(34.7%)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제 2 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일수,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자체를 ‘하다 안하다’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8-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1.9%, 불규칙적인 경우가 28.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가(22.2%)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2000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lt;표 8-4&gt;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근로일수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체		71.9	5.9	22.2	6.1
종사상 지위	고용주	87.5	4.6	7.9	6.1
	자영업자	64.9	7.1	27.9	6.0
	가족종사자	69.2	4.7	26.2	6.3
산업	농림어업	18.4	4.5	77.1	6.3
	광공업	89.4	5.6	5.1	5.9
	건설업	49.5	12.4	38.2	5.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6.0	3.4	10.0	6.4
	운수통신업	69.4	12.0	18.6	5.3
	금융 및 부동산업	87.7	5.0	7.3	6.0
	공공서비스업	88.9	7.0	4.1	5.9
	가사서비스업	100.0	0.0	0.0	5.7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87.5%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4.9%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7.9%)보다는 자영업자(27.9%)와 가족종사자(26.2%)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81.6%와 50.6%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각각 77.1%와 3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7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평균근로일수는 6.1일이며 종사상 지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운수업(5.3일)과 건설업(5.5일)에서 주평균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6.4일로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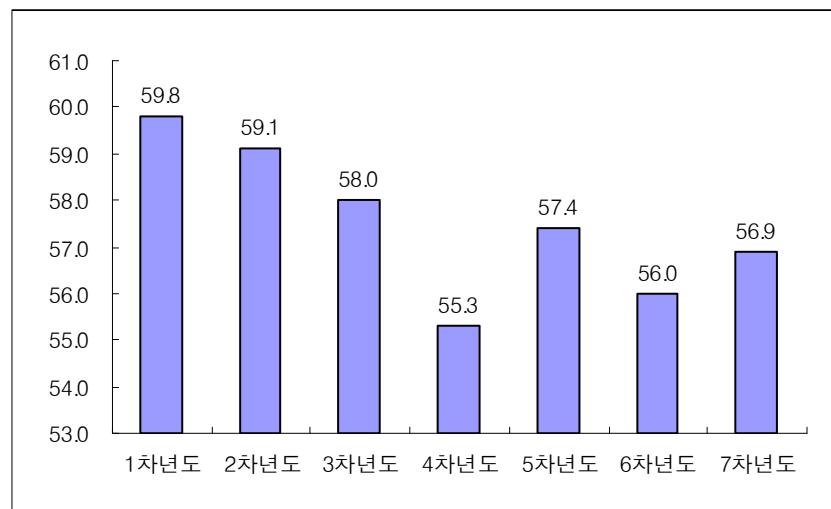
## 2. 주당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59.8시간)와 2차년도(59.1시간)에 조사된 주당근로시간은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차년도에 58.0시간, 4차년도에는 55.3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4시간으로 2.1시간 가량 증가하였고, 6차년도에 56.0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다시 0.9시간 증가한 56.9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7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8.6시간, 자영업자는 56.9시간, 가족종사자는 55.0시간을 근로하였다.<sup>43)</sup>

[그림 8-1] 1~6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43)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하루 24시간 근로를 의미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8-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59.1	59.7	60.7
2차년도	59.1	63.1	58.7	58.4
3차년도	58.0	60.4	57.4	57.0
4차년도	55.3	57.8	55.0	53.6
5차년도	57.4	58.9	57.0	57.3
6차년도	56.0	58.2	55.7	54.1
7차년도	56.9	58.6	56.9	55.0

<표 8-6>은 주당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의 75.7%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 또한 56.9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약 50시간)보다 약 7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표 8-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3.7	12.0	8.6	20.8	33.1	21.8	56.9
성별	남성	2.9	8.7	8.6	24.4	35.1	20.3	57.3
	여성	4.9	17.0	8.6	15.3	30.1	24.1	56.2
연령	19세 미만	-	-	-	-	100.0	-	56.0
	20~29세	8.2	15.9	5.7	11.4	30.6	28.3	56.4
	30~39세	3.6	7.2	8.3	24.4	37.5	19.1	57.3
	40~49세	3.0	7.9	7.8	24.3	32.1	25.0	58.9
	50~59세	3.0	10.6	8.3	18.2	35.2	24.7	58.8
	60세 이상	5.5	28.5	11.9	14.7	27.0	12.4	48.9
학력	중졸 이하	3.1	18.0	8.8	14.7	34.4	21.0	56.5
	고졸	3.7	7.4	8.2	21.8	34.3	24.7	58.9
	전문대졸 이하	3.9	8.9	7.9	27.1	31.0	21.2	56.4
	대졸	4.1	10.0	10.5	28.5	29.0	17.9	53.8
	대학원 이상	10.4	14.9	3.1	37.9	21.9	11.8	47.7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당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24.1%)이 남성보다 3.8%p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시간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주당 5.1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에 비해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9.5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를 제외하면 '40~49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8.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48.9시간의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58.9시간)가 가장 긴 주당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대학원 이상'(47.7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평균 11.2시간이었다. 같은 교육수준의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최소 4.4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표 8-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2.9	30.4	14.9	14.8	29.3	7.8	48.2
	광공업	3.0	6.9	5.8	34.1	39.8	10.4	54.3
	건설업	4.9	7.4	13.1	32.4	37.9	4.3	50.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	5.9	4.4	15.0	34.1	37.6	65.1
	운수통신업	5.9	5.7	9.8	29.5	30.2	19.0	54.4
	금융 및 부동산업	2.6	8.2	12.0	26.1	34.7	16.6	56.1
	공공서비스업	4.4	13.7	10.6	22.1	30.4	18.9	54.2
	가사서비스업	68.4	-	-	31.6	-	-	28.1
종업원 규모	1~4인	3.8	12.6	8.4	19.3	33.3	22.6	57.1
	5~9인	1.3	5.4	10.6	36.9	30.9	15.0	55.2
	10인 이상	2.5	4.7	12.7	46.3	29.0	4.8	51.1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5.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이 산업에서 3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가 57.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6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 3 절 근로소득

<표 8-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명목소득(이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7년간 월평균명목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2천원에서 2차년도에 127만8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38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차년도 뿐 아니라 6차년도에도 (-)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7차년도의 여성 월평균명목소득은 151만6천원으로 남성(267만6천원)의 5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8-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1만8천원에서 5차년도 73만2천원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62만7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7차년도에 70만3천원의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8-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lt;표 8-8&gt; 연도별 월평균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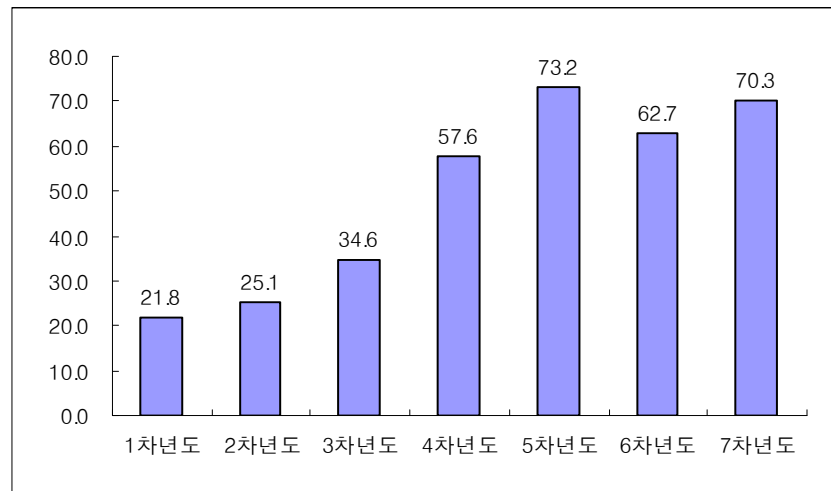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차년도	132.2	136.3	149.2	153.8	88.9	91.6
2차년도	127.8 (-3.3)	130.7 (-4.1)	142.5 (-4.5)	145.7 (-5.3)	83.7 (-5.8)	85.5 (-6.7)
3차년도	144.2 (12.8)	144.2 (10.3)	160.5 (12.6)	160.5 (10.2)	94.4 (12.8)	94.4 (10.4)
4차년도	180.9 (25.5)	173.8 (20.5)	203.3 (26.7)	195.3 (21.7)	118.3 (25.3)	113.7 (20.4)
5차년도	209.8 (16.0)	196.3 (12.9)	232.4 (14.3)	217.4 (11.3)	142.6 (20.5)	133.4 (17.3)
6차년도	214.2 (2.1)	193.5 (-1.4)	238.8 (2.8)	215.7 (-0.8)	144.6 (1.4)	130.7 (-2.0)
7차년도	238.9 (11.5)	208.3 (7.6)	267.6 (12.1)	233.3 (8.2)	151.6 (4.8)	132.2 (1.1)

주: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그림 8-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 차액 비교

(단위: 만원)



주: 소득차액 =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임금.

<표 8-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명목소득 : 2004년  
(단위: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8.3	20.2	29.7	17.9	24.0	238.9
연령	20~29세	12.4	20.1	42.1	12.2	13.2	195.1
	30~39세	8.0	9.4	31.3	21.3	29.9	319.0
	40~49세	9.2	12.3	27.5	22.6	28.4	269.6
	50~59세	6.2	19.8	32.4	17.0	24.6	218.4
	60세 이상	9.2	51.1	26.0	5.6	8.1	115.9
학력	중졸 이하	9.1	37.2	31.7	12.3	9.7	136.6
	고졸	6.3	13.7	31.8	21.5	26.8	259.1
	전문대졸 이하	9.5	12.2	22.8	19.4	36.2	318.8
	대졸 이하	8.6	7.2	25.1	21.2	37.9	337.8
	대학원 이상	20.5	0.8	25.4	12.5	40.9	410.1

주: 월평균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30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에는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이 28.4%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사이에 가장 많은 31.3%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50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 및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40.9%가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중졸 이하는 단지 9.7%만이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8-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371만9천원)이 가장 높으며, 광공업(317만원) 및 공공서비스업(254만7천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

&lt;표 8-10&gt;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소득 : 2004년

(단위 :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산업	농림어업	12.4	47.7	25.2	8.5	6.3	125.8
	광공업	9.9	10.8	22.6	16.2	40.5	317.0
	건설업	7.8	5.9	22.4	28.8	35.1	371.9
	도소매및음식숙박업	7.2	17.8	30.4	19.0	25.6	237.0
	운수통신업	3.6	10.5	44.9	25.6	15.4	240.4
	금융및부동산업	11.7	16.6	36.0	14.8	21.0	186.3
	공공서비스업	7.7	17.6	29.4	18.9	26.4	254.7
종업 원 규모	0명(자영업자)	8.6	27.5	35.1	16.4	12.4	180.5
	1~4인	8.6	7.4	21.6	21.8	40.7	294.9
	5~9인	5.2	3.8	11.7	16.8	62.5	442.5
	10인 이상	4.8	0.0	10.2	17.8	67.2	674.8

주 : 월평균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180만5천원이며, 사업체 규모가 1~4인일 경우에는 자영업의 1.6배, 5~9인 경우에는 2.3배,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3.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38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8-11>를 통해 창업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보다는 87.5%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고용주보다 창업비율이 다소간 더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표 8-12>를 통해 보면, 응답대상자의 73.8%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전체 사업비 구성에서 0.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67.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23.1%를 차지하며, 정부의 보조 지원은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 비율이 78.6%로 고용주에 비해 11.2%p 정도 높은데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는 14.6%로 고용주보다 약 8.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업	87.5	82.5	90.9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5.5	9.7	2.2
기타	7.1	7.8	6.9

<표 8-12>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73.8	67.4	78.6
동업자	2.5	5.0	0.9
은행 등의 용자	18.1	23.1	14.6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4.7	4.4	4.5
사채업자	0.2	0.0	0.4
정부의 보조	0.1	0.2	0.0
기타	0.6	0.0	1.0

제 9 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조직 몰입, 건강과 생활

지금까지 2~8장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루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응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5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한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직업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과 생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절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세부항목 중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항목은 3차년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다.

제2절은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로 직무 만족도, 직무 몰입 정도를 비롯하여 조직몰입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패널조사는 1차년도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묻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이나 기술(기능) 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혹은 기술(기능) 수준간의 불일치도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본인의 기술(기능) 유용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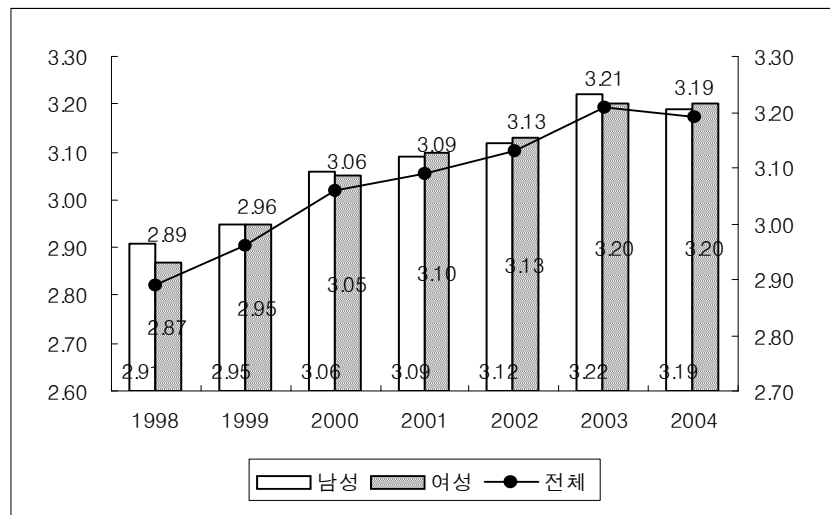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에 대해서도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절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항들은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장애 여부, 질병에 대한 진단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제 1 절 생활 만족도

본 절은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여섯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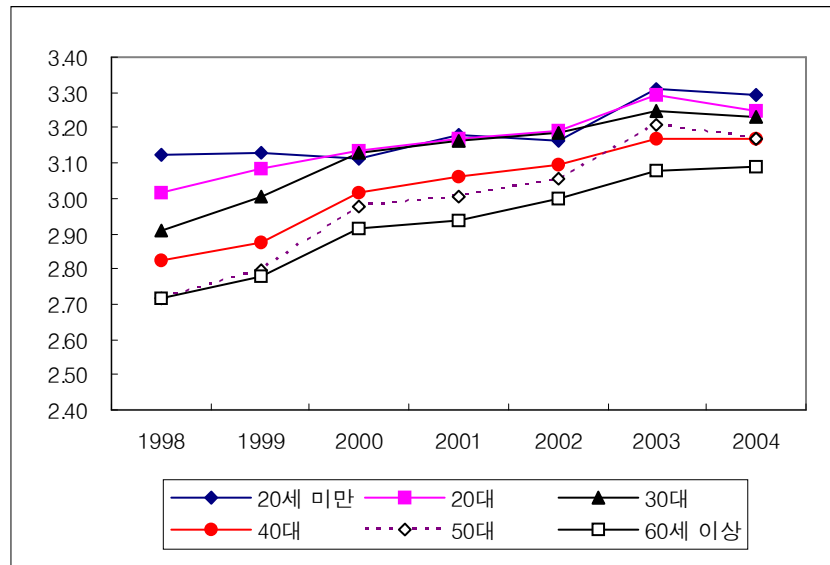
[그림 9-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1998~2004년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9-1]과 같다. 1998년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못미치는 2.89점이었으나 점차 증가하다 2004년에는 3.19점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성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9-2]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그림 9-2]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추이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체로 젊은층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2004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보면, 20세 미만인 경우가 65.8점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61.8점으로 가장 낮다.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65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40대의 만족도는 63.4점에 머물렀다. 또 1998년에는 40대의 만족도가 50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간격이 점차 좁아져 2004년에는 40대와 50대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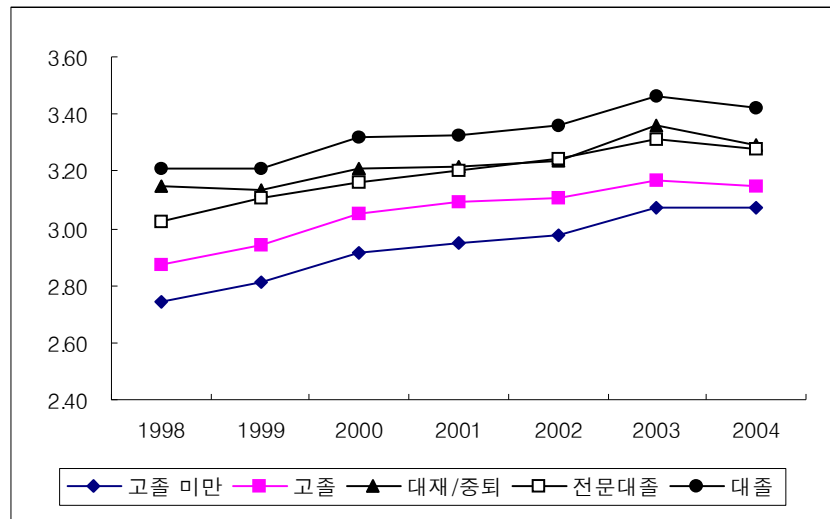
연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일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더욱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세 미만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1998년 당시 3.12점에서 2004년 3.29점



으로 0.17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대의 경우 0.23점(3.02 → 3.25), 60세 이상은 0.37점(2.72 → 3.09) 증가하였다.

[그림 9-3]은 교육수준별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연도에 걸쳐 살펴보면 저학력자일수록 만족도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졸 미만과 고졸자의 경우는 각각 0.33점(1998→2004 : 2.74→3.07), 0.28점(2.87 → 3.15) 가량 증가하였으나, 대학재학 및 중퇴자의 경우는 0.15점(3.14 → 3.29)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대졸자의 경우 0.21점(3.21→3.42) 상승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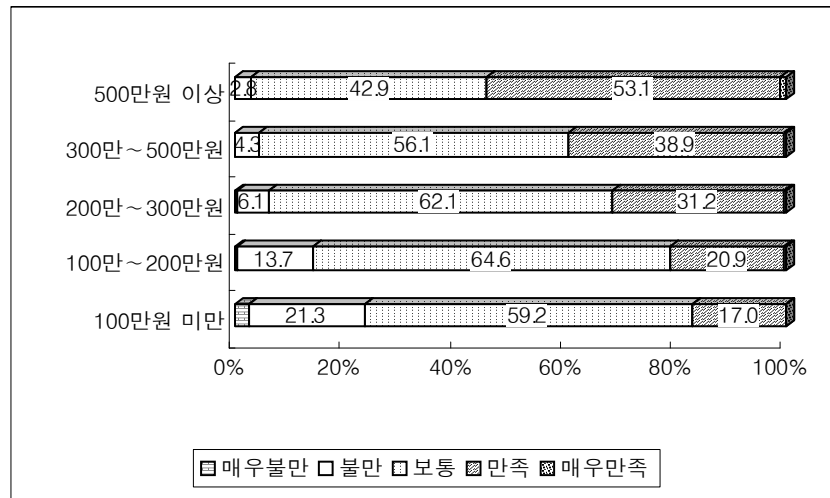
[그림 9-3]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그림 9-4]는 2004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소득수준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 만족)는 응답이 53.1%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7.0%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울러 보통이라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9-4]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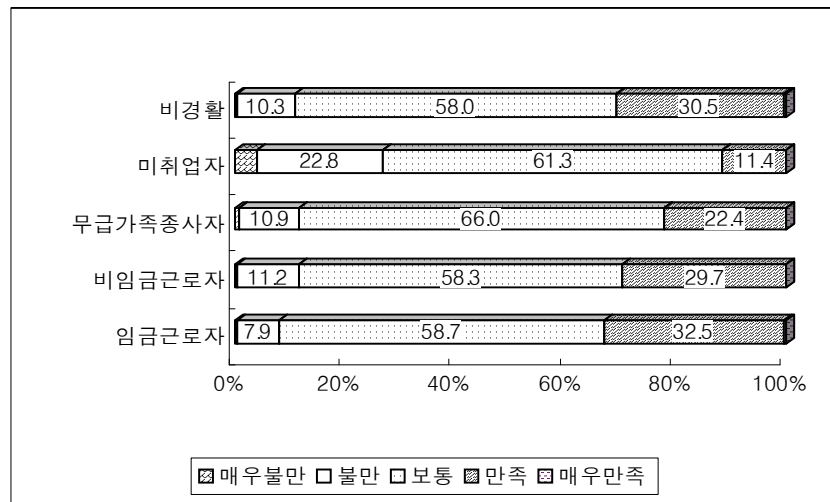
(단위: %)



[그림 9-5]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생활 만족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2.5%로 가장 높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만족 비율은 30.5%로 임금근로자 다음을 차지하

[그림 9-5] 경제활동상태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2004년

(단위: %)



고 있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 + 불만)는 응답이 전체의 27.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우리는 개인의 생활 만족도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혹은 가구의 소득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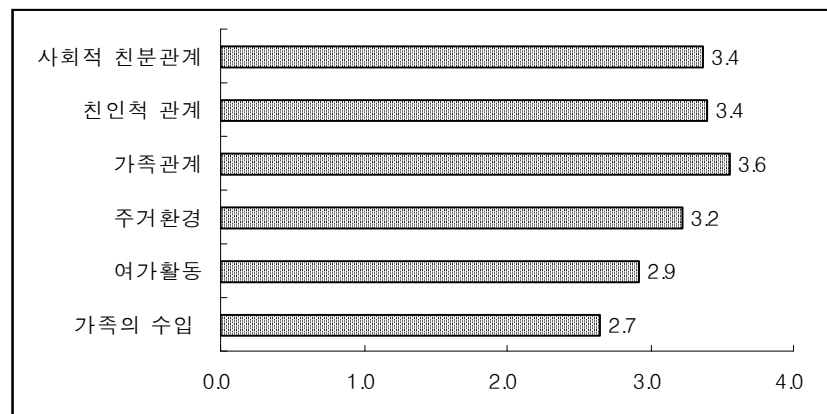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생활만족도 분포를 2004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 9-1> 및 [그림 9-6]과 같다. 여섯 가지 항목 중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의 수입(40.0%)과 여가활동(27.9%)으로 나타났고,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관계(57.1%), 친인척관계(42.6%), 사회적 친분관계(39.5%)였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표 9-1> 항목별 생활 만족도 분포 : 2004년

(단위 : %)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가족의 수입	0.2	11.8	48.0	33.2	6.8
여가활동	0.4	22.6	49.0	25.3	2.6
주거환경	0.9	36.3	49.4	12.1	1.3
가족관계	3.6	53.5	39.4	3.2	0.3
친인척관계	1.2	41.4	53.0	3.9	0.5
사회적 친분관계	1.7	37.8	56.6	3.6	0.2

[그림 9-6] 항목별 생활 만족도 점수 비교 : 2004년



불만족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만족과 상쇄되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6]은 각 항목별 생활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이 역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3.6점)이 가장 높고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2.7점)이 가장 낮음을 보여준다.

## 제 2 절 직무 만족도 및 불일치도, 조직몰입

### 1. 직무 만족도

본 절은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조사된 개인 응답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동패널조사는 1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등 항목별 직무 만족도를 묻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직무 만족도 문항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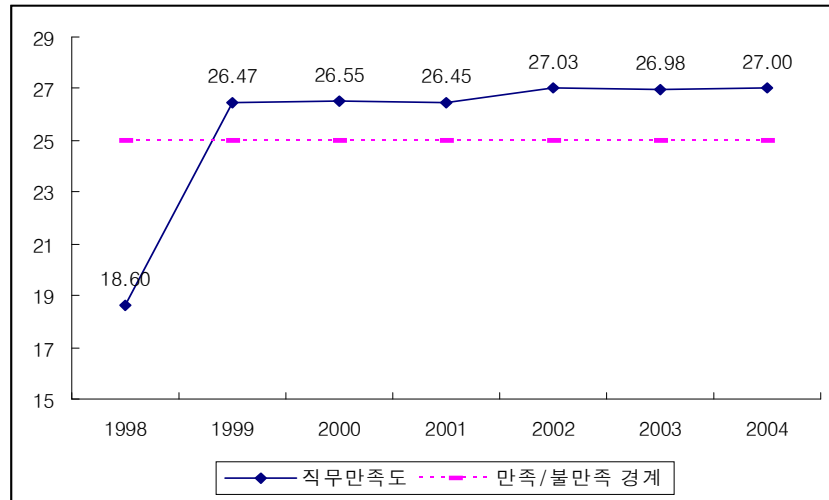
[그림 9-7]은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문항을 별도로 질문하고 있으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1차년도부터 조사된 아홉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1998년에는 직무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으나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만족/불만족 경계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9-8]은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를 1998년과 2004년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1998년에는 임금/보수 및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4년에는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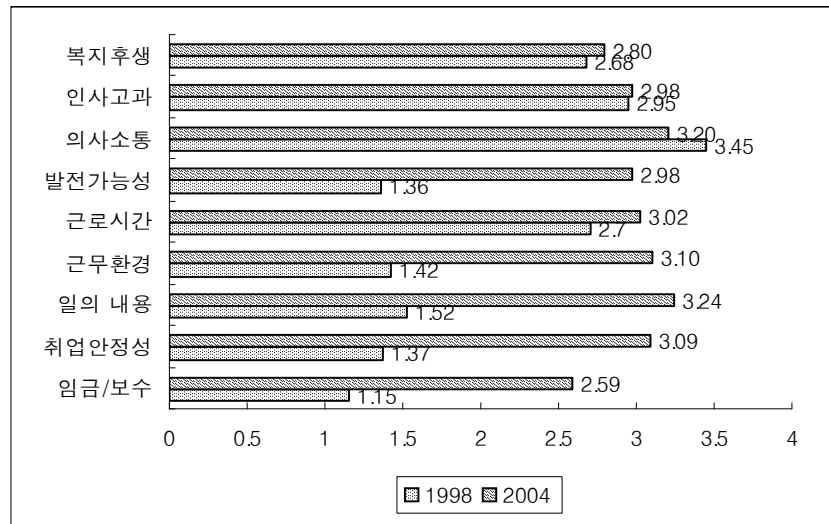
목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지만, 임금/보수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그림 9-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1998~2004년



주: 제시된 결과는 9개 직무만족 항목의 평균점수의 합임(매우 불만족=5 ~ 매우 만족=45).

[그림 9-8]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1998년/2004년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

직무만족 점수가 6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취업안정성(1998 → 2003 = 1.37 → 3.09)과 일의 내용(1.52 → 3.24)이며, 가장 낮아진 경우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45 → 3.20)이다.

다음으로 2004년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의 항목별 차이와 인구학적 특성, 산업별·직업별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항목별 직무만족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표 9-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중(매우 만족 + 만족)이 높은 항목은 일의 내용(35.7%), 취업의 안정성(31.1%)이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중(불만족 + 매우 불만족)이 높은 항목은 임금/보수(46.4%), 복지후생제도(28.4%)로 보인다.

[그림 9-9]는 성별로 각 항목에 대한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 먼저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여성(3.07점)이 남성(3.0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복지후생제도,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개인의 발전가능성 등은 남성의 직무 만족도가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림 9-10]은 전반적인 직무만족 점수를 고용형태별로 보여주는데 임금근로자(3.10점)가 비임금근로자(3.00점)보다 높게 나타난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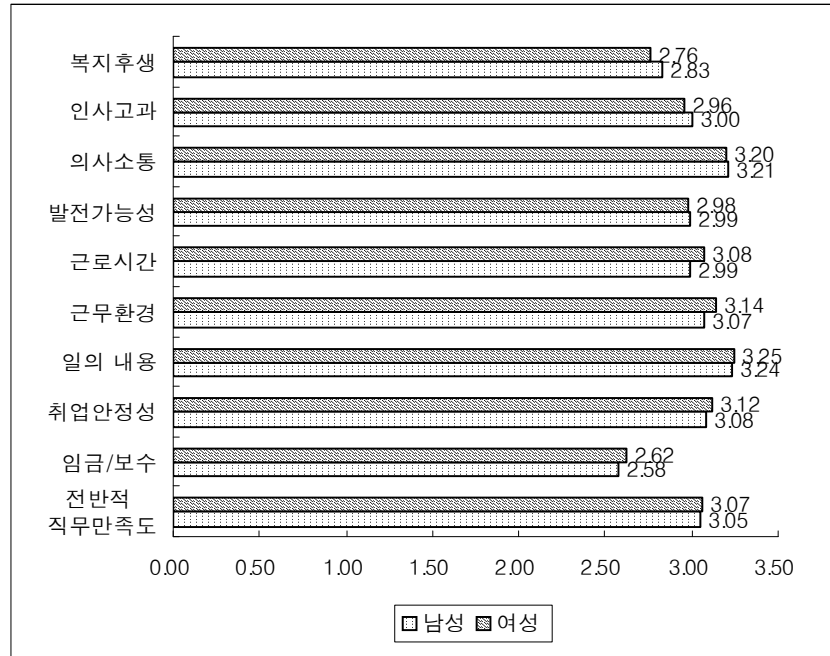
<표 9-2> 항목별 직무 만족도 분포 : 200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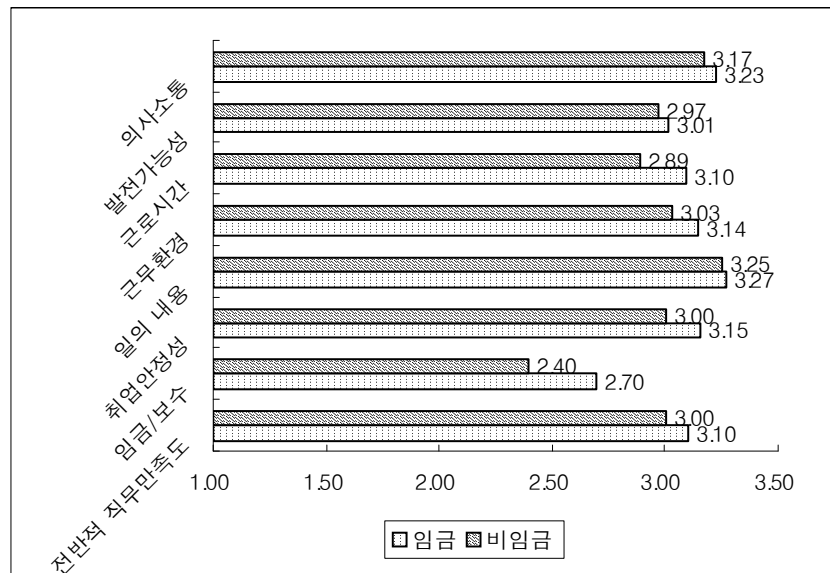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임금/보수	0.4	12.5	40.8	39.5	6.9
취업안정성	1.7	29.4	48.1	19.0	2.0
일의 내용	2.1	33.6	51.8	11.6	1.0
근무환경	1.2	27.6	52.8	17.0	1.4
근로시간	1.1	27.1	47.4	22.0	2.4
발전가능성	1.3	19.5	57.7	19.9	1.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1.6	27.4	61.6	8.7	0.8
인사고과의 공정성	0.7	13.7	70.6	13.2	1.8
복지후생	0.8	13.4	57.5	22.4	6.0

44) 임금근로자만 응답한 인사고과의 공정성(2.98점), 복지후생제도(2.81점) 항목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그림 9-9] 성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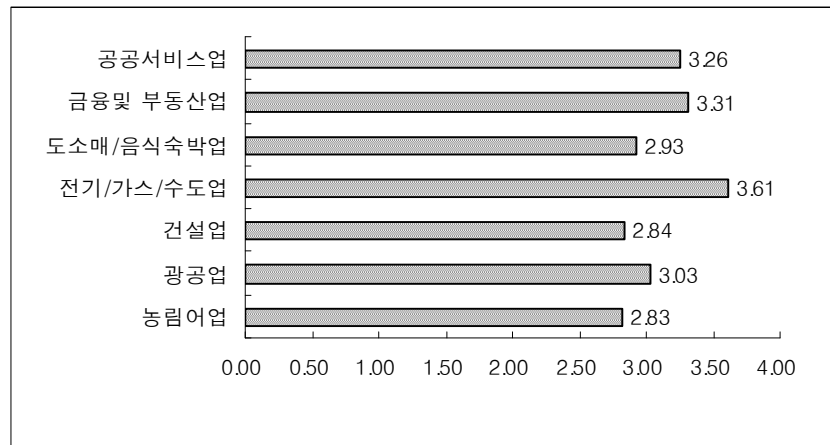
[그림 9-10] 고용형태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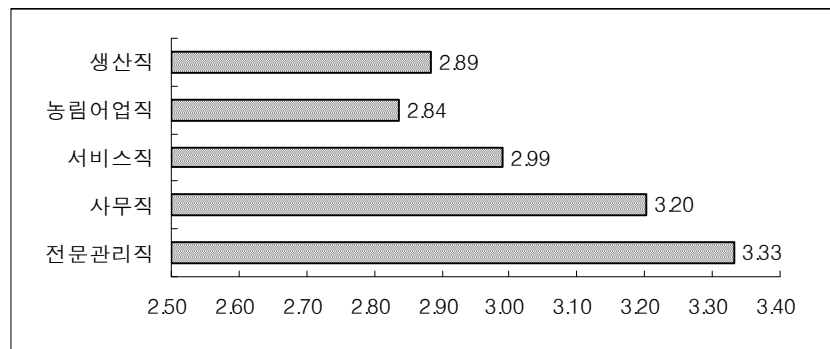
[그림 9-11]과 [그림 9-12]는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산업 및 직업별로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9-11]은 산업별로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가스/수도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직무 만족도는 3.61점으로 가장 높고, 공공서비스업 종사자는 3.26점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 및 건설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 9-12]는 직업별로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 것이다. 그림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직 종사자는 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9-11] 산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2004년



[그림 9-12] 직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2004년





##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의 내용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사하였다. 2차년도 조사부터 실시한 질문은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응답 문항은 2차년도에만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3차년도부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시 3점 척도로 변경하여 과잉(수준이 매우 낮다+수준이 낮은 편이다), 적합(수준이 맞다), 과소(수준이 높은 편이다+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로 표기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패널조사는 3차년도 조사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기술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장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현 직장에서의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②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③ 거의 쓸모가 없다, ④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표 9-3>과 <표 9-4>는 2004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기능)수준의 직무불일치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9-3>에서 보듯이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19.9%)는 하향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20.4%)이 여성(19.2%)에 비해 과잉교육의 비중이 높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과잉교육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및 중퇴자를 제외하고 고졸자의 하향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하향취업 현상이 고졸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서 <표 9-4>는 기술(기능) 불일치 정도를 알아본다. 표에서 보듯이 취업자 중 19.2%가 직무에 비해 기술(기능)수준이 과잉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교육불일치와 유사하게 남성(19.7%)이 여성(18.6%)보다 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교육수준별로도 젊을수록, 대재 및 중퇴인 경우에 과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9-3>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 : 2004년

(단위 : %)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9.9	79.0	1.1
성 별	남 성	20.4	78.4	1.2
	여 성	19.2	79.9	0.9
연 령	20 ~ 29세	25.5	73.5	1.1
	30 ~ 39세	18.6	80.5	1.0
	40 ~ 49세	19.2	79.6	1.2
	50 ~ 59세	16.9	82.1	1.1
	60세 이상	19.1	79.8	1.1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5.7	84.0	0.4
	고졸	21.6	77.3	1.2
	대재 및 중퇴	38.0	61.6	0.5
	전문대졸	21.0	77.0	1.9
	대졸이상	17.7	80.8	1.5

<표 9-4>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불일치 결과 : 2004년

(단위 : %)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9.2	79.8	1.0
성 별	남 성	19.7	79.3	1.1
	여 성	18.6	80.6	0.8
연 령	20 ~ 29세	24.3	74.5	1.2
	30 ~ 39세	17.6	81.5	0.9
	40 ~ 49세	18.6	80.5	1.0
	50 ~ 59세	16.8	82.2	1.0
	60세 이상	18.4	80.8	0.8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5.4	84.3	0.3
	고졸	20.7	78.2	1.1
	대재 및 중퇴	35.5	64.1	0.5
	전문대졸	20.1	78.1	1.8
	대졸 이상	17.2	81.6	1.2

인구학적 특성별로 기술(기능) 유용성에 관한 응답 경향을 <표 9-5>를 통해 살펴본다. 성별로는 본인의 기술(기능)이 유용하다는 응답 비중(똑같이 유용+부분 유용)의 경우 남성(85.1%)이 여성(76.8%)보다 8.3%p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가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9-5>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 200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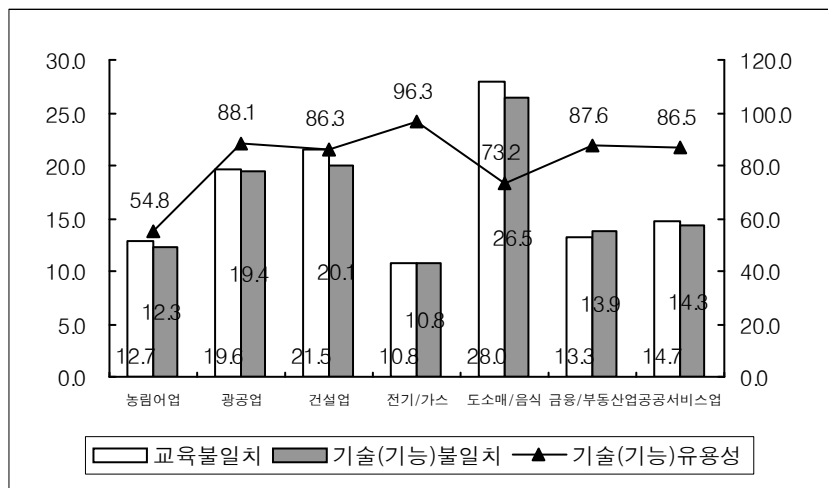
		똑같이 유용	부분 유용	거의 쓸모 없음	특별한 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 아님
전 체		49.0	32.8	11.7	6.5
성 별	남 성	51.5	33.6	10.2	4.7
	여 성	45.2	31.6	13.9	9.2
연 령	20~29세	50.1	36.8	8.5	4.6
	30~39세	55.0	32.9	8.4	3.7
	40~49세	49.4	34.4	9.8	6.5
	50~59세	46.0	30.9	14.7	8.5
	60세 이상	34.7	23.4	27.9	14.0
교육수준	고졸 미만	38.7	29.7	20.7	11.0
	고 졸	46.7	35.4	11.0	7.0
	대재 및 중퇴	38.9	39.6	15.6	5.9
	전문대졸	57.3	33.1	6.1	3.5
	대졸 이상	62.1	30.6	4.8	2.5

[그림 9-13]과 [그림 9-14]는 산업 및 직업별로 직무 불일치와 기술(기능) 유용성의 분포<sup>45)</sup>를 그린 것이다. [그림 9-13]에서 보듯이 직무불일치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고, 가장 낮은 것은 전기/가스/수도업이다. 농림어업은 기술(기능)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산업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직무불일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며, 기술(기능) 유용성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직무불일치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 동시에 기술(기능) 유용성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 직무일치도가 매우 높은 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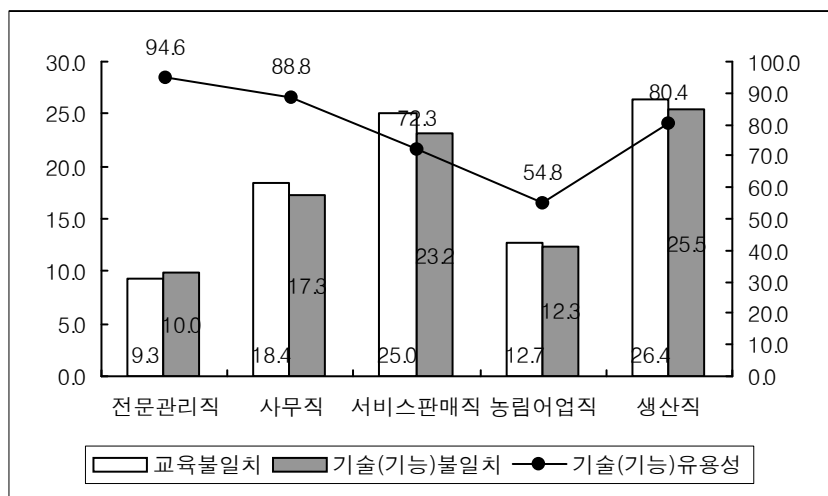
이어서 [그림 9-14]는 직업별 분포를 보여준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직무불일치는 가장 낮게, 기술(기능)의 유용성은 가장 높게 나타나 직무일치도가 높은 직업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비스판매직 및 생산직의 경우 직무불일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은 기술(기능) 유용성이 가장 낮은 직종으로 54.8%만이 현재 일자리의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5) 직무불일치 비중은 “교육 혹은 기술수준이 직무보다 높을 때(과잉)의 비중”을 의미하며, 기술유용성은 “똑같이 유용 + 부분 유용의 비중”을 의미한다.

[그림 9-13]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2004년



[그림 9-14] 직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2004년



### 3.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일자리)과 하는(맡은) 일에 헌신하는지의 정도를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별로 살펴본다.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은 두 가지 개념 모두 직장인의 가치태도를 묻는 것으로, 조

직몰입은 일과 관계없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직무몰입은 회사에 대한 태도가 아닌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02년 5차년도 조사부터 설문 문항에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관한 다섯 문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_\_\_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②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③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④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몰입과 더불어 5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몰입에 관한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질문 문항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서 \_\_\_님께서 주로 하시는(맡고 계시는) 일에 대한 \_\_\_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③ 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④ 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와 같이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며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다섯 문항에 대한 합으로 측정하였다.

2004년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의 점수를 <표 9-6>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직몰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16.2점)이 남성(15.9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조직몰입도가 높은 반면 60세 이상(15.0점)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어서 직무몰입 정도의 결과를 살펴본다. 성별로는 남성(16.6점)과 여성(16.6점)의 직무몰입도 점수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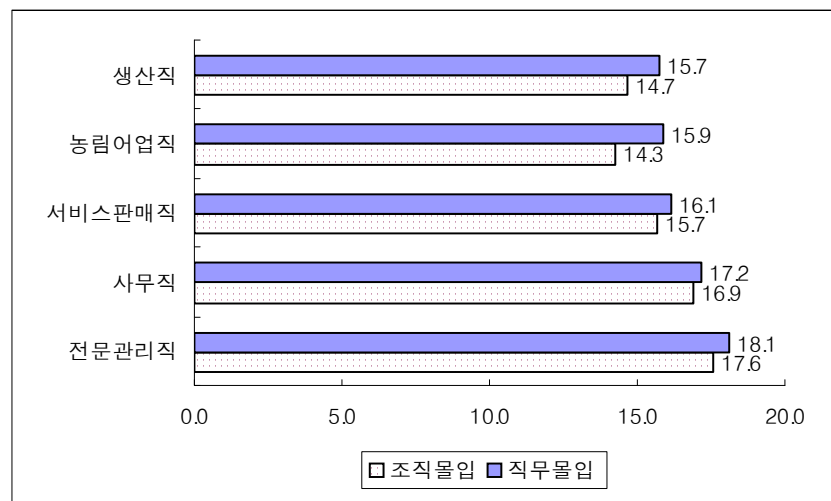
로 조직몰입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몰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16.8점)가 비임금근로자(16.6점)에 비해서 직

<표 9-6>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점수 결과: 2004년

(단위: %)

		조직몰입도	직무몰입도
전 체		16.0	16.6
성 별	남 성	15.9	16.6
	여 성	16.2	16.6
연 령	20세 미만	15.8	16.2
	20~29세	16.2	16.9
	30~39세	16.2	17.0
	40~49세	15.9	16.5
	50~59세	16.0	16.3
	60세 이상	15.0	16.0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4.5	15.5
	고졸	15.6	16.3
	대재 및 중퇴	16.0	16.9
	전문대졸	16.4	17.2
	대졸 이상	17.6	18.0

[그림 9-15] 직업별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점수 비교: 2004년



무몰입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9-15]에서는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점수를 직업별로 비교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조직몰입과 직무몰입 정도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 조직몰입의 결과에서 보듯이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무몰입의 결과에서도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농림어업직과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제 3 절 생활과 건강

이 절은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본다. 노동패널조사는 4차년도 조사에서 건강과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후 5차년도에는 건강 생활에 관한 문항들을 질문하지 않았으나, 6차년도 조사부터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본 조사(개인용 설문과 신규용 설문)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노동패널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건강관련 문항들은 전반적인 건강상태, 장애 및 육체적 제약 여부, 질병 진단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질병 진단경험 여부를 제외한 사항들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항은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등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2004년을 대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표 9-7>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52.5%가 건강한 편이다(아주 건강 + 건강)라고 응답했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음 + 건강이 아주 안 좋음)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8.7%로 여성의 응답 비중 46.7%보다 12.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의 비중(20세 미만 79.8% → 60세 이상 18.8%)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자(20세 미

만 1.6% → 60세 이상 48.7%)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 별로는 고졸 미만인 경우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32.1%)이 가장 높았고, 대학재학 및 중퇴자의 경우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7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학재학 및 중퇴자일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높고 고졸 미만인 경우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학력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연령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표 9-8>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객관적인 지표인 병원진단 경험<sup>46)</sup>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현재 투병중<sup>47)</sup>이라는 응답이 0.5% 가량 있었다. 반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진단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90.2%로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가 병원의 진단경험 여부에 의해 좌우되

<표 9-7> 인구학적 특성별 전반적 건강상태 : 2004년

(단위 : %)

		건강함	보통임	건강하지 않음
전 체		52.5	31.3	16.1
성 별	남 성	58.7	28.4	12.9
	여 성	46.7	34.1	19.2
연 령	20세 미만	79.8	18.6	1.6
	20~29세	73.9	23.2	2.9
	30~39세	60.2	34.0	5.9
	40~49세	52.2	35.6	12.2
	50~59세	39.6	37.5	23.0
	60세 이상	18.8	32.5	48.7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36.6	31.3	32.1
	고졸	55.9	33.7	10.5
	대재 및 중퇴	73.9	21.9	4.2
	전문대졸	64.9	30.7	4.3
	대졸 이상	62.2	32.8	5.1

46) 노동패널에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은 암, 관절염, 요통, 위염, 만성감염, 당뇨 등 17개 항목의 질병이며, 이 중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라도 병원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진단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47) 진단경험은 ① 있지만 완치되었다 ② 있어서 치료중이다 ③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④ 없다 등 4가지 응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투병중이란 ②번과 ③번, 즉 진단받은 적이 있어서 치료중이거나, 진단을 받은 적은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응답에 해당한다.



<표 9-8> 건강상태별 진단경험 및 장애/육체적 제약 여부 : 2004년

(단위 : %)

	진단경험		장애/육체적 제약	
	투병중	없음	있음	없음
건강함	0.5	99.5	0.3	99.7
보통	1.3	98.7	2.8	97.2
건강하지 않음	9.8	90.2	49.2	50.8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육체적 제약<sup>48)</sup>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49.2%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하다고 응답한 개인의 경우에는 0.3%만이 장애/육체적 제약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이상에서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병원의 진단 경험보다는 감각기관 장애 혹은 육체적 제약, 활동 제약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9-9>에서 보듯이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도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의 소득이

<표 9-9> 가구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 : 2004년

(단위 : %)

	일반적 건강상태			진단 경험유무		장애/육체적 제약 유무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00만원 미만	33.9	28.1	38.0	5.7	94.3	24.8	75.2
100만~200만원	51.1	32.2	16.6	2.3	97.7	8.6	91.5
200만~500만원	58.4	32.1	9.5	1.2	98.8	4.5	95.5
500만원 이상	60.8	31.0	8.2	0.9	99.1	4.1	95.9

48) 노동패널조사에서 장애/육체적 제약과 관련하여 묻고 있는 항목은 총 6가지 항목으로 ① 시각, 청각 등 감각기관 장애 ② 걷기, 계단오르기 등 육체적 제약 ③ 배우기, 기억하기 등이 어려움 ④ 옷입기, 목욕하기 등이 어려움 ⑤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이 어려움 ⑥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려움 등이다. 이때 해당 장애 혹은 제약 지속적인 현상일 때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③~⑥의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6개월 이상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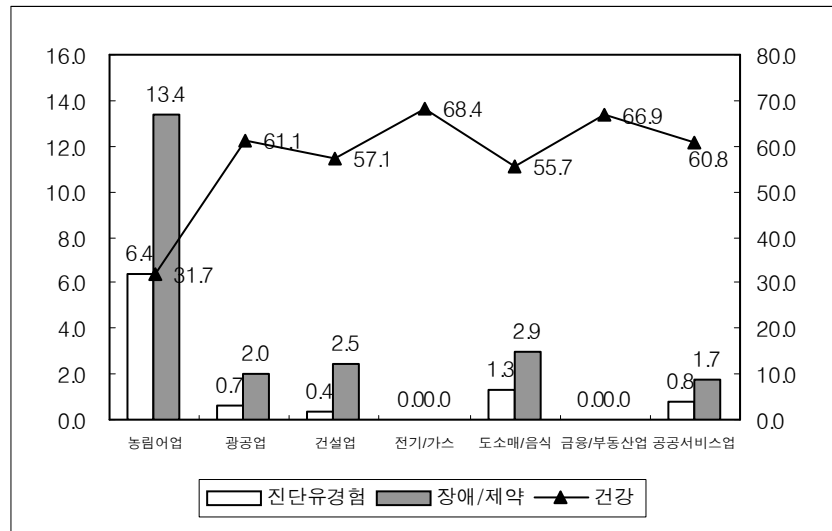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인 경우 38.0%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단지 8.2%만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단 경험 유무의 비중 또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장애 혹은 육체적 제약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24.8%가 그렇다고 응답해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9-16]과 [그림 9-17]은 산업별과 직종별로 건강상태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농림어업직일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으며, 병원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중이 6.4%,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4%로 가장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전기/가스/수도업과 금융/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나 제약을 느낀다는 사람이 1명도 없었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산업도 전기/가스/수도업(68.4%), 금융/부동산업(66.9%)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도 농림어업직의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직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단지 34.3%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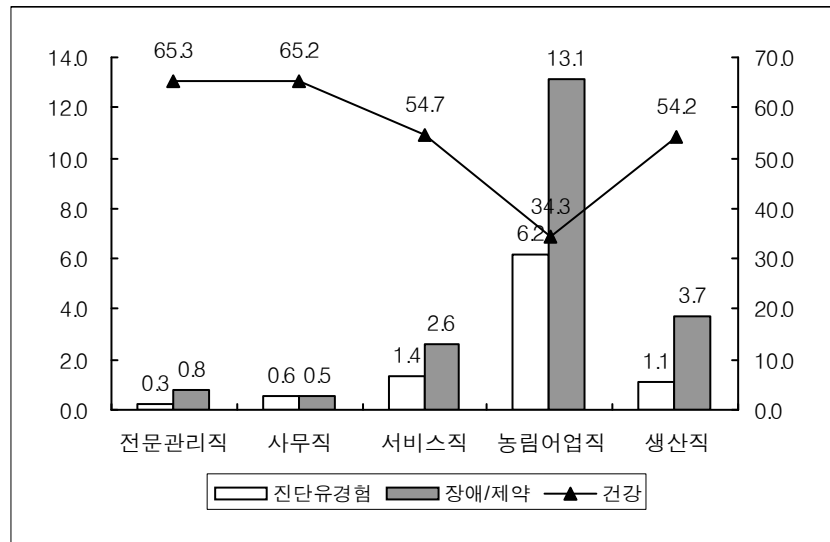
[그림 9-16]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 : 2004년

(단위 : %)



[그림 9-17]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 : 2004년

(단위 : %)



그쳤으며, 13.1%가 일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직종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대체로 이들이 강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제 10 장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는 당해 연도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고, 4차년도(2001년)에는 ‘건강과 은퇴’를 주제로 만 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만 45세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개인과 은퇴하지 않은 개인으로 나누어 은퇴생활 및 은퇴계획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7차년도(2004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일자리에서의 시간배분과 결정과정, 휴가, 일상에서의 시간배분과 여가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 제 1 절 근로시간

### 1. 근무시간의 결정

여기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자신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임금근로자는 절대다수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 규칙에 따라 근무시간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경우 84.9%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이 결정된다고 응답했으며,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은 12.8%였다. 상급지휘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응답은 1.6%로 매우 적었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른다는 응답은 0.7%였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이 결정되는 경우가 76.3%였고, 상급지휘자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16.6%,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6.5%였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 비해 노조가 없는 경우 상급지휘자 판단, 본인의 판단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는 아마도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노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규모 사업체는 특성상 제도화된 인사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10-1>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단위: %)

	노조 있음	노조 없음	모름	전 체
취업규칙·근로계약	84.9	76.3	73.9	78.0
단체협약	12.8	-	8.7	2.7
상급지휘자의 판단	1.6	16.6	11.3	13.5
본인의 판단	0.7	6.5	4.9	5.3
기타	-	0.6	1.2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특성별로 근무시간 결정방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시간이 결정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일용직의 경우 상급지휘자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상용직의 약 4배, 임시직의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도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에서 4배 가까이 높았다.

&lt;표 10-2&gt; 특성별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단위: %)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상급지휘 자 판단	본인의 판단	기타	전체
종사 상 지위	상용직	83.7	3.4	9.4	3.3	0.2	100.0
	임시직	66.7	0.2	19.5	12.5	1.1	100.0
	일용직	49.3	0.3	35.9	12.3	2.1	100.0
직업	전문관리직	83.1	2.9	7.0	6.7	0.3	100.0
	사무직	90.4	3.9	5.0	0.6	-	100.0
	서비스판매직	68.9	1.1	21.5	7.9	0.6	100.0
	농림어업직	58.6	1.6	27.1	6.0	6.6	100.0
	생산직	72.4	2.5	18.9	5.5	0.6	100.0
산업	농림어업	59.7	-	30.7	3.5	6.1	100.0
	광공업	84.4	4.0	7.4	4.0	0.2	100.0
	건설업	62.2	0.5	30.8	6.3	0.2	100.0
	도소매음식숙박	66.8	1.5	24.8	6.8	0.1	100.0
	금융부동산	87.1	5.4	3.9	3.7	-	100.0
	공공서비스업	94.4	1.5	3.2	1.0	-	100.0
	기타 서비스업	80.7	3.0	9.6	5.9	0.9	100.0
사업 체 규모	10인 미만	63.5	0.1	28.6	7.7	0.2	100.0
	10~29인	81.2	-	14.5	4.0	0.3	100.0
	30~99인	86.3	2.1	8.9	2.8	-	100.0
	100~299인	90.2	4.2	3.1	2.4	-	100.0
	300~499인	89.0	3.1	5.4	2.6	-	100.0
	500인 이상	82.6	14.4	1.7	1.3	-	100.0
	정부기관	94.6	2.7	1.9	0.8	-	100.0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함	44.1	-	27.7	21.3	6.9	100.0

주: 정부기관,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사업체 규모를 따로 질문하지 않고 있음.

직업별로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은 상급지휘자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각각 21.5%, 27.1%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는 서비스판매직, 전문관리직에서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르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른 산업에 비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상급지휘자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체로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관리가 제도화된 특성을 반영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대신 상급지휘자 판단이나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에게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질문하였다. 유급 종업원을 두고 일하는 고용주의 경우 81.1%가 근무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50.2%만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응답했고, 무급가족종사자도 이와 유사하게 51.3%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10-3>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규칙성 여부

(단위 : %)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근무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다	50.2	81.1	51.3	58.6
근무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49.8	18.9	48.7	41.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근무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부동산산업이 92.5%로 가장 높았고, 광공업 77.1%, 도소매/음식숙박업 69.6% 순이었다. 건설업은 절반인 50.0%만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응답했으며, 농림어업은 그 비중이 8.6%에 불과했다.

&lt;표 10-4&gt; 업종별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규칙성

(단위 : %)

	근무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다	근무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전체
농림어업	8.6	91.4	100.0
광공업	77.1	22.9	100.0
건설업	50.0	50.0	100.0
도소매/음식숙박업	69.6	30.4	100.0
금융 및 부동산업	92.5	7.5	100.0
기타 서비스업	69.3	30.7	100.0

근무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들이 왜 근무시간을 그렇게 정했는지는 <표 10-5>에서 분석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 상관없이 80% 이상이 사업상 유지해야 하는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일의 분량 때문이라는 응답도 10%대에 달했다. 근무시간이 비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들은 그날의 사정에 따라 일해야 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표 10-6 참조).

&lt;표 10-5&gt;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이유

(단위 : %)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사업상 유지해야 되는 근로시간이 있으므로	80.4	85.9	85.6	83.5
일의 분량에 따라 정함	16.4	12.5	14.0	14.5
매출액에 따라 정함	0.9	0.4	-	0.5
기타	2.4	1.2	0.3	1.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lt;표 10-6&gt;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비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결정 이유

(단위 : %)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그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78.8	77.0	86.3	80.6
업무량만 채우면 되므로	16.2	12.4	8.2	13.6
기타	5.0	10.6	5.5	5.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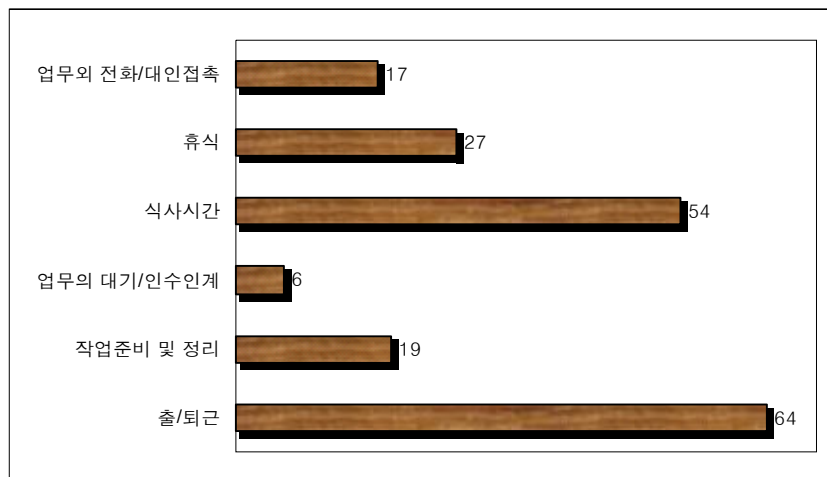
2. 근로의 준비, 대기, 휴식시간

임금근로자들이 평일의 업무를 위해 출퇴근을 포함한 근로의 준비, 대기 및 휴식시간에 쓰는 시간은 평균 187분, 즉 3시간 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퇴근에 평균 64분을 썼으며, 식사시간에 54분 정도를 할애했다. 업무 중 휴식시간은 27분이었으며, 작업준비 및 정리에 는 19분, 업무의 전화 및 대인접촉에는 17분을 사용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230분, 즉 3시간 50분 정도를 평일 업무를 위한 준비, 대기,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여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43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퇴근에는 38분을 사용해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짧았으며, 식사시간에는 51분을 사용하였고, 업무 중 휴식에는 47분을 사용하였다. 이는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20분 정도 긴 것이다. 작업준비 및 정리에 는 임금근로자보다 10분 긴 29분을 사용하였으며, 업무의 전화 및 대인접촉도 임금근로자보다 긴 31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종종 점포가 집에 딸려 있으므로 업무 시간 중 자녀 돌보기 등 집안일에 쓰는 시간도 별도로 질문하였는데, 이를 위해 평균 2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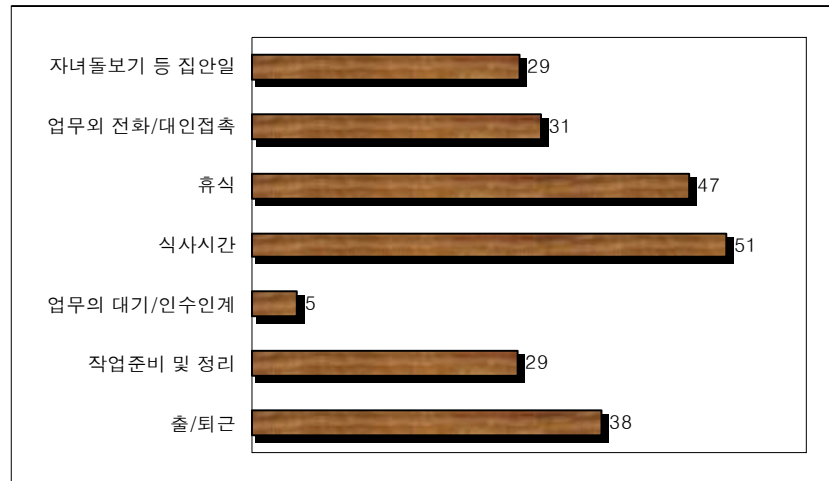
[그림 10-1] 임금근로자의 근로준비, 대기 및 휴식시간

(단위: 분)



[그림 10-2]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준비, 대기 및 휴식시간

(단위: 분)



### 3. 휴무와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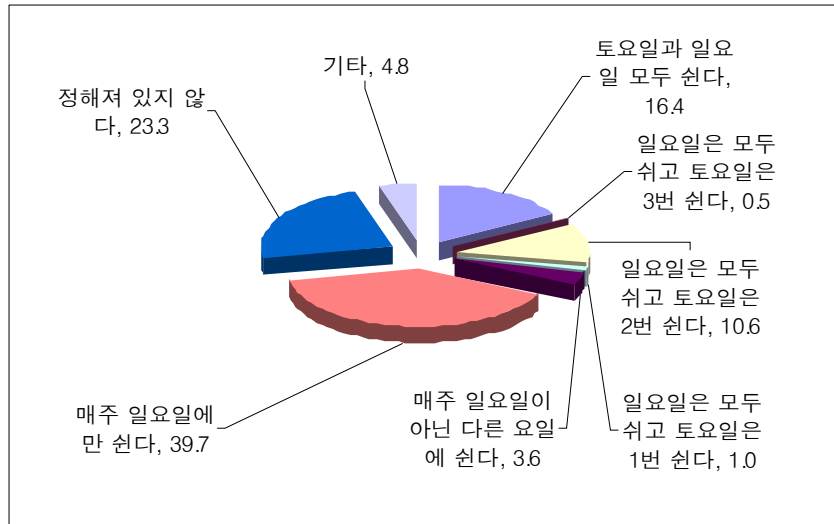
[그림 10-3]은 임금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쉬는 요일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요일에만 쉬는 응답이 가장 많은 39.7%였으며,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람도 23.3%나 되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쉬는 주5일 근무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많은 16.4%였다. 일요일은 모두 쉬고 토요일은 격주로 쉬는 경우는 10.6%였다.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정기적으로 쉬는다고 응답한 3.6%에 대해서도 토요일에 해당하는 정기적으로 쉬는 전날의 근무형태를 질문하였다. 정상근무 한다는 사람이 79.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매주 쉬는 응답은 16.0%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임금근로자들 중 어떤 식으로든 토요일에도 쉬는 사람들의 비중은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 외에도 법정 공휴일, 설과 추석, 기타 회사의 정해진 공휴일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중에서 법정 공휴일의 실제 쉬는 날 분포를 <표 10-8>에서 요약하였다. 신경은 임금근로자의 75.6%가 쉬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쉬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은 노동절로 52.5%만이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절은 토요일, 현충일은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

[그림 10-3] 임금근로자의 정기적으로 쉬는 요일

(단위 : %)



<표 10-7>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쉬는 임금근로자의 정기 휴무일 전일 근무형태

(단위 : %)

휴무 형태	비중 (%)
매주 쉰다	16.0
월 3회 휴무	0.8
월 2회 휴무	3.2
월 1회 휴무	0.5
매주 정상근무	79.4
전 체	100.0

금근로자들이 공휴일을 제대로 쉬면서 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9) 표의 “해당 없음”은 그 당시 미취업상태 또는 다른 직장에 다니던 중 이어서 이 직장에선 해당일에 없었다는 뜻이다. 만약, “해당 없음”도 <표 10-8>의 쉬었음과 쉬지 않았음의 비율대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들은 공휴일 11일 중

49) 조사 기간이 5~8월에 걸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래의 법정공휴일이 모두 2004년 공휴일은 아니며, 현충일, 제헌절까지는 2004년,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은 2003년이었을 것이다.

6.8일, 즉 7일 정도는 쉬었고 4일 가량은 못 쉬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들의 법정 공휴일 중 쉬는 비중을 <표 10-9>에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공휴일 중 쉬는 비중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었다. 신정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10.4%p 낮은 65.2%가 쉬었다. 쉬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노동절로 22.2%였다. 나머지 공휴일도 20%대만이 쉬었다고 응답해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40%p 가량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표 10-8> 법정 공휴일 중 임금근로자 실제 쉰 날

(단위: %)

	쉬었음	쉬지 않았음	해당 없음	전체
신정	75.6	14.4	10.0	100.0
삼일절	56.1	35.2	8.8	100.0
식목일	54.3	38.6	7.1	100.0
석가탄신일	56.8	36.3	6.9	100.0
노동절	52.5	40.9	6.6	100.0
어린이날	56.1	37.4	6.5	100.0
현충일	55.5	37.9	6.7	100.0
제헌절	55.2	36.3	8.5	100.0
광복절	55.4	34.5	10.1	100.0
개천절	53.2	34.6	12.2	100.0
성탄절	57.5	30.7	11.8	100.0

주: “해당 없음”에는 해당일에 미취업자였거나 다른 직장에 다닌 경우가 포함됨.

<표 10-9> 법정 공휴일 중 비임금근로자 실제 쉰 날

(단위: %)

	쉬었음	쉬지 않았음	해당 없음	전체
신정	65.2	28.6	6.1	100.0
삼일절	26.0	67.5	6.5	100.0
식목일	23.5	70.7	5.8	100.0
석가탄신일	26.5	67.9	5.5	100.0
노동절	22.2	72.3	5.5	100.0
어린이날	24.9	69.7	5.4	100.0
현충일	23.5	70.8	5.7	100.0
제헌절	22.8	70.8	6.4	100.0
광복절	23.2	69.7	7.1	100.0
개천절	22.5	69.7	7.9	100.0
성탄절	35.4	57.0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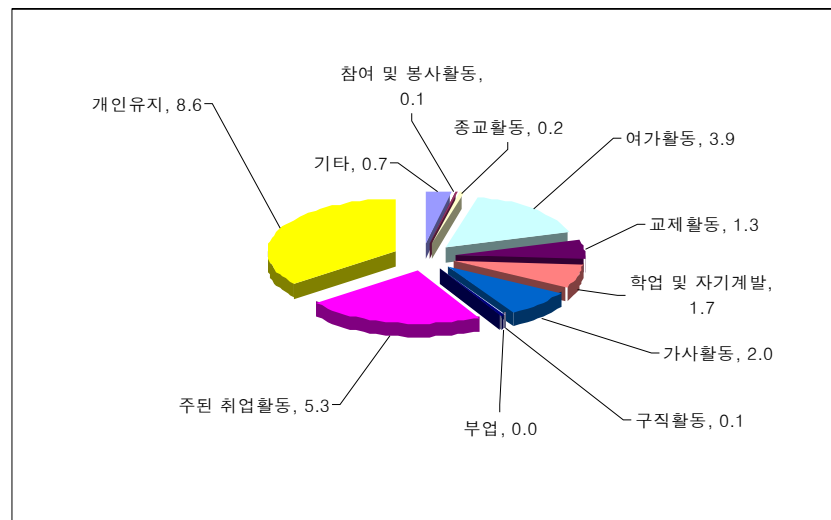
주: “해당 없음”에는 해당일에 미취업자였거나 다른 직장에 다닌 경우가 포함됨.

#### 4. 일상에서의 시간 배분

부가조사에서는 하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모두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림 10-4]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일 시간배분을 요약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수면, 세면, 식사 등을 포함하는 개인유지에 8.6시간을, 주된 취업활동에 5.3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에는 3.9시간을 사용하였다. 가사활동에는 2.0시간, 학업 및 자기계발에는 1.7시간, 교제활동에는 1.3시간을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는 분단위로 일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5년마다 “생활시간조사”로 발표하고 있다.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유지시간이 10시간 34분, 여가시간은 5시간 13분 등으로 패널조사와는 항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기 쓰는 방식을 활용해 분단위로 세밀히 무엇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통계청의 조사방법과 노동패널의 조사방법상의 차이로 보인다. 통계청이 조사에 있어 좀 더 정교한 방식을 이용하므로, 실제 이용하는 시간의 수준(level)을 알고자 할 때는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

[그림 10-4] 15세 이상 개인의 항목별 시간배분: 평일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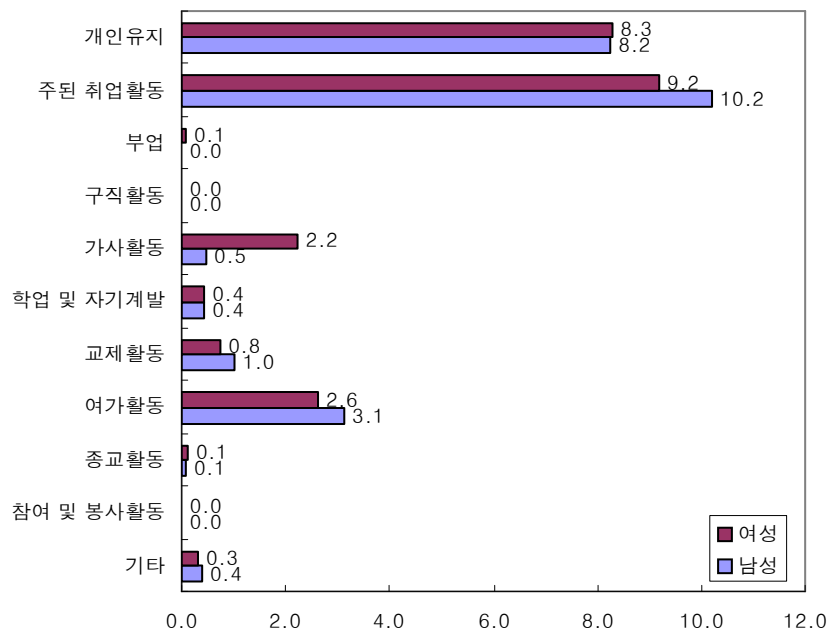


이 적절할 것 같고, 노동패널조사는 많은 다른 조사항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별 비교를 하는 목적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집단을 세분해 취업자만 대상으로 평일의 시간배분을 살펴보았다. 취업자 남성, 여성은 개인유지에 각각 8.2, 8.3시간을 사용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주된 취업활동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시간 많은 10.2시간을 사용하였다. 반면, 가사활동은 여성이 2.2시간, 남성이 0.5시간으로 여성이 1.7시간 더 길었다. 교제활동은 남성이 1시간, 여성이 0.8시간이었고, 여가활동도 남성이 약간 더 길어 남성 3.1시간, 여성 2.6시간이었다. 정리하면, 취업자 남성이 가사활동 대신 여가와 교제, 취업활동에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취업자 여성은 그런 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가사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5] 취업자의 성별 평일 항목별 시간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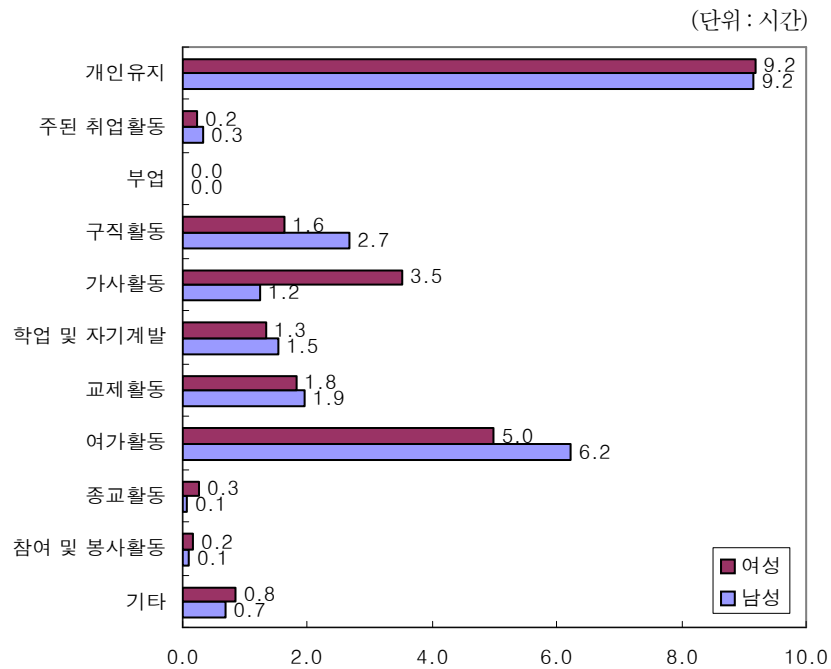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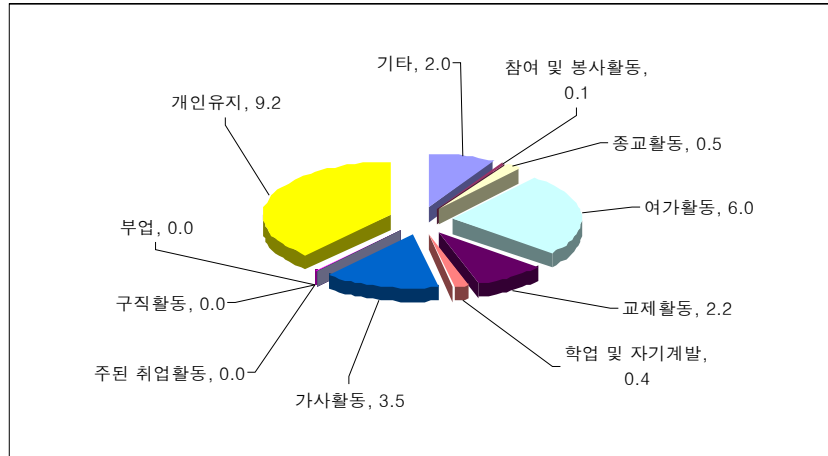
이번에는 실업자만 대상으로 평일의 시간배분을 [그림 10-6]에서 살펴 보았다. 실업자 남성, 여성은 개인유지에 9.2시간을 사용해 취업자보다 1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에는 평균적으로 남성 2.7시간, 여성 1.6시간을 활용하였다. 한편, 가사활동은 남성 1.2시간, 여성 3.5시간으로 취업자에 비해 남성 0.7시간, 여성 1.3시간 더 가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상태로 인해 남는 시간의 상당부분을 어쩔 수 없이 “여가활동”으로 남성 6.2시간, 여성 5.0시간 썼으며, 교제활동에는 남성 1.9시간, 여성 1.8시간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고령자는 무엇을 하면서 평일을 보내는지 [그림 10-7]에서 요약하였다. 개인유지에는 9.2시간을 썼으며, 여가활동에는 6.0시간을 사용하였다. 교제활동에는 2.2시간, 가사활동에는 3.5시간을 사용하였다. 종교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학업 및 자기계발에도 각각 0.5, 0.1, 0.4시간을 이용하였다.

[그림 10-6] 실업자의 성별 평일 항목별 시간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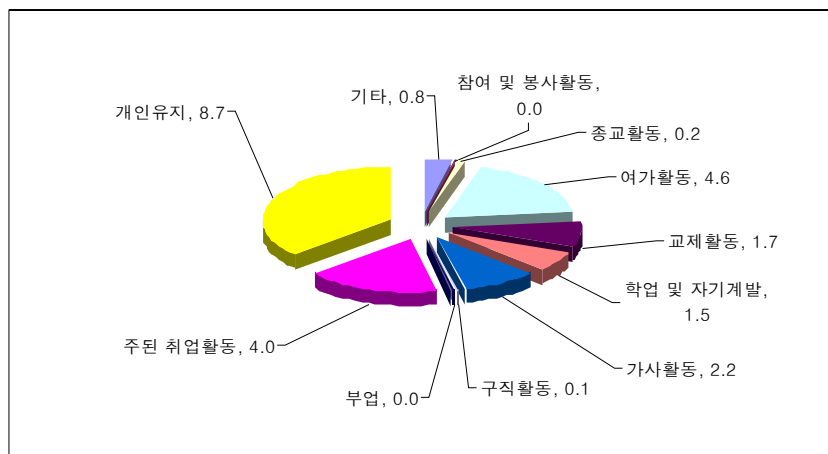


[그림 10-7] 50세 이상 고령자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일 항목별 시간배분  
(단위: 시간)



토요일의 항목별 시간배분은 [그림 10-8]에서 요약하고 있다. 개인유지에는 8.7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주된 취업활동에는 4.0시간을 사용하였다. 반면 여가활동에는 4.6시간을 활용하여 주된 취업활동시간이 줄어들고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활동 2.2시간, 교제활동 1.7시간 등 나머지 활동에서는 평일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림 10-8] 토요일 항목별 시간배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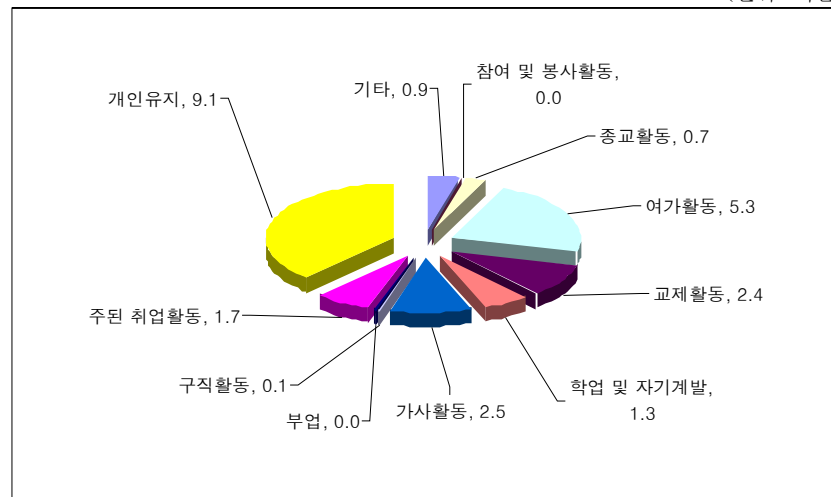




일요일의 항목별 시간배분은 [그림 10-9]에서 요약하고 있다. 개인유지에는 토요일보다 늘어난 9.1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주된 취업활동에는 단지 1.7시간만을 사용하였다. 반면 여가활동에는 5.3시간을 활용하여 토요일보다 더 취업활동은 줄어들고 여가활동이 늘어났다. 교제활동도 2.4시간으로 더 늘어났다. 종교활동은 0.7시간, 가사활동 2.5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 및 봉사활동은 반올림해도 0.0시간일 만큼 별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림 10-9] 일요일 항목별 시간배분

(단위: 시간)



다음으로, 사람들이 일주일 중 여가활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사교 및 모임활동, 오락/게임, 운동/스포츠, 여행/관광/나들이로 나누어 조사일 직전 일주일 동안 관련 활동을 했는지, 했으면 누구와 했는지,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를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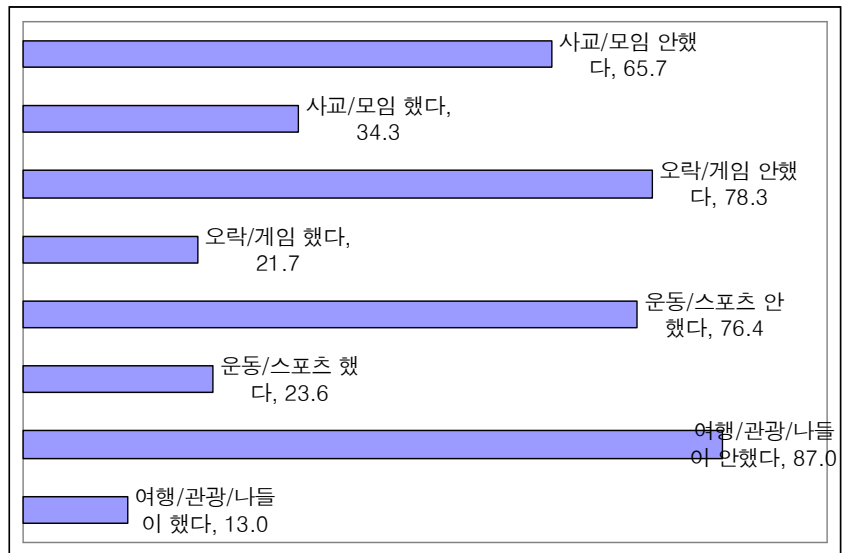
사교 및 모임활동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34.3%가 했다고 응답하였다. 오락 및 게임은 21.7%가 했다고 응답했고, 운동/스포츠를 한 사람은 23.6%, 여행/관광/나들이를 했다는 사람은 13.0%였다. 사교 및 모임활동을 한 사람의 경우 일주일간 평균 22.8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오락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은 일주일 평균 18.7시간을 사용하였다. 운동/스포츠를 한 사

람들은 일주일 평균 16.1시간, 여행/관광/나들이를 한 사람들은 일주일 평균 42.6시간을 사용하였다.

여가활동을 했을 경우 누구와 했느냐는 질문에는 여행/관광/나들이의 경우 대다수인 61.9%가 가족/친지와 함께 했다고 응답했으며, 운동/스포츠의 경우에는 다수가 혼자(59.4%)했다고 응답하였다. 오락/게임의 경우에도 혼자 한 비율이 89.8%로 다수였으며, 사교/모임은 친구/동료와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10] 조사일 직전 주의 여가활동

(단위: 시간)



<표 10-10> 누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했는지

(단위: %)

	여행/관광/나들이	운동/스포츠	오락/게임	사교/모임
혼자	7.8	59.4	89.8	2.4
가족/친지	61.9	15.8	1.4	22.0
친구/동료	28.2	23.3	8.8	73.3
기타	2.0	1.4	0.1	2.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 5. 법정근로시간 단축

부가조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법정근로시간단축의 포괄범위와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나는 근로시간의 특징을 「매월노동통계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된 근로시간 통계와 비교해 살펴본 다음,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근로자들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근로시간단축이 실근로시간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 가. 노동패널조사의 근로시간 특징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설문항목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질문하고,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했는지를 묻는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정규근로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나 되는지를 추가로 질문한다. <표 10-11>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보고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요약하고 있다. 1998년 53.0시간에서 2004년 49.9시간에 이르기까지 매년 조금씩 줄어 왔다.

비교를 위해 매월노동통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 통계도 <표 10-11>에서 정리하였다.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시계열이 10인 이상 사업체로 연결되는 관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도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통계치를 비교하면 세 조사 간에 근로시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8년 같은 경우 약 7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고, 2004년에도 6시간 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 통계는 매월노동통계조사와는 약 3시간 남짓, 한국노동패널조사와는

&lt;표 10-11&gt;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명)

	한국노동패널조사		매월노동 통계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주당평균근로 시간(전체)	주당평균근로 시간(10인 이상)		
1998	53.0 (17.8)	53.3	45.9	42.7
1999	52.8 (16.6)	53.7	47.9	42.6
2000	52.3 (15.9)	53.1	47.5	41.6
2001	51.0 (16.3)	51.7	47.0	41.6
2002	50.7 (15.2)	51.5	46.2	41.5
2003	50.6 (15.8)	50.9	45.9	43.2
2004	49.9 (15.2)	50.3	45.7	42.4

주: ( )안은 표준오차. 매월노동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모두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2003년까지는 KLI 노동통계(2004년), 2004년은 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인용.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원자료에서 계산하였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0인 이상 통계에는 정부기관 포함.

무려 약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 조사 간의 근로시간 불일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조사 방식이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전체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쳐서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합계로 조사하기 때문에 편의(bias)가 개입될 개연성이 있고, 사업주 응답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과소 응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만 조사하고 있는 점도 노동패널조사와의 차이의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2년까지는 지난주의 근로시간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sup>50)</sup> 단지 한 문항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가능성이 여러 문항으로 조사할 때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볼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해 볼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와의 격차는 불과 2시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테면, 199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0) 2003년부터 주업의 근로시간과 부업의 근로시간을 설문지상에서 명시적으로 나누어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48.9시간이었던 데 반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53.1시간이었고, 2000년에는 각각 50.0시간과 52.5시간, 2004년에는 48.0시간과 50.2시간이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볼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비해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은 연도에 따라 무려 주당 작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적게 일했다는 것이다. 매월노동통계의 2004년 통계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월간 199.2시간,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98.3시간 일해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큰 차이로 측정오차의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면, 조사 방법상의 특징으로 볼 때, 개별 근로자가 직접 자신이 일한 근로시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문항을 통해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근로시간이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근로시간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근로자 응답이므로 약간 과대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10-12>는 종사상 지위별로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를 요약하고 있다. 상용직은 1998년 주당 54.3시간으로 임시직(48.7시간)에 비해서는 5.6시간, 일용직(46.5시간)에 비해서는 7.8시간 더 오래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용직에 비해 임시직이, 임시직에 비해 상용직이 더 오래 일하는 추이는 2004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상용직(51.6시간)은 임시직(43.9시간)에 비해 7.7시간, 일용직(43.4시간)에 비해서는 8.2시간 더 일해 1998년보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

<표 10-12>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1998	54.3	(16.2)	48.7	(22.5)	46.5	(21.8)
1999	55.1	(14.6)	48.0	(20.1)	44.3	(19.4)
2000	54.2	(14.4)	46.5	(19.5)	45.4	(18.4)
2001	52.5	(14.6)	47.8	(20.6)	43.1	(19.9)
2002	52.5	(13.9)	46.3	(18.3)	43.3	(17.6)
2003	52.5	(14.2)	43.5	(19.5)	43.6	(18.6)
2004	51.6	(13.3)	43.9	(21.1)	43.4	(17.6)

주: ( )안은 표준오차. 결측치 및 잘못 응답된 값은 삭제.

직간의 근로시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근로시간 단축의 포괄범위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 토요일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토요일휴무제가 실시되었는지 안다고 응답한 514명 중 2001년부터라고 응답한 사람은 13명에 불과했지만, 2002년은 60명, 2003년은 136명, 2004년은 28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51)</sup> 여기서는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2002년 이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포괄범위를 분석하겠다.<sup>52)</sup>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14.2%, 임시직은 4.0%, 일용직은 0.6%가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sup>53)</sup>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매우 적은 비율만이 근로시간 단축의 수혜를 받았는데, 임시 및 일용직의 경우 특성상 도소매,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2004년 법정근로시간단축 대상이었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해석해야 될 것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부동산업의 정규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이 40.9%로 가장 높았고, 공공서비스업이 33.1%, 광공업이 12.2% 순이었다.<sup>54)</sup>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의 근로시간 단축 수혜를 본 근로

51) 부가조사 문 3-3에 대한 응답.

52) 2004년 7월 1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의 포괄범위를 보기엔 조사시점이 5~9월에 걸쳐 있었던 사정상 분석대상자 수가 적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사실상, 이 점을 고려하여 부가조사에서는 2004년에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문21을 통해 2002년 1월 이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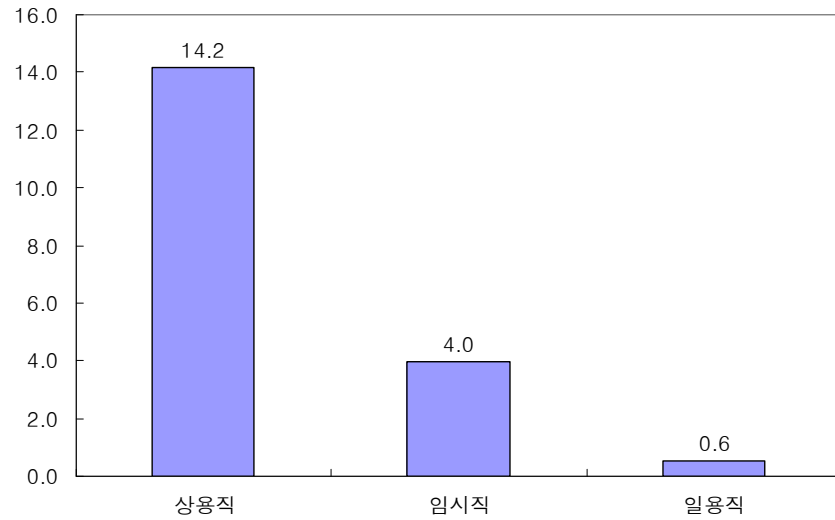
53) 상용직 17.9%와 같은 절대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조사된 어떤 사람의 근로시간이 7월에 단축되었다더라도 실제 조사는 5월에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은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적이 없다고 응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만큼 포괄하게 되었다는 성과의 지표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종사상 지위와의 비교의 목적, 즉 상대적인 크기의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54)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금융부동산업 33% 같은 절대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수치는 다른 산업과 비교의 목적, 즉 상대적인 크기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업종뿐 아니라 본 절의 모든 수치는 이 점을 유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자 비율이 낮은 것은 1,00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의 비중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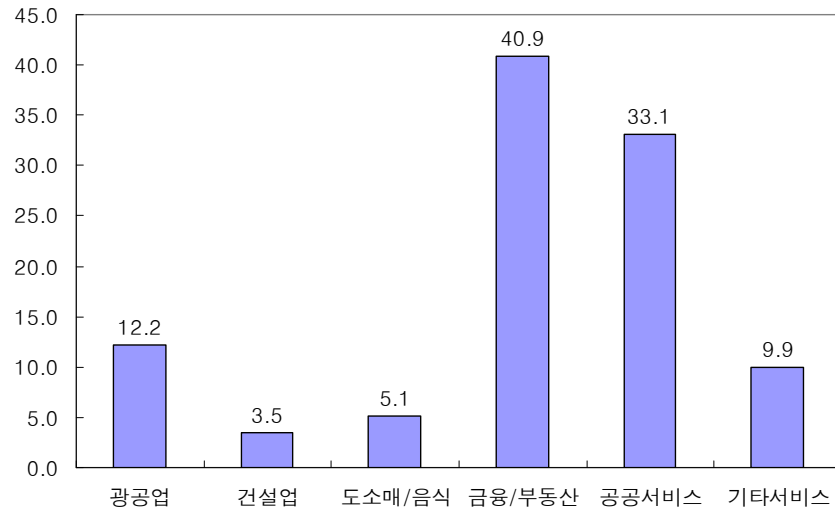
[그림 10-11]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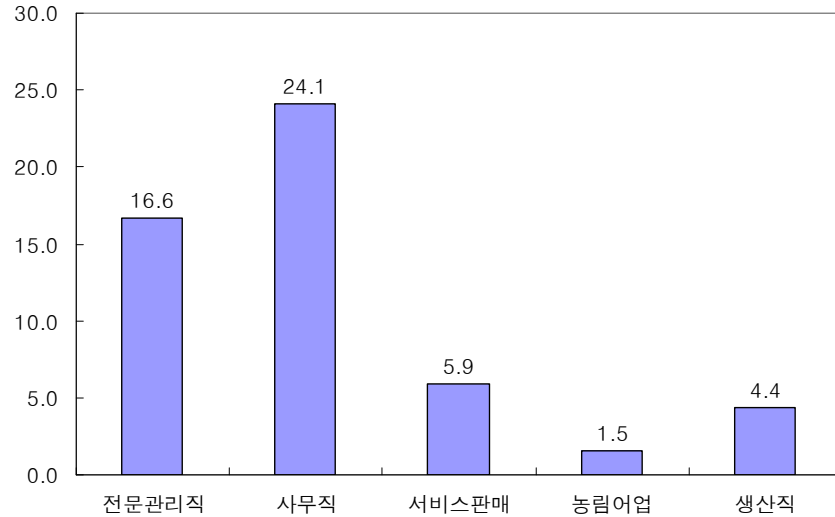
[그림 10-12] 업종별 정규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단위 : %)



[그림 10-13]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단위 : %)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관리직이 16.6%, 서비스직이 5.9%, 생산직이 4.4% 순이었다.<sup>55)</sup> 사무직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업종별 근로시간단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무직이 많이 분포해 있는 금융보험업이나 공공서비스업의 근로시간단축 수혜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생산직, 서비스직이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 비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수혜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체 규모별로 세분해 보아도 똑같이 나타난다. 즉, 단순히 1,000인 미만 사업체에 생산직, 서비스직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 10-13>에서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을 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각각 30.5%, 45.4%가 근로시간 단축이 된 반면, 서비스직, 생산직은 각각 17.9%, 22.3%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55)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사무직 24.1% 같은 절대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수치는 다른 직종과 비교의 목적, 즉 상대적인 크기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직종뿐 아니라 본 절의 모든 수치는 이 점을 유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표 10-13>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고 본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들의 비중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1,000인 미만	11.2	17.0	2.4	2.1
1,000인 이상	30.5	45.4	17.9	22.3

주: 1,000인 이상에는 정부기관 종사자 포함.

#### 다. 실근로시간에 미친 효과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석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앞둔 기업들은 먼저 월 2회 토요일무를 통해 42시간제와 같은 중간단계를 거쳐 40시간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이와 같은 단계적 이행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므로, 이런 기업들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고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2004년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화했다고 응답한 모든 사람들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sup>56)</sup>로, 2004년 현재 일요일만 쉬다고 응답한 사람들<sup>57)</sup>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고 분석을 할 것이다. 2004년 이전에 토요일 근무형태가 바뀐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분석이 복잡해지므로 이들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4년에 토요일 근무형태가 바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해 2003년과 2004년에 동일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sup>58)</sup>

<표 10-14>는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를 2003년과 2004년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로시간으로서,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당근로시간을 뜻하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근로시간에 초과

56) 부가조사 설문지 문 3-3을 이용해 통제하였다.

57) 부가조사 설문지 문 3, 문 3-1을 이용해 통제하였다.

58) 7차년도 조사에서 유형 1에 응답한 사람들이 분석 대상자이다. 연도간 연결하므로 어느 해의 가중치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소절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근로시간을 합쳐 계산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3년 50.0시간에서 2004년 46.1시간으로 3.9시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59)</sup> 반면,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3년 51.4시간, 2004년 51.6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처럼 각 연도 간에 비교한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토요일 근무가 변한 사람들의 경우도 경기순환과 같은 각 연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충격 때문에 같은 기간 중에 근로시간이 변화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sup>60)</sup>

<표 10-14> 토요일 근무 변화여부별 2003~2004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명)

		주당 평균근로시간	표본수
토요일 근무 변했다	2003년 (A)	50.0 (8.8)	235
	2004년 (B)	46.1 (8.4)	245
	근로시간 변화 (A-B)	-3.9시간	
	변화율	-7.8%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	2003년 (C)	51.4 (15.8)	1,848
	2004년 (D)	51.6 (15.1)	1,932
	근로시간 변화 (C-D)	0.2시간	
	변화율	0.4%	

주: 1) 토요일 근무 형태별 각 연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같다는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한 집단은 평균이 같다는 가설을 0.01% 수준에서 기각했고, 토요일에 쉬지 않는 집단은 기각하지 못했다.

2) ( )안은 표준오차.

59)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했다.

60) 1,000인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었던 2004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은 공공부문과 금융업을 제외하면 주로 수출대기업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변수가 없었을 경우 내수침체-수출호조가 특징인 2004년 경기순환의 특성상 토요일 근무 변했던 집단의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를 다시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가 1,000인 이상일 경우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한 사람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3년 50.7시간에서 46.1시간으로 줄어든 데에 비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요일에만 쉬고 있는 사람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3년이나 2004년이나 각각 52.2시간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1,000인 미만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했을 경우 2003년 50.1시간에서 2004년 47.4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일요일만 쉰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2003년 53.1시간, 2004년 53.4시간으로 유의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평균에서의 변화가 꼭 근로시간 전체 분포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포의 형태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료를 분위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10-16 참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사람에서 가장 긴 사람까지 한 줄로 세울 때, 그 중 첫 5%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이 5% 분위수이다. 이를테면, 100명 근로자가 있다면 5번째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의 근로시간이 5% 분위수에 해당한다.

<표 10-15> 토요일근무 변화여부별, 사업장 규모별 2003~2004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명)

	근로시간 변화여부	연도	주당 평균근로시간	근로시간 변화
1,000인 이상	토요일 근무형태 변했음	2003	50.7 (8.5)	-4.6시간
		2004	46.1 (10.6)	
	일요일만 쉰다	2003	52.5 (12.9)	-0.3시간
		2004	52.2 (13.8)	
1,000인 미만	토요일 근무형태 변했음	2003	50.1 (9.7)	-2.7시간
		2004	47.4 (8.0)	
	일요일만 쉰다	2003	53.1 (15.4)	0.3시간
		2004	53.4 (14.2)	

주: 결측치 제외.

<표 10-16>의 결론부터 말하면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03년 당시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2004년 근로시간이 더 많이 짧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회사에 나가면 4시간 만에 퇴근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 하던 사람들이 토요일에 아예 나가지 않게 됨으로써 더 많은 근로시간단축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2003년에도 40시간, 2004년에도 40시간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25% 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90% 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61.2시간에서 56시간으로, 95% 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7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무려 10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이 길었던 쪽에서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컸고, 원래 근로시간 40시간 정도였던 쪽에서는 별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3년이나 2004년에 전 분위수에 걸쳐 어떤 유의미한 근로시간의 변화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적용된 사람들에게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생산직, 판매직 등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앞으로

<표 10-16> 분위수별 주당근무시간 변화

(단위: 시간)

	토요일 근무 변했다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	
	2003	2004	2003	2004
5% 분위수	40	40	24	24
25% 분위수	44	40	44	44
50% 분위수	48	44	49	50
60% 분위수	50	45	54	54
75% 분위수	54	50	60	60
90% 분위수	61.2	56	72	72
95% 분위수	70	60	78	77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혜의 불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라. 생활에 미친 효과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을까? 노동패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 및 직장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질문하고 있는데, 다른 지표들에서는 그리 유의한 변화를 낳았다고 보기 힘들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토요일근무가 변한 사람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폭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일요일에만 쉬는 사람의 경우 미미하게 악화된 데에 반해 토요일근무가 변한 사람들의 경우 미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아직 사람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해 생활의 패턴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조사에 응답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시간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하게 시간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인프라가 확충되고 사람들도 변화된 생활패턴에 적응하게 될 경우보다 명확한 삶의 질 지표의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10-17> 근로시간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화

		토요일근무 변화했다	일요일만 쉰다
		평균값	평균값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2003	2.70 (0.88)	3.03 (0.81)
	2004	2.54 (0.79)	3.03 (0.86)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003	2.51 (0.55)	2.76 (0.63)
	2004	2.47 (0.67)	2.79 (0.68)

주: 근로시간 및 생활만족도는 수치가 줄어들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축된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지를 조사해 보았다. 부가조사 문 21의 “2002년 1월 이후 귀 사업장의 정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어난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를 조사하였고, 아직 단축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만약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늘어난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표 10-18>에 결과가 요약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종의 희망사항과 당면한 현실의 차이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11.0%였지만, 실제 단축된 사람의 경우엔 4.7%만이 추가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소득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가사일은

<표 10-18> 늘어난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와 보내고 싶은지

(단위: %)

	정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실제 한 일)	정규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하고 싶은 일)
추가적인 소득활동	4.7	11.0
가사일	11.1	7.2
자기개발	24.8	21.2
수면 등 휴식	17.5	14.1
TV 시청	2.3	0.8
여행/관광/나들이	17.5	23.1
운동/스포츠	12.2	14.8
오락/게임	0.8	0.6
사교/모임활동	5.4	3.6
사회활동/봉사활동	1.0	1.1
종교활동	1.5	1.6
기타	1.1	0.8
전 체	100.0	100.0

주: 부가조사 문 21-1과 문 21-2의 1순위 응답만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했음. 가중치 부여했음.

7.2%만이 1순위로 희망했지만 3.9%p 높은 11.1%의 사람들이 실제 가사 일을 하였다. 자기개발은 희망보다 많은 24.8%, 수면 등 휴식으로 보내는 사람도 희망보다 많은 17.5%였고, 여행이나 관광, 나들이는 희망(23.1%)에 비해 낮은 17.5%의 실현수준을 보였다.

◆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석상훈(한국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

제7차(200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06년 6월 26일 인쇄<br>2006년 6월 29일 발행   |
| • 발행인   | 최영기  |
|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br>1510-0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br>☎ 대표 (02) 782-0141 Fax (02) 786-1862 |
|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